

CDI 세미나 2014-19

한일공동심포지엄

글로벌경제위기의 시대, 자율적 지역경제의 가능성을 묻다

日韓共同シンポジウム

グローバル経済危機の時代、 自律的な地域経済の可能性を問う

일시 2014. 03. 21(금) 14:00
14:00 on Mar. 21, 2014

장소 공주대학교 산학연구관 1층강당
KONGJU National Univ. (No.16 Bldg. 1F)

주최 충남발전연구원, 일본지역경제학회,
공주대학교 동북아통상연구소, 한국지역정책학회

주관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후원 충청남도, 산업연구원

프로그램

| | |
|-------------|--|
| 13:30-14:00 | 등 록 |
| 14:00-14:30 | <p>개 회 식 ■ 사회 :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p> <p>□ 개회사 :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p> <p>□ 축 사 :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김도훈 산업연구원장</p> <p>□ 환영사 : 정환영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 학장 장재홍 한국지역정책학회장</p> |
| 14:30-15:50 | <p>주제발표</p> <p>□ 외래형 지역경제를 내발형 지역경제로 - 전환의 길에 관한 소고 - • 나카무라 코지로(中村剛治郎) (요코하마국립대학 명예교수, 류코쿠대학 교수, 일본지역경제학회 고문)</p> <p>□ 분공장경제로부터 자율적 지역산업진흥으로 - 이와테 모델의 재고 - • 오다 히로노부(小田宏信) (세이케이대학 교수, 일본지역경제학회 국제이사)</p> <p>□ 한국 분공장경제의 실태와 자립·선순환 방안 - 충남을 대상으로 - • 박 경(목원대학교 교수, 한국지역정책학회 부회장) • 신동호(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p> |
| 15:50-16:00 | 중간휴식 |
| 16:00-17:00 | <p>토 론</p> <p>□ 좌장 : 박진도 충남대학교 교수</p> <p>□ 토론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 • 김재근 대전일보 세종시취재본부장 • 박승환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기획조사부장 • 송하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정준호 강원대학교 교수 • 한치흠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 • 홍성효 공주대학교 교수 (가나다순) |
| 17:00 | 폐 회 |

※ 본 행사는 한·일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PROGRAM

| | |
|-------------|--|
| 13:30-14:00 | 登 録 |
| 14:00-14:20 | <p>開会式 ■ 司会：ジョン・チョンカン 研究室長</p> <p><input type="checkbox"/> 開会辞：カン・ヒョンス 忠南発展研究院長</p> <p><input type="checkbox"/> 祝 辞：アン・ヒジョン 忠清南道知事 キム・トフン 産業研究院長</p> <p><input type="checkbox"/> 歓迎辞：チョン・ファニョン 公州大学人文社会科学大学長 チャン・ジェホン 韓国地域政策学会長</p> |
| 14:20-15:50 | <p>主題発表</p> <p><input type="checkbox"/> 外発的地域経済の内発的地域経済への転化の道を考え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村剛治郎 (横浜国立大学名誉教授, 龍谷大学教授, 日本地域経済学会顧問) <p><input type="checkbox"/> 分工場経済から自律的地域産業振興へ</p> <p style="text-align: center;">- 岩手モデルを再考する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小田宏信 (成蹊大学教授, 日本地域経済学会国際理事) <p><input type="checkbox"/> 韓国における分工場経済の実体や自立・好循環の方案</p> <p style="text-align: center;">- 忠南を対象として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パク・キョン (牧園大学教授, 韓国地域政策学会副会長) ● シン・トンホ (忠南発展研究院研究委員) |
| 15:50-16:05 | 休 憩 |
| 16:05-17:00 | <p>ディスカッション</p> <p><input type="checkbox"/> 座長：パク・チンド 忠南大学教授</p> <p><input type="checkbox"/> パネラ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カン・ヒョンス 忠南発展研究院 院長 ● キム・チェグン 大田日報世宗市取材本 部長 ● パク・スンファン 韓国銀行大田忠南本部 企画調査部長 ● ソン・ハユル 産業研究院 研究委員 ● チョン・チュノ 江原大学 教授 ● ハン・チフム 忠清南道 経済政策課長 ● ホン・ソンヒョ 公州大学 教授 |
| 17:00 | 閉 会 |

※ 同シンポジウムは日本語－韓国語の同時通訳で進行します。

발표자 소개

■ 나카무라 코지로(中村剛治郎)



류코쿠대학 정책학부 교수, 요코하마국립대학 명예교수, 일본지역경제학회 고문(전 회장), 상학박사.

카나자와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요코하마국립대학대학원 국제사회과학과·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2012년 4월부터 현직. 전공분야는 지역경제학.

저서로, 『지역정치경제학』 『기본사례로 배우는 지역경제학(편저)』 『지역의 힘을 일본의 활력으로—신시대의 지역경제학(편저)』 『현대경제정책 4판(공저)』

■ 오다 히로노부 (小田宏信)



세이케이대학 경제학부 교수, 일본지역경제학회 국제이사, 일본경제지리학회 상임 간사 등. 이학박사.

토요타단기대학 전임강사, 츠크바대학 전임강사 등을 거쳐 2006년 4월부터 현직. 전공분야는 경제지리학, 지역경제학.

저서로 『현대일본의 기계공업집적』 『변동하는 필리핀(공저)』 『일본경제지리독본(공·편저)』 『경제지리학 키컨셉트(공역)』 『공간의 경제지리(분담집필)』

■ 박 경 (Park Kyoung)



서울대학교 졸업, 충남대학교 경제학 박사 취득. 1988~현재 : 목원대 경제학과 교수. 2009.8~2011. 2 : 목원대 사회과학대학장 역임

동경대학 경제학부 객원연구원(1994-5), 호주 멜버른 대학 인류·지리·환경학부 객원교수(Honorary fellow, 2003-2005) 역임

충남도 행복마을만들기 추진단 단장(2011-현재), 충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2011-현재), 충남개발공사 이사회 의장(2012-현재), 산업부 지역산업진흥계획 지역산업진흥 정책자문단(2010), 산업부 광역미래선도산업 중앙평가위원장(2012),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200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2003-4),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책 평가 및 복합생활공간 위원(2006-7),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표(2005-7) 등.

현재 한국지역정책학회 부회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장, 재단법인 지역재단 이사, 한국사회경제학회 감사 등을 역임

저서 및 논문 : 한국 지역발전의 이론과 실제(2013), 충남 지역경제선순환 활성화 방안(2013),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공저, 2011), 유럽의 지역발전정책(공저, 2003), 농촌개발정책의 재구성(공저, 2005), 우리나라 지역 간 소득의 역외 유출 현상- 충남을 중심으로(2011) 등이 있음. 지난 20여년 간 한국의 지역정책, 농촌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학자이다. 특히 최근에 한국의 지방과 수도권간의 소득유출 현황을 구체적으로 추계하여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 신동호 (Shin Dong Ho)



현.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전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서울 사이버대학 겸임교수, 한미 FTA 대책특별위원회 실무위원, 대전충남 통합 지방고용전문위원, 충남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 역임
전공분야는 계량경제학.

참여 연구과제로, 『충남지역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 『중소기업지원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충남 녹색성장 추진전략 및 5개년 계획』 등 다수.

CONTENTS

| | | |
|---|--|----|
| 1 | <p>“외래형 지역경제를 내발형 지역경제로 - 전환의 길에 관한 소고” “外発的地域経済の内発的地域経済への転化の道を考える”</p> <p>나카무라 코지로 中村剛治郎</p> | 7 |
| 2 | <p>“분공장경제로부터 자율적 지역산업진흥으로 - 이와테 모델의 재고” “分工場経済から自律的地域産業振興へ” - 岩手モデルを再考する</p> <p>오다 히로노부 小田宏信</p> | 41 |
| 3 | <p>“한국 분공장경제의 실태와 자립·선순환 방안 - 충남을 대상으로” “韓国における分工場経済の実体や自立・好循環の方案 - 忠南を対象として”</p> <p>박 경·신 동 호 Park Kyoung · Shin Dong Ho</p> | 61 |

01

[글로벌경제위기의 시대, 자율적 지역경제의 가능성을 묻다]

“외래형 지역경제를 내발형 지역경제로 - 전환의 길에 관한 소고”

“外発的地域経済の内発的地域経済への転化の道を考える”



나카무라 코지로(中村剛治郎)

요코하마국립대학 명예교수
横浜国立大学名誉教授

글로벌경제 · 지식경제화 시대의 지역경제

- 외래형 지역경제를 내발형 지역경제로, 그 전환의 길에 대한 소고 -

나카무라 코지로(中村剛治郎)

(요코하마국립대학 명예교수, 류코쿠대학 정책학부 교수,

일본지역경제학회 고문 · 전회장)

먼저, 충남발전연구원 · 일본지역경제학회 · 한국지역정책학회, 공주대학교 동북아통상연구소 공동주최 “한일공동심포지엄 글로벌경제위기의 시대, 자율적 지역경제의 가능성을 묻다”에 강연자로 초대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경제는 도쿄대도시권 일극집중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경제와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서울수도권의 일극집중을 구조적 특징으로 해왔다. 한국정부는 서울수도권 일극집중구조를 전제로 한 과밀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에 인접한 인천, 경기도 등에 사무소(지점 · 지사)를 확산했고, 나아가, 서울의 주변부에 위치한 충청남도에도 사업소를 분산시켜 왔다. 결과적으로, 충남에는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서울에 본사를 둔 삼성 (디스플레이 · 반도체), 현대 (자동차부품) 등 대기업의 분공장이 진출해 충남의 지역경제 -특히, 북부-는 농촌지역에서 한국경제를 견인하는 선도산업이 입지하는 성장지역경제로 전환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다수 집적한 지역한 대전광역시도 일본의 츠크바(筑波) 연구학원도시와 비슷하다. 한편, 전기 ·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의 대기업에 의한 대공장 집적지역이라는 의미에서는 케이힌(京浜)지역 (특히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 · 요코하마시)와 유사하다. 단, 케이힌 지역에서는, 대기업 집적이 공급업체인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점, 케이힌 지역은 도쿄의 인접지역이라는 점에서는 경기도가 케이힌 지역과 비슷하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서울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고, 농촌지역에서 성장산업지역으로 급격하게 변모한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충남의 지역경제는 대도시로부터 외부컨트롤을 받는, 일본의 수도권 중에서 찾으면, 칸토(關東)북부지역 또는 지방권에 자주 있는 분공장형 지역경제로 보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여하튼, 세계금융위기 이후의 글로벌경제 하에서 다국적화한 한국의 대기업은 국내입지보다 성장하는 해외시장 입지를 축으로, 생산배치의 새로운 재편을 진행하고 있다. 탈(脫)디플레이션을 내건 일본의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하에서 일본의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수출형 제조업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성장을 견인한 액정TV와 스마트폰은, 이제는 고가품에서 저가격 · 보급품 (Commodity)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성장하는 신흥국 시장으로 생산이전은 계속될 것이다. 소수의 수출형 대기업의 분공장에 의존하는 충남 지역경제의 성쇠는, 서울에서 정해지는 글로벌기업 전략 또는 입지전략에 휘둘러, 앞으로 점점 불안정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대기업공장 중에서도, 모공장 (母工場)인 경우는 R&D(R&D) 기능을 부설하고 신제품개발과 결합하여, 시제품 제작기능을 지원하는 전문 가공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집적을 유도하지만, 분공장인 경우 지역에 뿌리를 둔 경쟁력의 원천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공장의 축소나 철수 등, 입지이동이 일어나기 쉽다. 지역에 집적한 다양한 중소기업에 부품가공 등의 발주가 적으면 입지기업의 생산이 아무리 커도, 경제활동의 지역 내 순

환은 의외로 작다.

대기업의 분공장은 생산한 소득 중 법인소득부분을 본사가 흡수하므로, 충남으로부터 서울로의 소득 유출이 일어난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다수의 본사기능이 지방에 있는 본사형 지역경제의 경우에는 의사결정기능과 마케팅기능, R&D기능 등과 결합하는, 다양한 기업용 전문서비스업, 금융기능 등 본사관련 복합기능의 집적이 생겨서 다양한 지적(知的) 직종의 고용이 창출된다. 또한, 고객접대 관련 등 다양한 개인서비스업이 발전하여 도시의 활기가 생긴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상업·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의 지역내 순환이 확대·심화한다.

그런데, 분공장만 본사기능 및 관련복합기능에서 분리되어 위치하는 지역경제 (분공장경제)는 생산기능만 특화하고 제3차산업의 발달이 약하기 때문에, 도시의 활기가 제한어 ‘재미있고 매력적인’ 도시만들기가 진행되기 힘들어진다. 실제로 충남의 산업구성비율을 보면 전국구성비에 비해 1차산업과 2차산업의 구성비는 높지만, 3차산업은 상당히 낮다. 게다가 충남의 미래전망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2차산업의 비대화, 3차산업의 상대적 감소가 전망되고 있어, 2020년에는 1차 산업 3.8%, 2차산업 61.6%, 3차산업 34.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1] 충남과 한국 전체의 산업구조비율

(생산액기준, 2011년도 현재)

| | |
|------|---------------------|
| 1차산업 | 5.0% (전국평균 2.7%) |
| 2차산업 | 58.3% (전국평균 32.4%) |
| 3차산업 | 36.7% (전국평균: 64.9%) |

도시의 본질은 ‘공업생산기능’보다 ‘공업화’가 만들어내는 3차산업의 발달, 경제의 지역내 순환이 가져오는 높은 시민소득, 의사결정·관련기능 통합, 다양한 인재의 집적·이질적 인재간의 교류, 소비활동·여가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의 활기, 자유시간의 충실, 창의성, 지식·문화경제의 발달에 있다. 분공장경제 지역은 공업화시대에는 생산공간으로 성장하지만, 도시의 본질을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가 하는 지역경제의 질(Quality)에서 보면,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선진국경제는 이제 공업화 단계의 경제성장 시대를 끝내고, 탈(脫)공업화 단계의 성숙경제 시대, 지식·문화경제로 이행하고 있다. 이행에 따른 과도기적 갈등 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좋다. 한국경제가 향후 또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과제도 이행을 둘러싼 비슷한 문제일 것이다. 지식·문화경제를 선도하는 것은 다양한 지적·문화적 창조인재의 집적과 상호자극의 교류이다. 지역경제에 있어, 지적·문화적 창조인력이 모여 교류하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고 있는지, 그것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과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부터, 충남의 지역경제에는, 정부에 의한 수도·서울의 과밀대책, 이와 일체화한, 서울소재 본사를 갖는 대기업의 분공장 진출을 계기로 ‘외래형(外發形) 성장’의 길로부터, 지역내부에서 의사결정기능을 비롯한 본사기능관련 복합기능과 창조성, 다양한 인재집적과 교류, 도시의 매력을 키우는 ‘내발적(內發的) 발전’의 길로 어떻게 전환할까 하는 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제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일본과 한국은 국가의 역할이 크고, 대기업 중심의 사회라는 점에서 아시아형 경제모델로 유사한 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 기능 및 대기업의 본사기능이 결합되고 수도권 일극집중이 생겨, 다양한 지역 경제의 내발적 발전이 약하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필자가 질적·

양적 양면으로 실증적으로 밝혔듯이, 가나자와(金澤)처럼 내발적 발전을 해온 지방도시도 존재한다.

필자가 공식화한 가나자와를 사례로 하는 지방도시의 내발적발전 모델을 아주 간단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① 지역경제의 쇠퇴와 위기의 시대에 등장한 리더(혁신가)와 추종자의 역할
- ② 지역의 조건에 맞는 창의성과 지역 핵심산업의 전략적 진흥
- ③ 특정산업의 발전에서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이끄는 발전경로에서 지역경제의 안정과 새로운 산업발전의 가능성을 펼치는 지역내 산업연관적 발전
- ④ 지역기업 주체의 독자적 산지기구(產地機構)의 조직화, 본사기능과 금융기능 등 경제 상부기능의 축적과 강화를 통한 자율적 지역경제 형성
- ⑤ 경제의 지역내 순환으로 지역경제 전체로 퍼지는 느린 성장의 성과와 자연적·역사적 환경, 문화 도시로서의 지역매력 보전과 조화, 양적성장보다 질적발전, 도시의 활기, 재미의 발전,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중시 등등

더불어, 필자가 밝힌 것은 외래형 성장과 내발적 발전과의 정태적 이분법에 근거한 지역경제유형의 차이가 아닌, 외래형 성장의 압력을 기반으로, 그것에 대항하고 또는 잘 대응하여 자신의 내발적 발전의 길을 개척해 온 동태적 진화과정이며, 지역의 모든 행위자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지역적·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에 있다¹⁾.

이에 대해, 종래의 통설적인 내발적 발전론에서는 외래적 성장의 경우, 지역경제에 자립이 없고, 범인소득의 유출과 경제의 지역순환 불량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경제 자립과 경제의 지역내 순환 심화를 실현하는 내발적 발전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정태적 이분법에 기초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이념론에 머무는 약점이 있었다. 일본을 포함한 비서구의 후발 자본주의 국가는 세계자본주의의 중심인 서구에서 발생하는 외압 하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모색하므로 외래형 성장을 기조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역경제들은 내발적 발전의 길은 어려워니, 경제성장을 바란다면 어쩔 수 없이 외래형 성장의 길을 택한 것이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양적성장은 달성했지만, 지역경제의 질적 문제에 직면하였고, 어느 지역경제도 구조적 개혁과제에 직면하기에 이른 것이 현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외래형 성장의 지역경제를 둘러싼 정책적 문제는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외래형 성장과 결별하고 내발적 발전의 길을 시도할 수 있다면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이며, 다른 하나는 지금까지 외래형 성장의 길의 연장선에서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의 계기를 찾아내는 변증법적 발전의 길 모색이다. 후자는 정태적·이념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모순적인과제 설정으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일도, 특히 혁신과 같은 경우가 그렇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모순을 해결하고 통일함으로써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발전이 태어나는 것이다. 모순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대립하는 것들 사이에 통일을 가져올 ‘매개항’을 어떻게 설정해서 기능하게 할 것인가이다. 즉, 기존의 제도적 구조를 거부하는 단순한 발상이 아닌, 일단은 수용하면서 그것을 넘고자 하는 점진적 발전전략으로서의 ‘제도적 확장’이라는 개혁노선, 이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매개하여 제도적 확장을 기조로 하는 ‘경로수정’ (외래형 성장에서 내발적 발전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주체 중심의 발전론적이고 동태적인 ‘비교지역제도적’ 어프로치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그런 성공사례가 있기는 할까. 이하에서는 먼저 일본의 외래형 성장의 지역경제로 수도권(케

1) 필자의 카나자와 연구내용은, 나카무라 코지로 [2004] 『지역정치경제학』 제4장 제5장에 수록되어 있음.

이런 지역, 칸토 북부, 타마지역)을 예로 들고, 이어서 외래형 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분공장경제에서 내발적 지식경제로 전환에 성공한 2사례 - 미국 북서부에 위치한 포틀랜드(Portland) 지역과 핀란드의 국경지역에 있는 오울루(Oulu) 지역- 의 발전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의 자립적 발전과 경제의 지역내 순환을 둘러싼 지역경제의 기초지식을 정리하고, 충남지역의 과제에 입각하여 검토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2. 일본 수도권 지역경제의 현재와 과제

일본 최대의 공업지대인 케이힌 공업지대, 특히 그 중심인 가와사키, 요코하마 등의 카나가와현(縣: 한국의 도에 해당하는 광역자치체) 지역의 경제는 도쿄에 본사기능을 두는 제철소, 화학공업, 전기·전자, 자동차산업, 일반기계제조 등 중화학공업 대기업의 공장입지·집적을 통해 발전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경제의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 중심에서 첨단 산업 중심으로, 나아가, 탈(脫)공업화 단계로 이행하면서, 제조업 공장은 케이힌 지역에서 지방권으로, 심지어 해외로 유출해갔다. 케이힌 지역 경제는 점차 생산기능을 축소시키면서, 민간기업의 R&D 기능이 집적된 지역경제로 변모해왔다²⁾.

카나가와현에 집적하는 민간기업의 R&D 거점은 예를 들어, 도시바, 소니, NEC, 후지쯔 외 다수의 유력 전자기업의 연구소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의 기업에게 핵심R&D 거점이다. 각 기업의 연구테마는 관련 전자기술 분야이며, 기업 횡단적·지역적인 공동연구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다. 카나가와현은 2004년 이후 산업집적촉진이라는 구호 아래, 거액의 진출보조금을 준비하여 대기업의 R&D 거점을 열심히 유치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진출기업과 현지기업이 교류하는 장(場)을 만드는 등, 산업 클러스터로의 발전을 기대했다. 그러나 많은 일본기업의 경쟁전략은 기업마다 닫힌(Closed) 수직통합경영 또는 R&D-생산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업은 지역에 집적하는 다른 기업과의 기술교류를 기대하고 진출한 것이 아니므로 보조금을 준 카나가와현 주최의 행사에 참여하는 협력은 하되, 지역의 기업간 교류를 경쟁력강화의 중요한 원천으로 자리매김 시키지 않았다.

알려진 대로,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는 4요소(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 공급산업, 기업전략·구조·라이벌 간 경쟁)를 지적하고, 어떤 특정분야의 기업군(郡)과 관련 제기관이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집적해 있는 상태를 바탕으로 이노베이션을 자극하는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을 논했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 최고의 첨단 산업지역인 케이힌 지역은 그야말로 산업클러스터 지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집적에는 기업횡단적인 지역적 협력관계를 낳는 혁신적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간 관계가 오직 경쟁관계만 있고 협력관계는 없어, 기업마다 혁신 노력에 매달리게 되어 클러스터적 경쟁우위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케이힌 지역은 바로 후자의 사례이다. 그 배후에 있는 것은 일본의 제도적 구조이다. 일본의 국민적·제도적 구조를 배경으로, 일본의 기업들은 연구직의 장기고용과 수직통합경영을 제도적 특징으로 해왔다. 진출한 R&D거점, 도쿄본사가 컨트롤하고, 일본기업의 연구자·기술자는 종신고용제도 하에서 노하우 및 기술정보의 유출을 금지하는 엄격한 보안의무가 부과된다. 실리콘밸리의 연구자·기술자 처럼 기업횡단적으로 경쟁사의 연구자·기술자와 자유롭게 연구교류·정보교류를 하고 서로 절차탁마 하면서

2) 필자의 케이힌 지역 연구 내용은, 나카무라 코지로 편저 [2008] “본 케이스로 배우는 지역경제” 제2장 유비 각, 나카무라 코지로 [2013] 역 문제와 지역 문제를 둘러싼 연구 과제 - 지역정치경제학적 어프로치의 발자취를 통해 “『경제지리학 연보』 58권 4호, 나카무라 코지로 [2008]” 이한 임혜부 재생을 위해 『센슈 대학 도시정책연구센터 연구연보』 제4호 참조

빈번한 전직이 기업의 노하우를 지역의 노하우화(化) 해가는 지식의 지역적 전파를 활발하게 하는 등의 클러스터적인 발전을 낳는 지역적 제도환경은 케이힌 지역에는 없다. 비교제도적 관점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제도적 확장에 의한 경로수정의 길을 여는 방침에 기초하여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지 않으면 클러스터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은 어렵다. 산업집적이 산업클러스터로 연결되지 않는 제도적 구조를 가진 국가와 지역에서 제도적 제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준비할지, 구조개혁인가 혹은 제도확장인가, 경로돌파인가 혹은 경로수정인가, 산업클러스터 정책론에는 비교제도적 관점에 중심을 둔 과제설정 및 제도적 장치대책이 필수적이다.

덧붙여, 카나가와현과 가와사키·요코하마 지역산업정책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기업유치시책 뿐, 양적확대의 관점은 있어도 대도시경제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지역경제순환구조와 지역내 산업연관발전, 지역경제의 자립과 내발적 발전이라는 지역경제의 질을 중시하는 관점을 누락시켜왔다. 일본의 제도적 구조 하에서 어떠한 지역적 제도를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질적·구조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은 없었다. 다만, 일극집중되는 도쿄에서 가까운 타율적 혜택을 누리 고 산업입지의 수용처가 되고자 하는 것 뿐이었다. 지금도 카와사키와 카나가와현은 특구를 마련하고 기업유치에 분주하다.

동시에 케이힌 지역에 새로운 움직임이 태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케이힌 지역에는 진출대기업의 R&D기능(중앙연구소)와 중소기업이 다수 입지·집적하고 있다. 이전에는 폐쇄적인 일본기업의 수직통합경영으로, 지역-기업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없었지만, 최근 새로운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카나가와현과 카와사키는 지식경제화시대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R&D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케이힌지역의 진출대기업도 갖고있는 지적재산권·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방식을 구상해, 2007년도부터 「카와사키 지적재산권 교류회」를 개최하여 왔다. 많은 대기업은 교류회에 참가하는 해도 자사 특허기술의 우위성을 일반에 소개할 뿐, 이 구상을 기업전략으로 생각하고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후지쯔(IT서비스를 축으로 하는 유력전자회사)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라이선스 비용과 바꿔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서비스를 새로운 사업으로서 확장하게 되었다. 「카와사키 지적재산권 교류회」에서 다른 대기업의 기술이전은 없지만, 후지쯔와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2013년 3월현재, 14건이 계약에 성공했다. 이를 기반으로 후지쯔는 이런 움직임을 사이타마현 내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넓혀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후지쯔가 전자분야의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 제조사로 전환하려는 기업전략의 변화가 있다. 신흥국 기업의 추격(Catch-up)이 예상되는 경쟁환경에서 선진국의 ICT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미국의 IBM이 먼저 진행했듯이, ICT 장비제조에서 ICT 서비스기업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의 유력한 방법이고 흐름이다. 이 전환은 기업내 하드웨어 부문의 구조조정 및 특허기술 사장(死藏)으로 이어진다. 자사의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특허기술을 많은 비경합 중소기업체에 라이선스 비용을 받고 이전하면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비용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고 신규 중점기술 개발 투자자금으로 돌릴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체에게는 저렴한 라이선스비용으로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면, R&D력의 강화, 신제품개발의 기회이다. 무엇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기술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특허기술이 바로 중소기업체에서 제품개발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후지쯔는 해당기술의 개발자를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중소기업에 의한 특허기술의 수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강화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역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경제가 외래형 성장에서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하는

길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후지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일본의 대기업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대기업에게는, 대기업으로서 사업화하기에는 시장규모가 작다고 판단해 사장시키는 대량의 특허기술이 있다. 이 특허기술을 매각하면 나중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저촉되는 기술이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지금까지 대량의 특허기술이 사업화되지 않은 채 기업 내에 봉인되어 있었다. 그러나 특허권을 보유하면서 비경합 중소기업 조업의 신제품 개발에 협력한다고 하면, 이 걱정은 없어진다. 또한 대기업 기술자의 협력하에 특허기술을 사용한 중소기업이 폭발적 히트상품개발에 성공한다면, 대기업과 기술뿐 아니라 영업적으로도 협력관계 하에 사업을 전개하는 새로운 Win-Win 관계구축을 통한 기업발전의 길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경쟁의 격화는 지금까지 일본의 제도적 구조 하에서 기업내에, 단힌 일본기업의 행동양식에 변화를 강요하여 사업재구축의 일환으로 기업외부의 여러 기업 또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새로운 연계, 제휴를 모색하는 움직임을 강화한다. 이 움직임을 지역에 뿌리내린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기회로 하기 위해, 지역의 여러 기업, 연구소, 행정기관이 협력하여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최근 요코하마시의 경제정책을 기획하는 부서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글로벌경제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지역에 뿌리내린 요코하마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논의이다. 요코하마시 경제국 정책조정부 경제기획과는 외래형 성장의 한계를 바라보고, 시내의 각 산업간 거래의 순환구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요코하마의 산업구조 특색을 외래형성장장과 내발적발전의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검토하여, 요코하마 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위탁조사를 실시했다³⁾

하지만 그 내용은 정량적 분석에서 카나자와론(論)의 지역산업연관분석 기법을 도입해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결론 부분이 아직도 추상적이고, 내발적 발전을 위해서는 유럽발(發) 지역혁신시스템(RIS)의 개념이 힌트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머물러, 외래형성장장을 통해 요코하마 경제에 축적된 내 발적 발전의 여러 자원을 바탕으로, 전환의 매개항으로서의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고 ‘제도확장’에서 ‘경로수정’을 도모하는 실천적인 정책제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과 지역대학과 산학협력의 포괄적 협정에 따라, 대학과 지역의 네트워크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케이힌 지역의 닛산자동차 와 요코하마국립대학, 칸토북부지역의 후지중공업 군마제작소와 군마대학, 토치기현 기업군과 우츠노미야대학 등 현내대학과 산학협력협정등이 일레이다.

진출대기업에서 지역기업에 발주를 촉진하는 지역연계의 노력은 특히 칸토서부 지역(토쿄도 타마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칸토북부지역의 군마대학 및 생명 공학기업과의 제휴 등, 대학과 중소기업의 지역연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새로운 분야진출 지원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격적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진출대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린 기업의 변화, 지역경제의 내발적발전의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외래형 성장에서 내발적 지적경제로의 발전—미국 포틀랜드 대도시권 연구의 지역적 제도 어프로치

미국 북서부 오레곤주(州) 포틀랜드 대도시권은 1960년대까지 숲과 농업을 배후지로 둔 목재·목제품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항만도시였다. 오레곤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목재 관련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3) 요코하마경제국·(주) 요코하마은행 종합연구소 [2012] 『‘요코하마 경제의 내발적발전 실태 기초조사 보고서』 요코하마시 경제국 경제기획과.

일본의 하이테크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성장을 회복시키려는 외래형 산업정책을 전개했다. 인텔이나 HP같은 실리콘밸리 기업 뿐 아니라 후지쯔, NEC, 샤프, 신에츠반도체, 엡손 등등, 일본의 유력 하이테크기업 대부분은 포틀랜드로 진출했다. 삼림이 풍부한 지역으로의 하이테크산업 집적은 “실리콘밸리”를 모방한 “실리콘 포레스트”라는 이름을 낳았다. 목재관련 산업, 농업, 전력산업 등 지역자본을 주체로 하는 지역경제에서, 외래형 성장의 분 공장경제로 이행한 것이다. 그 후, 일본의 하이테크기업은 글로벌 경쟁 하에서 공장의 축소 및 철수를 거듭하며 비중을 저하시켰지만, 반면, 인텔은 15,000명 규모 까지 직원을 늘려, 인텔을 위한 투자감세도입이 상징하는 것처럼, 포틀랜드는 인텔의 기업마을(企業城下町: 특정기업의 사무소 및 공장, 하청회사들이 1개 지자체의 산업 대부분을 점하는 형태)적인 성격을 강화해 갔다⁴⁾.

그런데 2004년 데이터에 의하면, 하이테크기업의 집적은 1,200개 이상까지 도달했다. 유력한 이공계 연구형 대학도 없고 일본의 진출공장에서부터 스핀오프(Spin-off)도 없었다. 인텔과, 한때 급성장한 테크트로닉스라는 지역기업에서 스핀오프 및 스핀아웃(이하, 모두 스핀오프로 통일)을 통한 기업이 속출했고, 현지의 많은 하이테크 스타트업 기업이 활약하는 지역이 되었다. 기업유치, 분공장 경제화, 기업마을화라는 외래형 성장의 노선을 걷던 지역경제가 내발적발전의 지식경제로 이행한 것이다. 그 변화의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지식노동과 이 분야 종사자들의 가치관에 관한 관점을 도입하여 밝혀내는 것, 그것이 필자의 포틀랜드 연구였다.

첫째, 지식경제에서 지식노동의 의의와 스핀오프 창업가능성의 확대이다. 하이테크 산업이라 해도, 공장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기업의 특정기술을 향상시켜 생산성을 올리는 노동이 중심이다. 공장노동에서 창업에 이르는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불안정하고 고된 하청적 업무에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수한 공장노동자가 기업을 뛰쳐나오는 비율은 높지 않다. 또한 일본은 전직을 선호하지 않는 폐쇄적 노동시장이기 때문에, 지식노동 종사자도 회사에 매몰되어 기업의 특정지식·기술을 연마하는 데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를 나가 창업해도 적용이 가능할 만큼 일반성을 가진 전문적 지식·기술의 축적은 약해져, 그만큼 스핀오프 기업의 경우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서도 그런 유형의 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개인이 자기투자를 통해 체계적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중시해, 일반성을 갖는 전문적 지식·기술을 향상시켜 이를 수단으로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얻고자 한다. 지식노동자는 종신고용제도와 사회적 규제 등으로 업무상 지위와 소득, 조건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쉽게 해고(Lay-off)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자기의 지위와 조건, 소득 향상은 자신의 업무능력을 통해 이직함으로써 지켜야 하는 제도환경에 있다. 지식노동자는 특정 기업에서만 통용되는 기업특정적 지식·기술 향상에 대한 관심은 약하다. 자기투자를 해서라도, 또는 기업의 틀을 넘어선 자유로운 인적 교류를 통해, 일반적인 지식·기술 축적에 힘을 쏟고, 더 나은 직장이나 지위,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 수시로 이직한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열린 제도환경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현대의 지식노동자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구분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어 IT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등은 회사사양의 기업특정적 지식·기술을 중시하고 있는 것 같고, 동시에 다른 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성을 가진 전문적 지식·기술의 축적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기업특정적 지식축적은 회사부담, 일반적 지식축적은 노동자 개인부담이라는 인적 자본론의 전통적

4) 필자의 포틀랜드 연구내용은 위 “지역정치경제학 ‘제9장’ 지역문제와 지역문제를 둘러싼 연구 과제 - 지역 정치경제학적 어프로치의 발자취를 통해”참조.

인 구분은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은 기업이 부담하더라도 전문적 지식·기술축적을 지식노동자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고, 기업부담으로 기업의 업무와 연수를 통해 기업 특정적 지식·기술의 향상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기업외부에서도 통용하는, 이직과 스핀오프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성 있는 전문지식·기술의 축적기회 또는 프로세스를 경험시키는, 또는, 그런 새로운 가능성이 퍼지는 것이 지식경제에서 지식노동의 특징일 것이다. R&D형 하이테크산업이 집적한 포틀랜드의 지식노동 시장에서는 스핀오프 기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서의, 일반성을 가진 전문지식·기술의 축적이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하이테크기업의 지식노동에서는, 이직이나 스핀오프 창업을 단행하게 하는 사정이 있다. 하이테크 기업은 호황·불황의 파고가 빈번히 찾아오고, 게다가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심하므로 핵심부서에 있던 지식노동자들이 비핵심부문으로 내몰리는 경향이 있다. 익혀 온 지식과 다른 분야의 지식을 기초부터 다시 배워 기존과는 다른 일로 전환시키기를 재촉받는 경우도 있다. 이때 자신이 강점을 갖는 지식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노동자는 자신이 일반성을 갖는 전문 지식·기술을 무기로 이직이나 창업을 생각하게 된다.

셋째, 포틀랜드의 이직시장 제약과 지식노동자가 계속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매력적인 마을만들기의 성공이라는 지역적 사정이다. 포틀랜드에는, 다양한 하이테크 산업이 대규모로 집적한 실리콘밸리만큼 이직가능한 노동시장은 크지 않다. 이직의 길을 찾으려고 하면 다른 하이테크도시로 이주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다. 한편, 이공계의 연구형 대학이 없는 포틀랜드의 하이테크지식노동자에게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포틀랜드의 삶에 매료된 사람이 많다. 야외스포츠를 좋아하는 지적인 사람이라면 너무 좋아할, 언제든지 스키를 탈 수 있는 산,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웅장한 계곡, 맛있는 고품질의 피노 누와르 와인과 지역맥주. 도시성장 관리정책을 통해 주변에는 농지와 자연을 보전하고, 중심부에는 LRT나 전차로 느긋하게 상업·서비스업과 다양한 문화·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창조산업의 집적도 많다. 이 모두, 창의적 업무를 하는 일종의 지식노동 종사자들이 좋아할 생활환경이다. 포틀랜드 생활이 좋다는 사람들, 살기 편안함 등, 시민들 사이에서는 포틀랜드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다. 배후에서 이를 보장해온 것은, 생활의 질을 지켜온 엄격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메트로(대도시권 지자체)라는 지역적 제도의 역할이었다.

이렇듯 이직에 제약이 있는데 계속 살고 싶어지면, 축적된 일반성있는 전문지식·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환경, 부르면 응할 동료도 있으므로 가능하다는 지역적·제도적 환경이, 포틀랜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포틀랜드경제는 스핀오프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현지의 하이테크 스타트업 기업이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르러, 내발적 지식경제로 전환한 것이다.

상기의 세가지 요인은, 여기에서는 포틀랜드 사정에 입각해 말하고 있지만, 사실 지식노동의 기업특정 지식·기술에 머물지 않는 일반성을 갖는 전문지식·기술의 의의 증대, 하이테크산업 또는 지식집약적 산업에서 특징적인 업무변동이 이직이나 창업을 단행하게 할 가능성의 확대, 지식노동자일수록 자연과 문화가 풍부하고,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제공하는 살기 좋은 도시에 매료된다는, 세가지 조건은 각국의 제도적 구조의 특수성을 넘어, 탈공업단계 지식경제에서 공통되는 논점이다. 따라서 ‘이전에는 스핀오프 창업이 일어나기 어려운 일본이나 한국 등 아시아형 국민적·제도적 구조 하에서도 공업화시대와 달리, 지식경제로의 이행은 스핀오프 창업의 가능성을 낳는다는 가설설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제기를, 필자의 포틀랜드연구는 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경제 하에서 선진국 경제는 지식경제화를 가속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선진국 경제에서 살아남은 공장은, 분공장이라 해도, 저숙련노동에 의

존하는 공장이 아니라 R&D기능을 집적한 공장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상기 3 조건을 기초로, 기업유치형 산업집적에서도 제도확장의 관점에서 고안된 지역적·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통해 스피노프 창업이 활발해지고 내발적 지식경제로 전환을 이룰 가능성이 태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가설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포틀랜드 연구의 결론이다. 그것은 제도적 구조의 차이로부터 경로의존성에 의한 발전경로 차이를 설명하는 정태적인 비교제도적 어프로치가 아닌, 제도적 확장에 의한 경로수정이라는 동태적 발전의 길을 설명하는 주체 중시의 발전론적인 동태적 비교지역제도 어프로치가 중요하다는 필자의 지역정치경제학을 지지해 주는 객관적인 조건이 지식경제 하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4. 변방의 분공장경제로부터 내발적 지식경제로의 발전—핀란드 오울루의 제도확장방식을 통한 경로수정

핀란드 북극권에 가까운 변방지역인 오울루(Oulu, 2007년 도시인구 13만명, 오울루 지역인구 23만명)의 경제는 원래 산림자원이 풍부한 것에서, 제재업, 펄프, 타르 생산과 목재 관련산업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3만명 학생이 사는 마을이자 ICT(정보통신기술)산업 고용이 1만 5,000명에 이르는 하이테크 산업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핀란드 경제는, 복지국가와 ICT산업의 발전을 양립시켰다는 점에서 세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키아라는 거대기업과 복지국가의 협력관계가 핀란드의 성공비결이라는 것이 통설이다⁵⁾.

통설적 이해에 기초해 오울루의 발전을 해석하면, 정부가 헬싱키 지역에 본사를 둔 노키아 무선통신 사업부문의 분공장을 오울루에 진출시키고, 오울루 대학과 핀란드 기술연구센터(VTT) 오울루 지점을 만들어, 3자가 하나가 되어 노키아 휴대전화사업 발전에 힘써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결과가 오울루 경제성장의 스토리일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오울루의 발전을 "오울루의 기적"이라고 칭송하는 입장이 있다. 조건불리한 변방지역·오울루를 전자산업의 중심거점으로 발전시키려, 대학교수 기타 그 성공을 믿고 도전을 계속한 기적의 사람들의 열정, 공헌, 협력 등. 이것이 결국, ICT 클러스터 오울루의 경제발전을 낳았다는 것이다⁶⁾.

전자의 어프로치는, 충실한 복지국가에서는 국제경쟁력 있는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은 무리라는 세계의 상식을 깨는, 충격적인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연구이지만, 오울루라는 지역수준에서의 협력을 통한 성과라는 지역적인 문제시각은 희박하다.

후자의 이해에서,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의욕과 행동, 협력을 시야에 넣은 시점은 중요하다. 이런 관점 없이, 신고전파 지역경제학처럼, 자유로운 시장의 경제합리성 논리만으로 지역경제를 분석하려고 하면 단조로운 것이 되고, 발전이라는 변화를 낳는 실제의 동태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칼 폴라니(Karl Polanyi)가 말하듯, 경제과정의 제도에는 시장의 교환 이외에도 호혜(협력)와 증여(재분배)가 있다. 시장경제가 발전한 경우에도 학자 및 R&D 기술자, 벤처 경영자 등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을 키워 준 고향에 보답하고자 U턴해서 지역발전에 협력하거나, 대학 및 교육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고액의 기부를 하거나 하여, 협력이 시장 경제에서 기업과 산업발전의 시작과 기반을 마련하거나, 재분배가

5) Castells, Manuel & Himanen, Pekka, [2002] *Th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Welfare State: The Finnish Mode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참조

6) Kulju, Mika [2002] *Oulun Ihmeen Tekijät*, Helsinki: Ajatus Kirjat 참조

시장경제의 결함 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안정을 만들어내는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오울루의 이해에는 이러한 열정과 공감, 공헌과 협력의 중요성을 근거로 한 주체 중심의 발전론적 시점이 불가결하다. 그러나 핵심인물(Key Person)들의 열정과 공헌에서 보는 견해만 으로는 편파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필자는, 양자 모두 분석이 평면적이므로, 오울루론(論)은 주체중심의 발전론적·동태적인 비교 지역제도적 어프로치를 통한 논점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⁷⁾ .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북유럽형 복지국가, 중신고용의 안정적인 노사관계, 은행 중심의 금융제도 등, 리스크를 업고 창업하는 기업환경이 약한 제도적 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자유주의 경제모델의 미국처럼 ICT 및 바이오 등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분야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젊은이들이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의 특징을 갖는 안정적 양산형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갖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

일본은 중간수준의 복지국가이나 비슷한 경향을 갖고 있어, 후자에 속하는 철강 업과 자동차공업 , 전기기계공업 등에서 경쟁우위를 보여 왔다. 대기업이 계층적으로 기업내 분업을 공간적으로 확장(본사·R&D·마케팅 기능은 도쿄권, 분공장 현장은 지방권)했고, 행정도 동일하게 계층적으로 전개하여, 아울러서 도쿄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국토구조를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지방권의 내발적 발전과 지방권에서 국제경쟁력 있는 신산업이 태어나는 것은 드물어졌다. 이 점에서, 노키아라는 한 기업의 비중이 너무 크고 국가의 역할도 큰 핀란드에서도, 점점 수도(헬싱키) 중심 경제와 노키아의 분공장이 입지하는 지방권 경제라는 수직적 국토구조 관계가 경향으로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수도 헬싱키보다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수도에서 600km 떨어진 북극권 에 가까운 변방마을·오울루에서, 한때 세계에서 으뜸가는 휴대전화산업의 성공을 비롯해, 핀란드의 급진적 혁신 유형인 ICT 산업의 발전이 일어난 것이다. 오울루 의 성공이 계기가 되어, 핀란드 경제의 중심이며 노키아 본사가 있는 헬싱키 지역 의 경제발전이 더 큰 규모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노키아는 스마트폰 시대로의 이행을 놓쳐 최근 침체해 있고, 휴대전화사업을 매각하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재생과정에 있지만, 오울루 경제발전이 끝난 것은 아니다. ICT분야는 물론, 그 축적을 발판으로, 의료기기 및 복지기기 등 다른 분야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및 제품개발을 하여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흥기업군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 하이테크 다국적기업이, 오울루의 지식노동시장에 주목하고 진출하는 등 새로운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다.

어떻게 하여 오울루라는 변방의 분공장경제에서 내발적 지식경제로의 전환이 태어난 것일까. 국민적 제도구조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유형의 산업발전 을 목표로 하는 경우, 국민적·제도적 구조의 제약을 넘어 새로운 지역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주체적·발전론적·동태적인 지역제도 확장방식(기존 의 제도적 구조를 기반으로 경로의존을 이해한 후, 지금까지 없었던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발전경로 수정을 도모하는 방식)의 채용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은 이미 논했다. 이 실천예가 오울루인 것이다.

오울루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중소기업군이 진출대기업 노키아 성장의 지역적 경제효과 (노키아에서 현지기업으로 발주)를 누리면서 수주에 따른 기술자극을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하면서 점차 특정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다양하고 자율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7) 전술 『기본 케이스로 배우는 지역경제』 서장, 9장과 전계 “케이힌 임해부 재생을 위해”, 전계 “지역문제와 지역문제를 둘러싼 연구과제 - 지역정치경제학적 어프로치의 발자취를 통해” 참조.

결과적으로 노키아와 지역 중소기업과의 Win-Win적 협력관계가 원동력이 되어, 오울루 경제는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ICT산업의 개발거점으로 발전하여, 외래형 성장에서 내발적 발전으로 경로수정에 성공했다. 이 성공을 이끈 제도적 매개항은 무엇이었는가? 오 울루 모델은 나카무라[2008] 서장에서 소개하고 있으므로 생략하겠지만,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특히 VTT (핀란드 국립기술연구센터) 오울루 지점의 역할이며, VTT 오울루 지점이 내놓은 제도 확장적·지역적 실험이다.

일반적으로 혁신경쟁을 특징으로 하는 탈(脫)공업화단계인 지식경제시대에서는 대학과 기업의 산학(産學)연계모델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산학연계는 종종 대기업이 대학의 연구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공동R&D의 성과는 개별 대기업이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지역의 여러 기업의 기술력향상 등으로 퍼지지 않는다. 대학의 연구는 기초연구수준의 연구가 많아, 산학연계의 상대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보다는, 기초연구수준의 연구를 이해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대기업인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의 개발기능강화가 필요로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기초연구수준보다도,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직결된 응용기술수준의 연구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예전 「카나가와현 두뇌센터 구상」에서, 자랑스럽게, 대학원 수준의 첨단연구기능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을 설립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산학연계가 지역경제의 R&D기능을 강화하고, 생산기능에서 R&D기능 중심의 지역경제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현실성 낮은 논의가 한창이다.

실제로, R&D경쟁 시대에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대학의 기초연구수준과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제품 및 서비스개발 기술수준을 매개하는, 즉, 대학이나 대기업의 첨단연구동향 및 기술개발동향을 이해하면서 지역중소기업 제품개발수준의 기술요구를 이해하여 매개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마케팅능력 등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인프라 역할을 해주는, 지역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응용기술수준의 R&D기능의 존재이다. 따라서 응용기술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지역에서 공동이용이 가능한 연구소 설립과 역할이야말로 지역경제의 상향적 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역할을 오울루에서 한 것이 VTT 오울루 지점이었다.

VTT 오울루 지점은 지역 IT개발자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기술의 최신 성과를 제공하여, 노키아의 하청수주에 의존하는 오울루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기술 수준을 높였다. 결과적으로, 오울루의 중소기업군은 노키아와의 거래를 통해 노키아 고유의 특수기술을 축적했을 뿐 아니라, 그 일에 종사하면서, VTT 덕분에 더욱 일반성을 갖는 일반지식축적을 진행하여, 마침내 탈(脫)노키아 할 저력을 갖추어 중소기업이지만 국제기업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VTT 오울루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기술지원을 위한 기술과 인력을 보내는 지역적 제도를 만들었고, VTT의 기술 연구원들에게는 기업수준의 기술개발에 가까운 일을 시켜, 스핀오프 창업을 권장하여, 지역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을 담당할 창업가인재로서 지역에 대량으로 보내는 역할도 했다. 안정된 신분보장이 있는 연구직에서 창업이라는 위험이 있는 일에 뛰어드는 직원을 대량 만들어내기에는 나름의 제도적 조건이 없으면 힘들다. 안정지향이 강한 복지국형 복지국가에서 이를 위한 제도확장적 실험으로서 도입된 제도가 창업했다가 경영에 실패한 경우 원래 기술연구업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장 하고, 창업 후에도 VTT 최신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협력하는 등의 지원하는 제도였다. 장기고용과 안심을 특징으로 하는 고수준 복지국가의 국가에서 급진적 혁신을 특징으로 하는 IT 산업분야에서 스핀오프 기업을 다수 배출시키는 경로수정을 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실로, 발전론적·동태적·비교제도적 어프로치로서의 제도확장방식의 장치가 있었던 것이다.

변방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일수록 내발적 발전을 필요로 하지만, 실은, 내발적 발전의 잠재력은 작고 실현은 어렵다. 오울루 모델은 내발적 발전론의 약점이 극복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핀란드

정부는 “오울루의 기적”으로 칭송하며, 다른 변방지역에서도 응용가능한 발전모델로 확산시키기 위한 지역정책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지역의 제도적 실험성공이 국가의 정책을 창조하고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지지하기 위한 국가의 지역정책을 만드는 관계가 태어난 것이었다.

정리하자면, 기술개발 등 경제발전과 복지충실을 양립시키는 독자적인 다양한 “발전 극(Pole)”을 다수의 하위지역(Sub-region)에 형성하도록 독려함과 동시에, 이들이 광역지역마다 형성되는 고차의 발전 거점(오울루) 및 수도에 형성되는 국제수준의 발전거점 (헬싱키)와 결합하여, 로컬지역이 자기부담으로 얻기 힘든 필요한 기술정보 등을 언제든지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는 다층적 발전지원체제를 정비하는 지역정책이었다.

일본에서는 국가의 성장전략은 대도시권이 주대상이고, 지방권에게는 지역의 자조노력의 내발적 발전의 필요를 설명하면서 국가의 지역정책 책임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반면, 핀란드의 지역정책은, 글로벌 경쟁과 지식경제로의 이행 하에서, 지방권의 내발적 발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고, 현대의 내발적 발전론은 국가가 내발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필자는 저서 『지역정치경제학』 “내발적 발전론”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낡은 중앙집권적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적 국가를 넘은, 다양한 내발적 발전을 축으로 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제3의 국가상” 전망이 필요해졌다고 주장했는데, 이 사례에서 하나의 시도(Trial)를 볼 수 있다고 쓴 것은 시기상조 혹은 과대평가일까. 여하튼,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과 국가의 지역정책과의 관계는, 지식경제에서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과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⁸⁾.

5. 충청남도 지역경제의 내발적 발전의 길을 생각하다

외래형 성장을 통한 분공장형 경제를 특징으로 해온 충남지역이 지역경제의 자율과 경제의 지역내 순환심화를 실현하는 내발적 발전의 길로 방향을 틀 수 있을까, 라는 이번 심포지엄의 테마를 생각하기 위해, 이 글은 힌트가 되는 선행사례를 소개하면서, 외래형 성장에서 내발적 발전으로의 경로수정은 동태적·지역제도적 접근관점과, 방법에서의 점진적 어프로치가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라고 필자의 견해를 이론적 수준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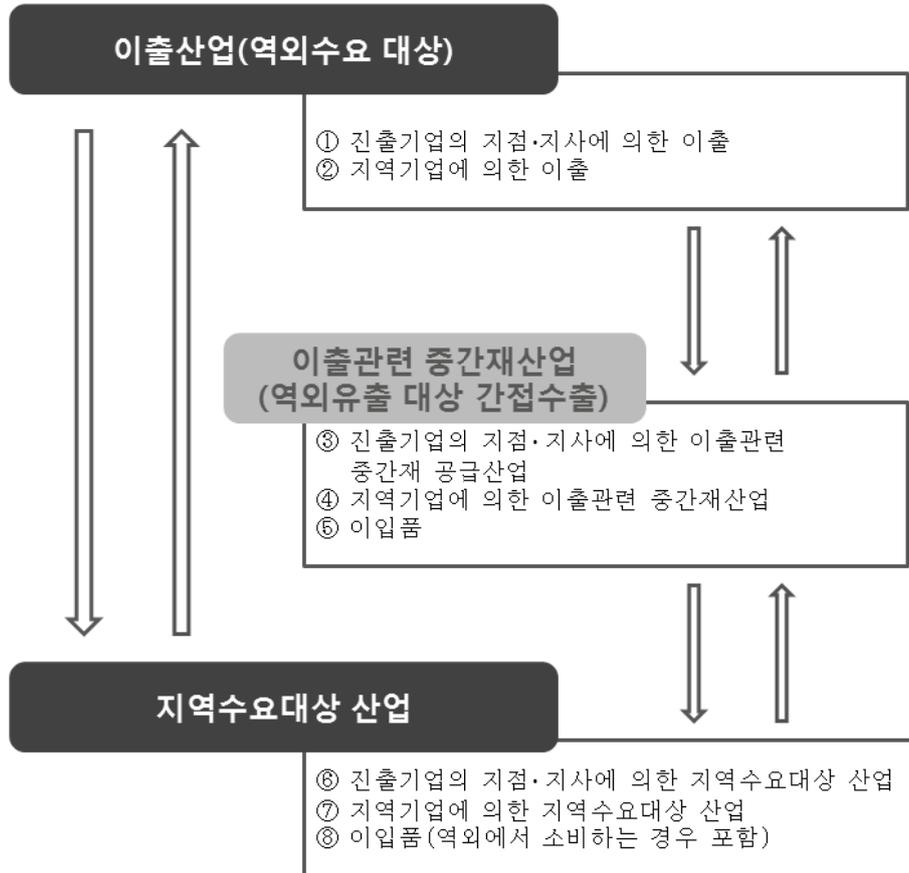
충남지역의 경로수정을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구상을 전망하는 것은, 지역정치 경제시스템의 실태분석, 정책주체와 제도적 조건의 구체적인 분석과 동태적 전망에 입각하여 현지 연구자 및 정책결정에 관련된 사람들, 지역의 여러 주체들(Actor)이 공동과제로 하는 것으로, 충남지역을 둘러싼 대내외적 조건들, 그 현실을 모르고, 주체도 아니고, 단지 외부사람으로서, 외국의 선행사례연구를 소개하는데 머무는 필자의 입장을 넘는 과제임은 말할 것도 없다. 단지, 지금까지의 검토를 바탕으로 정책론적 논점에 대해 좀더 정리해서 언급하는 것은 필요할 지도 모른다.

지역경제학에서는 ‘지역경제의 발전’을 ‘산업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①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산업을 지역 외부의 수요에 대응해 소득을 올리는 이출(수출 포함) 산업, ②지역내 수요에 공급하는 지역수요대상형 산업, ③지역내 수요를 역외에서 공급받아 대응하는 이입,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다. ‘이출’산업에는, 직접이출을 담당하는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이출 성격의 공

8) 전계서 『지역정치경제학』 제1장 참조

급산업(중간수요대상 공급업체)가 있다. 지역 서비스는 지역시장이 필요로 하는 재화서비스를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산업으로, 서비스산업 뿐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상업 외에도 다양한 산업이 포함된다. ‘이입’에는 이출산업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이입품과, 지역 소비에 관련해서 역외에서 이입하는 것이 있다. 이출산업이 성장하면 중간수요대상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고, 그런 산업들에 종사하는 직원이 임금을 받고 현지에서 소비하면 지역수요대상 산업이 성장 하는 등 경제의 지역내 순환이 생긴다. 이를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산업과 순환



농촌지역이었던 지방권이 공장유치를 통해 외래형 성장을 추진한 경우에 종종 나타나는 분공장형 경제를 예로 들면, 지역의 이출산업은 지방권의 저임금노동 사용을 목적으로 입지한 진출기업의 지점(Branch)이며,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와 부품, 서비스 등 중간재가 역외로부터 조달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고, 중간재수요가 작기 때문에 이출산업의 지역 경제효과로서의 ‘경제의 지역내 순환’이 낮고, 종업원들의 소비를 통한 지역수요대상형 산업의 수요 중심으로, 전체적 규모가 작아진다. 지역의 노동수요는 저숙련 공장현장노동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수준은 농촌경제시대의 소득수준보다 높아진다 해도, 전국적으로 보면 높지 않기 때문에 지역수요산업에 대한 수요도 질·양 모두 제한되어, 3차 산업을 비롯한 지역수요 산업의 성장도 상대적으로 제약받는다. 기업의 이익은 역외 본사로 유출(Leakage)된다. 지역공장에 의한 생산소득이 본사가 있는 대도시로 유출되어, 지역에서의 설비 투자와 기술진보, 기업전략구축을 위한 정보·조사활동 비용 등이 지역에 재투자된다고는 할 수 없어진다. 또한 진출기업이 특정 소수기업으로 한정되는 지역경제에서, 글로벌경제 하에서 기업들이 해외생산으로 이전

하거나 공장을 축소하거나 철수 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으므로, 그만큼 불안정성을 높이게 된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가 그러하겠지만, 진출대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집적한 경우는, 이출산업에서 파생되는 중간재수요에 지역 중소기업이 대응하여 경제의 지역내 순환은 지방권의 분공장경제 경우보다 깊어지고 커진다.

무엇보다 수출주도형 경제를 기조로 하는 한국의 경우, 국제경쟁력강화의 국가 전략에서 1산업 1기업(많아야 2기업)과 산업집중전략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 업체로서 중소기업은 다양한 기업에 납품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자립해 있기 보다는, 특정대기업의 하청의존적 성격을 갖게 되어, 지속적으로 비용절감을 요구받는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낮고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여유가 생기기 어려워, 직원임금도 낮아지므로 지역수요대상 산업의 경제효과도 제한된다.

서울에 가까우면, 진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서비스와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급소비는 서울로 유출되기 때문에, 기업대상 서비스산업과 소비자대상 서비스산업의 발전도 제약받는다. 지역경제발전에서 중요한 것은 이출형 제조업의 성장 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은 다양한 3차산업의 발전이야말로 경제의 지역내 순환을 심화시켜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가져오고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제조업의 생산현장기능에 의한 이출이 증가해도 중간재 산업과 지역수요대상 산업의 발달이 약하면 경제의 지역내 순환이 약해지고 지역경제발전이 제약받는다. 대도시경제의 경우, 대부분 제조업의 생산기능보다 3차산업의 발전이 지역경제의 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에는, 기업대상이든 소비자대상이든 전문적인 서비스산업의 성장에 있어서는, 규모경제가 중요하여, 큰 수요의 존재(시장권)가 배후에 있는 것이 성장의 조건이 되고, 집적이 집적을 부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도시일수록 우위에 있게 되는 특징이 있다. 이런 면에서도 서울의 우위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충남지역이 외래형 성장의 한계를 넘어 지역경제의 자율적 발전과 경제의 지역 내 순환심화를 목표로 내발적 발전의 길을 지향한다면 여러 경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지역에 집적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스핀오프 창업을 지원하고, 바이오공학 및 나노기술 등 새로운 성장산업의 신흥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지역에 뿌리내린 새로운 이출산업창출의 과제로서 중요하다.

기존 이출산업 더욱 진흥시키는 것도 과제이다. 농업이 강한 충남에서는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업의 다각적 발전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출산업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많이 알려진대로, 6차 산업화란 1차 산업인 농업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가공하여 2차 산업으로 확장하고,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는 기능도 맡고, 직판장을 마련하거나 인터넷 판매를 하거나, 관광과 연계하거나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지역 식재료를 사용한 메뉴를 개발해 제휴하거나, 기념품으로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3차 산업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외래형 성장 또는 내발적 발전에 관계없이, 지역수요대상 산업의 충실·진흥을 도모해 경제의 지역내 순환을 심화·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의료·복지·교육·문화·환경 분야의 서비스산업과 관련제조업의 발전을 지역에서 일으켜 가는 것은, 앞으로의 한국경제에서 점점 비중을 높여갈 신성장 산업분야 인 만큼 주력해야 할 과제이다. 기존에는 공공부문을 공급주체로 하는 공공서비스 분야로 간주되어 왔지만, 재정적 제약문제 뿐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요구부응에 따른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NPO(비영리조직) 및 민간기업·사업소가 담당하는 공공서비스분야의 새로운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지역 공공서비스분야는 지역사회 의 요구와 결부된 분야로, 주민의 참여와 협력, NPO의 활약과 지역 공공부문의 역할 과 결합된 형태로 지역기업이나 사업소를 중심으로 지역의 여러 주체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에서 내발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업분야라고 하겠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앞부분까지 한 검토와 관련하여 외래형 성장의 내발적 발전으로의 전환의 길을 구상해보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충남에 진출한 대기업의 지사(분공장)은 단순한 공장 현장노동자가 중심인 가, 아니면 R&D기능을 가진 공장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글로벌리제이션 하에서 선진국경제의 공장은, 자동화(Automation)로 인력절감(고용감축)을 진행하거나 R&D기능을 부설해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으로 이동하거나 하지 않으면 지속은 어렵다.

예를 들어, 일본의 화학메이커 중에 ‘일본 제온’이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의 다카오카(高岡)공장은 지방에 위치하는 전형적인 분공장이다. 글로벌경쟁 하에서, 일본에서는 저임금노동자를 입지요인으로 하는 지역공장의 대부분은, R&D 기능을 가지지 않고, 가격경쟁에 휘말려 축소 및 폐쇄에 몰려 왔다. 일본 제온 타카오카 공장도 똑같은 운명이었겠지만, 실은, 타카오카 공장의 생산현장에서 숙련노동의 우수성이 주목받아 공장폐쇄도 면했고 수도권의 가와사키(川崎)에 있는 일본 제온의 거점공장에서 성장분야의 첨단정밀가공기능이 이전되고 새로운 정밀공학연구소를 병설하여, 공장의 숙련노동과 제품개발기능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충남의 분공장군(郡)이 R&D기능을 갖춘 첨단공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거나 향후 그러한 발전방향을 가질 수 있는가가, 존속·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분공장 생존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생산현장과 R&D기능의 결합을 기초로 하는 공장의 존속·발전은 중간재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역기업으로의 발주증가로 이어진다. 기존에 경기도 및 다른 곳의 수입품으로 중간재수요에 대응했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수입품을 생산대체할 가능성이 커진다. 대기업의 하청수주 및 수입대체를 바탕으로,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을 높여, 이윽고, 지역 중소기업이 탈(脫) 하청에 성공해 자립한 국제기업으로 성장해갈 길이 태어날 수 있다. 글로벌경쟁 하에서 진출 대기업은, 대기업에 의존하는 순종적인 하청기업을 필요로 하는 단계를 넘어, 지금은 자립가능할 정도의 높은 기술력을 가진 협력기업의 발전을 필요로 하기에 이르렀다.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의 수직적 하청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의 구축이야말로 진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원천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강화해 대기업에게 협력업체로 인정받으려면 중소기업의 자조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여기서 상기해야 할 것이 4절에서 소개한 핀란드 오울루의 예 -노키아의 발주와 지역 중소기업의 수주를 둘러싼 Win-Win관계의 구축과정-이다. 양자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도록 매개한 것은, 중소기업이 개발기능의 향상에 공헌하려 하는, 더 나아가, 다수의 우수직원에게 스펀오프 창업을 장려하여 지역에 높은 기술력을 가진 많은 중소기업의 탄생을 이끌고, 응용기술에 특화하고, 동시에, 대학에서 높은 수준의 연구성과를 흡수하고 중소기업수준의 개발기능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국립기술연구센터·오울루 지사’의 독자적 역할이었다. 충남에서도 이 교훈에서 배워 어떤 시도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산학공동보다 대학의 연구수준과 중소기업의 개발기능의 중간에 위치하는, 응용기술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기술력향상지원 뿐만 아니라 연구직원의 스펀오프 창업을 장려하는 제도설계를 할 때 중요한 열쇠가 되는 점들은 이미 4절 오울루론(論)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삼성전자 등 ICT분야의 산업은 물론, IT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자동차산업에게도, 소프트웨어 개발에 초점을 맞춘 응용기술전문 지역 중소기업의 개발기능지원에 특화된 공동이용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시대로 이행함에 따라, 점점 자동차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중요해진다. 바이오 공학의 경우, 대학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가 사업화로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가까운 응용기술전문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신약

비즈니스 및 재생의료 등, 예를 들어, 재생의료의 배양과정 이 지금처럼 연구자 수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화 이전단계에서, 언젠가 기계에 의한 자동화단계로 이행할 것을 전망할 때, 재생의료용 기계개발 및 생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개발기능을 지원하는 데에 특화된 응용기술전문 지역연구센터 설치의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스핀오프 창업을 장려하는 제도설계는, 진출기업로부터의 스핀오프 창업 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의 스핀오프 창업장려에 중요하다. 일본 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사회에서도 개인의 자립보다 조직에 의존해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처럼 개인의 자립을 좋아해 위험을 감수하고 창업하는 산업적 분위기는 약하다. 때문에, 우수한 연구자나 기술자 또는 관리자가 안심하고 창업으로 내딛을 수 있을 제도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벤처기업 육성을 강조하고 스타트업 자금보조를 내놓는 것만으로는 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은 실현되지 않는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대기업은 스핀오프 창업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경향마저 있다. 하지만 실은, 스웨덴의 세계최고 통신기술기업 에릭슨도 예전에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창조성, 조직화가 결정타가 되는 지식경제단계 경쟁에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에릭슨은 스핀오프 창업을 억누르던 것부터 인정하고, 스핀오프했던 예전 직원과 제휴하는 방향으로 기업전략을 전환했다. 비슷한 움직임이 대기업 중심의 안정지향이 강한 제도적 구조를 가진 일본이나 한국의 대기업에서도 시작될 것이다. 3절 포틀랜드론(論)에서 지적 했듯이, 직원 입장에서 R&D기능을 강화하는 경영하에서는 기업특정지식·기술 뿐 아니라, 일반성을 갖는 전문지식·기술을 축적해가는 것이므로, 스핀오프 창업을 용이하게 하는 주체적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연구자·기술자가 스핀오프 창업을 한다고 해도, 충남지역에서 할 거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시도할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에서, 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식노동 종사자에게 충남지역에 살면서 여기에서 창업 하고 싶어지는 매력을, 지역이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매력적인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는, 지역기업을 주체로 하는, 경제의 지역내 순환을 심화시키는 지역 경제발전으로 연결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에는 없는, 농업이 번성하고 자연과 역사가 풍부한, ‘농촌풍경도 있는 도시의 매력’이라는 충남지역의 매력을 살린 지역만들기가 중요해진다. 그리고 지식노동 종사자들은 자연과 역사를 좋아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와 개성의 발전, 다양하고 이질적인 인재와의 상호자극, 세계의 첨단적인 움직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므로 지식노동 종사자들의 니즈(Needs)에 맞는 사회적 관용성과 정보공간형성도 증시할 필요가 있다. 포틀랜드론(論)에서 논한 바와 같이, 대도시에서 떨어진 지방권에서 내발적 지식경제로 지역경제를 형성하려면, 마을만들기와 일체화한 형태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제2절 일본 케이힌 지역사례에서 지적했듯이, 글로벌화 하에서 대기업이 사업재구축을 강요하고 지식집약적 기업으로 진화해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대기업들이 해온 대규모 사업화는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며, 기업내에 갖고 있던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움직임이 생긴 것이다. 대기업의 기술자가 중소제조업에 기술지도를 하면서 기술이전을 원활히 진행시켜, 신제품 개발과 연계하여 이어가는 움직임이 태어난다면 지역경제의 외래형 성장에서 내발적발전의 전환의 길의 하나로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를 위한 중개역할로 행정의 지적 재산권이전교류를 위한 지역정책 전개가 기대된다. 제2절에서 소개한 진출기업과 대학, 지역중소기업 간의 지역협력 노력도, 진출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역중소기업의 발전을 낳는 시도라는 의미에서 발전이 기대된다.

충남지역의 새로운 내발적 발전의 전진을 기원하면서, 강연을 마치겠다.

グローバル経済・知識経済化の時代における外発型地域経済の内発型地域経済 への転化の道を考える。

龍谷大学政策学部教授 中村剛治郎
(横浜国立大学名誉教授 日本地域経済学会顧問・元会長)

1. 問題の所在—忠清南道の地域経済を想像しながら

忠南発展研究院主催「日韓共同シンポジウム・グローバル経済危機の時代、地域経済の善循環と自立の可能性を問う」に、発表者としてお招きいただきましたことを感謝申し上げます。

韓国経済は、東京大都市圏一極集中を特徴とする日本経済と同様に、あるいは、それ以上に、ソウル大都市圏への一極集中を構造的特徴としてきた。韓国政府は、ソウル大都市圏一極集中構造を前提として、過密対策の一環として、ソウル市に隣接する仁川、京畿道への事業所の拡散、さらには、ソウル市の周辺部に位置する忠清南道への事業所の分散を進めてきた。結果として、忠清南道には、政府出資の研究機関やソウルに本社を置くサムスン(ディスプレイ、半導体)、ヒュンダイ(自動車部品)など大企業の分工場が進出し、忠清南道地域経済は、とりわけ北部は、農村地域から、韓国経済を牽引するリーディング産業が立地する成長地域経済へと転換した。

政府出資の研究機関が多数集積する大田広域市は、日本では筑波研究学園都市に似ている。他方で、電気・電子機器産業や自動車産業の大企業による大工場の集積する地域という意味では、日本の京浜地域(とくに神奈川県川崎市・横浜市)に似ている。ただ、京浜地域では、大企業の集積が、サプライヤーとしての多数の中小企業の成長を生み出したこと、また、京浜地域は東京の隣接地域であるという意味では、京畿道の方が京浜地域に似ているというべきかもしれない。ソウルから相当の距離があり、農村地域から成長産業地域に急激に変貌した地域という意味では、忠清南道の地域経済は、大都市から外部コントロールを受け、日本の首都圏で言えば、関東北部地域、あるいは、地方圏によくある分工場型地域経済と見た方がよい面をもっているといえるかもしれない。

ともあれ、世界金融危機以降のグローバル経済のもとで、多国籍化した韓国の大企業は、国内立地よりも成長する海外市場への立地を軸に、生産配置のさらなる再編を進めつつある。脱デフレを掲げる日本の安倍政権の経済政策、アベノミクスの下で、日本の自動車産業をはじめとする輸出型製造業との競争が激化している。サムスン電子の成長を牽引した液晶テレビやスマートフォンは、いまや高価格品からコモディティ化(低価格化・普及品化)を強めつつあるので、成長する新興国市場への生産移転が進むであろう。少数の輸出型大企業の分工場に依存する忠清南道の地域経済の盛衰は、ソウルで決定されるグローバル企業戦略あるいは立地戦略に翻弄され、今後、ますます不安定性を強めざるを得ない。大企業の工場でも、母工場である場合は、研究開発機能を付設し、新製品開発と結びついて、試作機能をサポートする専門加工技術を有する中小企業の集積を導くが、分工場である場合は、地域に根ざした競争力の源泉を持たない場合が多く、それだけ、工場の縮小や撤退など、立地移動が起こりやすい。地域に集積する多様な中小企業への部品加工をはじめとする発注が少なく、立地企業の生産がどれだけ大ききとも、経済活動の地域内循環は意外に小さい。

大企業の分工場は、生産した所得のうち法人所得部分を本社に吸い上げられるので、忠清南道からソウル

への所得流出が起こる。問題はそれだけではない。多数の本社機能が地元にある本社型地域経済（本社型地域経済の場合には、意思決定機能やマーケティング機能、研究開発機能などと結びつく、さまざまな企業向け専門サービス業、金融機能など本社関連複合機能の集積が生まれ、多様な知的職種の雇用が増える。さらには、顧客への接待関連を含む多様な個人向けサービス業が発展し、都市の賑わいが生まれる。結果として、多様な商業・サービス業など第3次産業が発達し、経済の地域内循環が拡大深化する。

ところが、分工場だけが本社機能および関連複合機能から切り離されて立地する地域経済（分工場経済）では、生産機能だけに特化し、第3次産業の発達が弱いので、都市の賑わいが限定され、面白い魅力的な都市づくりが進みにくいことになる。実際、忠清南道の産業構成比率を見ると、全国構成比と比べ、第1次産業と第2次産業の構成比は高いが、第3次産業は相当低い。しかも、忠清南道の将来展望において、製造業を中心とする第2次産業の肥大化、第3次産業の相対的低下が傾向として見込まれており、2020年には、第1次産業が3.8%、第2次産業が61.6%、第3次産業が34.6%になると予測されているという。

[表1] 忠清南道と韓国全体の産業構造比較

(生産額基準 2011年現在)

| | |
|-------|--------------------|
| 第1次産業 | 5.0% (全国平均：2.7%) |
| 第2次産業 | 58.3% (全国平均：32.4%) |
| 第3次産業 | 36.7% (全国：64.9%) |

都市の本質は、工業生産機能よりも、工業化が生み出す第3次産業の発達、経済の地域内循環がもたらす市民所得の高さ、意思決定・関連機能の集積、多様な人材の集積・異質な人材の交流、消費活動・余暇活動を中心とする都市の賑わい、自由時間の充実、創造性、知識・文化経済の発達にある。分工場経済地域は、工業化の時代には、生産空間として成長するが、都市の本質をどれだけ体現しているかという、地域経済の質において、課題を抱える地域といえよう。

現代の先進国経済は、いまや、工業化段階の成長経済の時代を終え、ポスト工業化段階の成熟経済の時代、知識・文化経済へと移行しつつある。移行にともなう過渡期の軋轢、苦しみを経験しているといってもよい。韓国経済が今後、あるいは、いま直面しつつある課題も、移行をめぐる同様の問題であろう。知識文化経済をリードするのは、多様な、知的文化的創造人材の集積と相互刺激の交流であるが、地域経済にとっては、知的文化的創造人材が集積し交流する魅力的な都市を創ることができているか、それが都市の未来を決めるという視点から、再点検し課題を明らかにする必要がある。

以上の意味で、忠清南道の地域経済には、政府による首都ソウルの過密対策、それと一体化したソウルに本社を置く大企業による分工場の進出を契機とする外発的成長の道から、いかにして、地域の内部から意思決定機能を始めとする本社機能関連複合機能や創造性、多様な人材の集積と交流、都市の魅力を育てる内発的発展の道へと転換する課題があるといえよう。

いったい、この課題は、いかにして実現可能であろうか。日本と韓国は、国家の役割が大きく、大企業中心の社会であるという点で、アジア型経済モデルとして似通ったところがある。結果として、政府機能と大企業の本社機能が結びつき、首都圏一極集中が生まれ、多様な地域経済の内発的発展が弱い。とはいえ、日本でも、筆者が定性的定量的両面から実証的に明らかにしたように、金沢のように、内発的発展をしてきた地方都市も存在する。

筆者が定式化した金沢を事例とする地方都市の内発的発展モデルをごく簡単に示すと、次の通りである。

第1に、地域経済の衰退や危機の時代に登場したリーダー（イノベーター）と追随者の役割、第2に、地域の条件に即した創意性と地域中核産業の戦略的振興、第3に、特定産業の発展から産業構造の多角化を導く発展経路で、地域経済の安定と新しい産業発展の可能性を広げる地域内産業連関的発展、第4に、地元企業主体の独自の産地機構の組織化、本社機能や金融機能など経済上部機能の蓄積と強化による自律的地域経済の形成、第5に、経済の地域内循環で地域経済全体に行き渡るゆっくりとした成長の成果と自然的歴史的環境、文化都市としての地域の魅力の保全との調和、量的成長よりも質的発展、都市の賑わい、面白さの発展、地域の総合的発展の重視、である。そして、筆者が明らかにしたことは、外発的成長と内発的成長との静態的な二分法に基づく地域経済類型の違いではなく、外発的成長への圧力のもとで、それと対抗し、あるいは、うまく対応して、独自の内発的発展の道を切り開いてきた動的な発展プロセスであり、地域諸アクターの考え方や行動、地域的制度的仕掛けの意義にあった1)。

これに対し、従来の通説的な内発的発展論には、外発的成長の場合、地域経済に、自立がなく、法人所得の流出や経済の地域循環が弱いなどの問題があるので、地域経済の自立や経済の地域内循環の深化を実現する内発的発展の道を選択すべきだという、静態的な二分法に基づく、二者択一を迫る理念論に留まる弱点があった。日本を含め、非西欧の後発資本主義国では、世界資本主義の中心たる西欧から発する外圧のもとで資本主義の発展の道を模索することになるので、外発的成長が基調とならざるをえない。それゆえ、多くの地域経済は、内発的発展の道は険しく、経済成長を望むとすれば、やむをえず、外発的成長の道を歩んできたのであった。そして、地域経済の量的成長は実現したが、地域経済の質的問題に直面し、どの地域経済も、構造的な改革の課題に直面するに至っているというのが現実であろう。

そうだとすれば、外発的成長の地域経済をめぐる政策的問題は2つあることになる。1つは、これまでの外発的成長と切り離して、内発的発展の道を試みるのが可能なら、当然、推進すべきだという課題であり、もう一つは、これまでの外発的成長の道の延長上に内発的発展への転化の契機を見出すという、弁証法的な発展の道の模索である。後者は、静態的理念的に考える立場からすると、ありえない、矛盾する課題設定とみなされるであろう。しかし、何事も、とくにイノベーションのような場合がそうであるが、不可能と思われる矛盾を解き、統一することによって、質的に高いレベルの発展が生まれるものである。矛盾を解くために必要なことは、対立するものの中に統一をもたらす媒介項をいかに設定し機能させるか、である。つまり、従来の制度的構造を拒否する単純な発想でなく、いったん受け入れつつ、それを超えようとする漸進的発展戦略としての制度拡張という改革路線、そのための新たな制度的仕掛けを媒介して、制度的拡張を基礎とする経路修正(外発的成長から内発的発展への転化)を実現するという、主体重視の発展論的で動的な比較地域制度的アプローチを採ることが、現実的であり、必要な政策課題であると考えてるのである。

いったい、そのような成功事例があるのであろうか。以下では、最初に、日本における外発的成長の地域経済として首都圏(京浜地域、関東北部、多摩地域)をとりあげ、続いて、外発的成長を特徴とする分工場経済から内発的知識経済への転化に成功した2つの事例、米国北西部に位置するポートランド地域とフィンランドの辺境地域に位置するオウル地域の発展を紹介する。最後に、地域経済の自立的な発展や経済の地域内循環をめぐる地域経済学の基礎知識を整理しながら、忠清南道地域の課題に即した検討を行うことによって結びとしたい。

2. 日本の首都圏における地域経済の現状と課題

日本最大の工業地帯である京浜工業地帯、とりわけ、その中心というべき川崎、横浜などの神奈川県地域

の経済は、東京に本社機能を置く、製鉄所、化学工業、電機・電子機器、自動車工業、一般機械製造など、重化学工業大企業の工場立地・集積によって成長してきた歴史をもつ。日本経済の産業構造が、重化学工業中心からハイテク産業中心へ、さらには、ポスト工業化段階へと移行するにともなって、京浜地域から、製造業の工場が地方圏へ、さらには、海外へと流出していった。京浜地域経済は、しだいに、生産機能を縮小させつつ、民間企業の研究開発機能が集積する地域経済へと変貌してきた2)。

神奈川県に集積する民間企業の研究開発拠点は、たとえば、東芝、ソニー、NEC、富士通その他、多数の有力エレクトロニクス企業の研究所に見られるように、それぞれの企業にとっての中核的な研究開発拠点である。各企業の研究テーマは、関連するエレクトロニクス技術分野であり、企業横断的な地域的な共同研究の潜在的可能性をもつ。神奈川県は、2004年以降、産業集積促進と称し、巨額の進出助成金を準備して、大企業の研究開発拠点を熱心に誘致してきた。そして、近年では、進出企業と地元企業とが交流する場を設定するなどして、産業クラスターとしての発展を期待してきた。しかし、多くの日本企業の競争戦略は、企業ごとに閉じた垂直統合的経営あるいは研究開発-生産システムを基本としてきた。企業は、地域に集積する他の企業との技術交流に期待して進出してきたわけでないので、助成金をくれた神奈川県主催のイベントに参加する協力はするものの、地域における企業間交流を競争力強化の重要な源泉に位置付けることはなかった。

周知の通り、マイケル・ポーターは、4つのファクター（要素条件、需要条件、関連・供給産業、企業の戦略・構造・ライバル間競争）を指摘して、ある特定の分野の企業群や関連諸機関が地理的に近接して集積している状態を基礎にイノベーションを刺激する産業クラスターの形成を論じた。この意味では、世界有数のハイテク産業地域である京浜地域は、まさに、エレクトロニクス産業クラスター地域であるというべきであろう。しかし、産業集積には、企業横断的な地域的協力関係を生み出してイノベティブな産業クラスターを形成する場合もあれば、企業間の関係が、競争関係ばかりで、協力関係が生まれず、企業ごとのイノベーションの取り組みに終始し、クラスター的な競争優位を生み出さない場合もあるのである。

京浜地域は、まさに後者の事例である。その背後にあるのは、日本の制度的構造である。日本の国民的制度的構造を背景にして、日本企業は研究職の長期雇用や垂直統合経営を制度的特徴としてきた。進出した研究開発拠点は、東京の本社からコントロールされ、また、日本の企業の研究者・技術者には、終身雇用制度のもとに、ノウハウや技術、情報の流出を禁じる厳しい守秘義務が課せられている。シリコンバレーの研究者・技術者のように、企業横断的に競合他社の研究者・技術者と自由に研究交流・情報交流を行って、互いの切磋琢磨を促進し、頻繁な転職が企業のノウハウなどを地域のノウハウにして行く知識の地域的伝播を活発にするといった、クラスター的な発展を生み出す地域的制度環境は、京浜地域にはない。比較制度的な視点をもって現状を分析し、制度的拡張による経路修正の道を拓く方針に基づいて制度的仕掛けを設計しないと、クラスター的な発展を導くことは難しい。産業集積が産業クラスターにつながらない制度的構造をもつ国や地域で、制度的制約をいかにして乗り越えることができるか、そのための制度的な仕掛けをどのように準備するか、構造改革か制度拡張か、経路突破か経路修正か、産業クラスター政策論には比較制度的な視点に立つ課題設定と制度的仕掛けの対策が不可欠である。

ちなみに、神奈川県や川崎市、横浜市の地域産業政策の歴史を振り返ると、いつも企業誘致の施策ばかりで、量的拡大の視点はあっても大都市経済なら当然考えられるはずの、地域経済の循環構造や地域内産業連関の発展、地域経済の自立や内発的発展という地域経済の質を重視する視点を欠落させてきた。日本の制度的構造のもとで、いかなる地域的制度を設けて、地域経済の質的構造的発展を図っていくかという問題意識はなかった。ただ、一極集中する東京に近いという他律的なメリットを享受して、産業立地の受け皿となら

うとするばかりであった。いまでも川崎市や神奈川県は、特区を設けて企業誘致に奔走している。

同時に、京浜地域に新たな動きが生まれていることも事実である。上述の通り、京浜地域には、進出大企業の研究開発機能（中央研究所）と中小製造業が多数立地・集積している。従来は、閉鎖的な日本企業の垂直統合経営のもとで、両者の間には結びつきがなかったが、最近、新たな視点から注目すべき変化が生まれている。上述の通り、神奈川県や川崎市は、知識経済化の時代に中小企業が競争力を強化して生き残るには、研究開発力の強化が不可欠であるが、中小企業単独では難しいので、京浜地域の進出大企業ももつ知的財産・特許技術を中小企業に移転する方式を構想し、2007年度より「川崎知的財産交流会」を開催してきた。多くの大企業は、呼びかけに応じて交流会に参加しても、自社の特許技術の優位性を一般的に紹介するだけで、企業戦略に位置付けて、実際に中小企業へ技術移転しようとはしてこなかった。ところが、近年になって、富士通というITサービスを軸とする有力エレクトロニクス企業が、自社の特許技術をライセンス料と引き換えに中小企業に移転するサービスを新たなビジネスとして展開するようになった。川崎知的財産交流会では、他の大企業からの技術移転は進んでいないが、富士通と中小製造業の間では、2013年3月段階で14件の成約に至っている。これを基礎に、富士通は、この動きを埼玉県下の中小企業とも間にも広げようとしているようである。

この背景にあるのは、富士通がエレクトロニクス分野のハードウェアメーカーからソフトウェアメーカーへの転換という企業戦略の変化がある。新興国企業のキャッチアップが予想される競争環境の下で、先進国の情報通信技術企業が生き残るには、米国のIBMが先行するように、ICT機器製造からICTサービス企業へと転換を図ることが、一つの有力の道筋である。この転換は、企業内のハードウェア部門のリストラとともに、特許技術の死蔵化につながる。自社の事業に抵触しない範囲で、不要な特許技術を、競合しない多数の中小製造業にライセンス料を取って移転すれば、技術開発のための投資コストを少しでも回収し、新規の重点技術開発への投資資金に回してゆくことができる。他方で、中小製造業にとっては、廉価なライセンス料で特許技術が使用できるなら、研究開発力の強化、新製品開発へチャンスである。もっとも、大企業と中小企業とでは、技術レベルに差があるので、大企業の特許技術が直ちに中小製造業で製品開発に使えるほど簡単な関係にはない。そこで、富士通は、当該技術の開発者を中小企業に派遣して、中小企業による特許技術の受容が円滑にゆくように協力し、中小企業の技術力強化に实际的に貢献している。

このような動きは、地域経済の視点から見ると、地域経済の外発的成長から内発的発展への転化の道の一つに位置付けることができよう。なぜなら、このような新しい動きは、富士通に限定されない、日本の大企業にこれから起こる変化の先駆けと見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ある。日本の大企業には、大企業として事業化するには市場規模が小さいと判断されて死蔵している特許技術が大量にある。これらの特許技術を売却すると、後に、新たな事業を起こした時に抵触する技術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心配があるので、これまでは大量の特許技術が事業化されないまま企業内に封じ込まれてきた。しかし、特許権を保有しながら、ライセンス料を払って、競合しない中小製造業の新製品開発に協力するとすれば、この心配はなくなる。また、大企業の技術者の協力のもとに特許技術使用の中小企業が、爆発的にヒットする可能性のある新商品の開発に成功するなら、大企業との技術だけでなく営業的にも協力関係の下で事業展開を行う、新たなWin-Win関係の構築による企業発展の道が開かれるかもしれない。グローバル競争の激化は、従来の日本の制度的構造の下での企業内に閉じた日本企業の行動様式に変化を迫り、事業再構築の一環として、企業外の諸企業あるいは地域の中小企業との新しい結びつき、連携を模索する動きを強める。この動きを、地域に根ざした地域経済の内発的発展に向けての機会にするために、地域の諸企業、研究所、行政が連携して取り組んでいくことが、重要な課題になっているといえよう。

最近、横浜市の経済政策を企画する部署でも新たな動きが生まれている。グローバル経済の時代だからこそ、地域根ざした横浜経済の内発的発展の可能性を考えるべきだという議論である。横浜市経済局政策調整部経済企画課は、外発的成長の限界に目を向け、市内の各産業間の取引の循環構造を定量的に分析し、横浜市の産業構造の特色を外発的成長と内発的発展の視点から歴史的に検討し、横浜経済の内発的発展の道を模索する委託調査を実施した3)。

もっとも、その内容は、定量的分析において、我々の金沢論における地域産業連関分析の手法を取り入れて、一定の成果をあげているが、その結論部分においては、いまだ抽象的で、内発的発展のためにヨーロッパ生まれの地域イノベーションシステムの考え方がヒント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問題提起をするにとどまり、外発的成長を通じて横浜経済に蓄積された内発的発展への諸資源を踏まえて、転化の媒介項としての制度的仕掛けを提示し、制度拡張から経路修正を図る実践的な政策提言のレベルには至っていない。

大企業と地元大学との産学連携の包括的協定により、大学と地域のネットワーク化の動きが進んでいる。京浜地域における日産自動車と横浜国立大学、関東北部地域における富士重工群馬製作所と群馬大学、栃木県内企業群と宇都宮大学など県内大学との産学連携協定などが、その一例である。

進出大企業から地元企業への発注を促進する地域連携の取り組みは、とりわけ、関東西部地域（東京都多摩地域）で進んでいる。また、関東北部地域における群馬大学とバイオテクノロジー企業との連携など、大学と中小企業との地域連携による中小企業の新製品開発、新分野進出への支援活動も行われている。

本格的には、まだまだ、これからというべき現状ではあるが、進出大企業の地域に根ざした企業への変化、地域経済の内発的発展への変化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る。

3. 外発的成長から内発的知識経済の発展—米国ポートランド大都市圏研究への地域的制度アプローチ

米国北西部オレゴン州のポートランド大都市圏は、1960年代までは、森林や農業を背後地にもつ、木材・木製品輸出を中心とする港湾都市であった。オレゴン州は、1980年代に入ると、木材関連産業の衰退にともなう、日本のハイテク企業の誘致で地域経済の成長を回復させようとする外発的産業政策を展開した。インテルやHPといったシリコンバレー企業だけでなく、富士通、NEC、シャープ、信越半導体、エプソン、等々、日本の有力ハイテク企業のほとんどがポートランドに進出した。森林の豊かな地域へのハイテク産業の集積は、シリコンバレーをもじって、シリコンフォレストという命名を生んだ。木材関連産業、農業、電力産業など地元資本を主体とする地域経済から、外発的成長の分工場経済へとシフトしたのである。その後、日本のハイテク企業は、グローバル競争の下で、工場の縮小や撤退を重ねて比重を低下させたが、他方で、インテルは、15,000人規模まで従業員を増やし、インテルのための投資減税の導入に象徴されるように、ポートランドはインテルの企業城下町的性格を強めた4)。

ところが、2004年のデータによれば、ハイテク企業の集積は1,200社を超えるまでに至っている。有力な理工系研究型大学はないし、日本の進出工場からスピノフは生まれていない。インテルやかつて急成長したテクトロニクスという地元企業からスピノフやスピアウト（以下では、合わせてスピノフと一括する）による起業が続出して、多数の地元ハイテク・スタートアップ企業が活躍する地域になった。企業誘致、分工場経済化、企業城下町化といった外発的成長の道に転進した地域経済が、内発的発展の知識経済にシフトした。その変化の条件は何であったか。知識労働とその担い手の価値観に係る視点を導入して明らかにすること、それが筆者のポートランド研究であった。

第1 に、知識経済における知識労働の意義とスピノフ起業の可能性の拡大である。ハイテク産業であっても、工場労働の場合は、たいてい、企業特殊スキルの向上で生産性を上げる労働が中心である。工場労働から起業に至るケースがないわけではないが、不安定で厳しい下請け的な仕事に留まる場合が多いので、優秀な工場労働者が企業を飛び出す比率は高くない。また、日本企業の場合には、転職が好まれない閉鎖的な労働市場のため、知識労働の担い手も、会社に埋没し企業特殊な知識・スキルを磨くに留まる場合が多いので、会社の外に出て起業しても適用できるだけの一般性をもつ専門的知識・スキルの蓄積は弱くなり、それだけスピノフ起業のケースが少なくなる傾向がある。アメリカでもそのようなタイプの企業の場合には同様の傾向があろう。

一般に、アメリカでは、個人が自己投資によって、体系的専門知識を学ぶことを重視し、一般性をもつ専門的知識・スキルを向上させて、それを手段によりよい就業機会を得ようとする。知識ワーカーは、終身雇用制度や社会的規制などで仕事上の地位や所得、条件を守られる制度をもたないので、会社から簡単にレイオフの対象にされる場合が多く、自己の地位や条件、所得の向上は、自己の仕事能力による転職で守らざるをえない制度環境にある。知識労働者は、特定の企業の中だけでしか通用しない企業特殊な知識・スキルの向上への関心は弱い。自己投資してでも、あるいは、企業の枠を超えた自由な人的交流を通じて、一般的な知識・スキルの蓄積に努め、より良い仕事や地位、条件を獲得するために転職を頻繁に行う。米国の労働市場は開かれた制度環境を特徴としている、と言われてきた。

しかし、現代の知識労働の特徴を考えると、こうした区別は難しくな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たとえば、ITソフトウェア開発の仕事などでは、会社仕様の企業特殊な知識・スキルを重視しているようでいて、同時に、他の企業でも使える一般性をもつ専門的知識・スキルの蓄積が必須となる。いいかえれば、企業特殊な知識の蓄積は会社負担、一般的な知識の蓄積は労働者個人負担という人的資本論の伝統的区別は難しくなっている。企業は企業の負担をしてでも一般的な専門知識・スキルの蓄積を知識労働者に求める必要があるし、企業の負担で、企業の仕事や研修を通じて企業特殊な知識・スキルの向上を求めながら、同時に、企業の外でも通用するような、転職やスピノフ起業に使える一般性のある専門知識・スキルの蓄積の機会あるいはプロセスを経験させている、あるいは、そのような新しい可能性が広がっているのが、知識経済における知識労働の特徴であろう。研究開発型のハイテク産業の集積するポートランドの知識労働市場では、スピノフ起業を可能にする基盤としての、一般性をもつ専門知識・スキルの蓄積が進んでいると理解すべきであろう。

第2 に、ハイテク企業の知識労働には、転職やスピノフ起業に踏み切らせる事情がある。ハイテク企業には好不況の波が頻繁に押し寄せ、しかも、技術と市場の変化が激しいので、コア部門にいた知識労働者がノンコア部門に追いやられる傾向がある。身につけてきた知識と異なる分野の知識を基礎から学び直して従来とは違う仕事に転換せよと迫られる場合もある。この時、自分が強みをもつ知識を活かせる仕事はまだあると思う知識労働者は、自己の一般性をもつ専門知識・スキルを武器に、転職や起業を考えることになる。

第3 に、ポートランドにおける転職市場の制約と知識労働者が住み続けたいと思うような魅力的なまちづくりの成功という地域的事情である。ポートランドでは、多様なハイテク産業が大規模に集積しているシリコンバレーほど、転職可能な労働市場は大きくない。転職の道を探そうとすると他のハイテク都市に転居した方がよい場合が多い。他方で、理工系の研究型大学がないポートランドのハイテク知識労働者は、他の地域からやってきた人々が多いが、ポートランドの暮らしに魅せられた人が多い。アウトドア・スポーツの大好きな知的な人にはたまらない、いつでもスキーのできる年中冠雪のマウントフード、溪流遊びができる雄大なコロンビア川渓谷、美味しい高品質のピノ・ノワール・ワインや地ビール、都市成長の管理政策で周辺の農地や自然を保全し、中心部ではLRTや市電でゆったり商業・サービス業や多様な文化・スポーツを楽しむ

むことができ、クリエイティブ産業の集積も多い。いずれも、クリエイティブな仕事をする、ある種の知識労働の担い手たちが気に入りそうな生活環境である。ポートランドの暮らしが気に入った者同士の住み心地よさがいいという市民の間では、ポートランドに住み続けたいという想いが強い。その背後で、これを保障してきたのが、生活の質を守ってきた厳しい土地利用計画や都市計画、メトロ（大都市圏自治体）という地域的制度的役割であった。

こうして、転職に制約があると、住み続けたいとなれば、蓄積した一般性のある専門知識・スキルを活かして起業する、誘えば応じる仲間もいるので可能だという地域的制度的環境がポートランドにはあるということになる。結果として、ポートランド経済は、スピノフ起業が活発になり、地元のハイテク・スタートアップ企業が地域経済で大きな比重を占めるに至り、内発的知識経済へと転化したのである。

上記の3つの要因は、ここではポートランドに即して述べているが、実は、知識労働における企業特殊的知識・スキルに留まらない一般性をもつ専門知識・スキルの意義の増大、ハイテク産業あるいは知識集約産業に特徴的な仕事の変動が転職や起業に踏み切らせる可能性を広げること、知識ワーカーほど自然豊かで、文化に富み、高いレベルの生活の質を提供する住みよい都市に惹きつけられる、といった3つの条件は、各国の制度的構造の特殊性を超えて、ポスト工業館段階の知識経済に共通する論点である。それゆえ、従来は、スピノフ起業が起りにくい日本や韓国のアジア型国民的制度的構造の下でも、工業化時代と違って、知識経済への移行は、スピノフ起業の可能性を生むという仮説を立てる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問題提起を、筆者のポートランド研究は提起しているのである。グローバル経済のもとで、先進国経済は、知識経済化を加速せざるを得ない。結果として、先進国経済にいまなお生き残る工場は、分工場であっても、低熟練労働に依存する工場ではなく、研究開発機能を集積する工場である場合が多い。それゆえ、上記3条件を基礎として、企業誘致型産業集積からも、制度拡張の視点から工夫された地域的制度的仕掛けの整備によっては、スピノフ起業が活発になり、内発的知識経済への転化を導く可能性が生ま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仮説を立て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が筆者のポートランド研究の結論である。それは、制度的構造の違いから経路依存性による発展経路の違いを説く静態的な比較制度的アプローチではなく、制度的拡張による経路修正という動態的な発展の道を説く主体重視の発展論的で動態的な比較地域制度アプローチが重要であるとする筆者の地域政治経済学を支えてくれる客観的な条件が、知識経済の下で生まれつつあ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もある。

4. 辺境の分工場経済から内発的知識経済の発展—フィンランド・オウルの制度拡張方式による経路修正

フィンランドの北極圏に近い辺境地域・オウル（2007年オウル市人口13万人、オウル地域人口23万人）の経済は、元は、森林資源が豊富なことから、製材業、パルプ、タールの生産といった木材関連産業が中心であったが、いまでは、3万人の学生のまちであるとともに、ICT（情報通信技術）産業雇用が1万5,000人にのぼるハイテク産業地域へと発展している。

フィンランド経済は、福祉国家と情報通信技術産業の発展を両立させていると、世界から関心を集めている。通説的には、ノキアという巨大企業と福祉国家の協力関係が、フィンランドの成功の秘密とされている⁵⁾。

通説的理解に基づいて、オウルの発展を解釈すれば、政府が、ヘルシンキ地域に本社をおくノキアに無線通信事業部門の分工場をオウルへ進出させ、オウル大学とフィンランド技術研究センター（VTT）オウル支所をつくって、三者一体によるノキアの携帯電話事業の発展に取り組み、世界的な成功を収めた結果、オウ

ル経済の成長になった、という理解になろう。他方では、オウルの発展を「オウルの奇跡」と称賛する立場がある。故郷である条件不利な辺境地域・オウルを、エレクトロニクス産業の中心的拠点に発展させようと、大学教授その他、その成功を信じて挑戦を続けた奇跡の人々の情熱、貢献、協力が、ついに、ICT クラスタ・オウル経済の発展を生んだ、というわけである6)。

前者のアプローチは、充実した福祉国家の国では国際競争力のあるハイテク産業の発展は無理という世界の常識を打ち破る、衝撃的な問題提起をした点で新鮮な研究であるが、オウルという地域レベルでの協力による成果という地域的な問題視角は希薄である。

後者の理解における、地域に生きる人々の意欲と行動、協力を視野に入れる視点は重要である。この視点を入れずに、新古典派地域経済学のように、自由な市場における経済合理性の論理だけで地域経済を分析しようとすると、平板なものになり、発展という変化を生み出す実際の動態を明らかにすることは不可能になる。カール・ポランニーがいうように、経済過程の制度には、市場の交換だけでなく、互酬（協力）や贈与（再分配）がある。市場経済が発展している場合でも、学者や研究開発の技術者、ベンチャーの経営者など、成功した人々が育ててくれた故郷に恩返しをしたいとUターンして地域の発展に協力したり、大学や教育研究機関を設立したり、大口の寄付をしたりして、協力が市場経済における企業や産業の発展の始まりや基盤を作り、あるいは、再分配が市場経済の欠陥を補い、地域社会と地域経済の安定を作り出すという関係が成立することは、大いにあり得ることである。オウルの理解には、このような情熱と共感、貢献と協力の重要性をふまえた主体重視の発展論の視点が不可欠である。しかし、キーパーソンたちの情熱と貢献からの見方だけでは片手落ちであ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

しかし、筆者は、両者とも分析が一面的で、別稿で論じたように、オウル論には主体重視の発展論的で動態的な比較地域制度的アプローチによる論点設定が必要であると考えたものである7)。

安心して暮らせる北欧型福祉国家、終身雇用の安定的な労使関係、銀行中心の金融制度など、リスクを採って起業するビジネス環境の弱い制度的構造をもつ国では、自由主義経済モデルのアメリカのように、ICTやバイオなどラディカル・イノベーション分野の産業を発展させることは苦手で、大企業を中心とするインクリメンタル・イノベーションの特徴をもつ安定的な量産型産業で競争優位をもつ傾向があると考えられてきた。

日本は、中福祉国家ではあるが、同様の傾向をもち、後者に属する鉄鋼業や自動車工業、電気機械工業などで競争優位を示してきた。大企業がヒエラルヒー的企業内分業を空間的に展開（本社・研究開発・マーケティング機能は東京圏に集中、分工場現場を地方圏に分散）し、行政も同様にヒエラルヒー的に展開し、あわせて、東京を頂点とする垂直的国土構造を形成し、結果として、地方圏の内発的な発展や地方圏から国際競争力のある新産業が生まれることは稀となった。この点では、ノキアという一企業の比重があまりにも大きく、国家の役割も大きいフィンランドにおいても、ますます、ヘルシンキ中心の経済とノキアの本拠地が立地する地方圏の経済という垂直的な国土構造の関係が傾向として認められるはずである。

ところが、首都ヘルシンキよりも重要な意義を持って、そこから600km離れた北極圏に近い辺境のまち、オウルから、かつての世界に冠たる携帯電話産業の成功をはじめとして、フィンランドにおけるラディカル・イノベーション・タイプのICT産業の発展が生まれたのである。オウルの成功が契機となって、フィンランド経済の中心であり、ノキアの本拠地のあるヘルシンキ地域の経済発展が、より大きな規模で生まれたのである。

さて、今日、ノキアは、スマートフォン時代への移行を見誤り、最近停滞気味で携帯電話事業を売却したり、大規模なリストラを実施したりして再生の過程にあるが、オウル経済の発展が終わったわけではない。情報通信技術の分野はもちろん、その蓄積を梃子に、医療機器や福祉機器など他の分野で、ソフトウェア開

発や製品開発をして国際的に注目されている新興企業群が生まれているからである。マイクロソフトなど外国のハイテク多国籍企業が、オウルの知識労働市場に注目して進出するなど、新しい動きも始まっている。

いかにして、オウルという辺境の分工場経済から内発的な知識経済への転化が生まれたのであろうか。国民的制度的構造からは不向きと思われるタイプの産業の発展をめざす場合、国民的制度的構造の制約を超えて、新しい地域的制度的な仕掛けを創り出すような、主体的で発展論的な動的な地域制度拡張方式（従来の制度的構造に基づく経路依存を理解した上で、これまでになかった制度を導入して制度を拡張する方式で発展経路の修正を図る方式）の採用が重要な意義を持つことは、すでにふれてきたとおりである。この実践例がオウルなのである。

オウルでは、地元の多様な中小企業群が、進出大企業・ノキアの成長の地域的経済効果（ノキアから地元企業への発注）を享受しながら、受注に伴う技術刺激を競争力強化の契機としつつ、しだいに特定企業への依存度を下げ、独自の国際競争力を強化しつつ多様で自律的な発展を遂げることに成功した。結果として、ノキアと地元中小企業とのWin-Win的協力関係が原動力になって、オウル経済は、国際的に注目されるICT産業の開発拠点として発展し、外発的成長から内発的発展への経路修正に成功するに至った。この成功を導いた制度的媒介項は何であったか。オウル・モデルについては、中村[2008] 序章で紹介しているので割愛するが、ここで取り上げるのは、とりわけVTT（フィンランド国立技術研究センター）オウル支所の役割であり、VTTオウル支所が打ち出した制度拡張的地域の実験である。

一般に、イノベーション競争を特徴とするポスト工業化段階たる知識経済の時代には、大学と企業との産学連携モデルが持て囃される。しかし、産学連携は、多くの場合、大企業による大学の研究機能の活用であり、共同研究開発の成果は個別大企業が独占的に享受して、地域の諸企業の技術力の向上その他へと広がらない。大学の研究は、基礎研究レベルの研究が多く、産学連携の相手となるのは、中小企業よりも、基礎研究レベルの研究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必要としている大企業である場合が多い。中小企業が開発機能の強化が必要としているのは、多くの場合、基礎研究レベルよりも、企業の製品やサービスの開発と直結するような応用的な技術レベルの研究である。

ところが、日本では、かつての神奈川県頭脳センター構想において、誇らしげに、大学院レベルの先端的研究機能を担う研究機関を創設したことに示されるように、産学連携が地域経済の研究開発機能を強化し、生産機能から研究開発機能中心の地域経済への転化に重要な役割を果たすはずだという現実性の弱い議論が盛んである。

実際には、研究開発競争の時代に、地域の中小企業が必要としているのは、大学の基礎研究レベルと中小企業の具体的な製品・サービス開発の技術レベルとを媒介するような、つまり、大学や大企業における先端的研究動向や技術開発動向を理解しつつ、地域中小企業の商品開発レベルの技術ニーズをも理解して、媒介役を果たして地域中小企業の技術力やマーケティング力などの改良を促進するための共通インフラの役割を果たしてくれるような、地域の中小企業が共同利用できる新しい応用技術レベルの研究・開発機能の存在である。そのための応用技術開発を専門とする、地域で共同利用可能な研究所の創設と役割こそが、地域経済の下からの発展にとって決定的に重要な政策課題といえよう。その役割をオウルで果たしたのが、VTTオウル支所であった。

VTTオウル支所は、地域のIT開発業者たちにソフトウェア開発技術の最新成果を提供することによって、ノキアからの下請けの受注に依存するオウルの中小企業のソフトウェア開発の技術水準を高めた。結果として、オウルの中小企業群は、ノキアとの取引によってノキア固有の企業特長的技能を蓄積するだけでなく、その仕事に従事しつつ、VTTのおかげで、より一般性をもつ一般的知識の蓄積を進め、ついには、脱ノ

キアを果たす力を形成して、中小企業といえども国際企業として成長するに至った。VTTオウルは、地域中小企業に技術支援のための技術と人材を送る地域的制度を作り出しただけでなく、VTTの技術研究者たちに、企業レベルの技術開発に近い仕事をさせることを通じて、スピノフ起業を勧め、地域の革新的なスタートアップ企業を担う起業家人材として地域に大量に送り出す役割をも果たした。安定した身分保障のある研究職から起業というリスクのある仕事に飛び出す職員を多数生み出すには、それなりの制度的条件がなければ困難である。安定指向の強い北欧型福祉国家で、そのための制度拡張的実験として導入された制度が、起業して経営に失敗した場合は元の技術研究の仕事に戻れることを保障したり、起業後もVTTの最新技術情報を提供したり、連携したりして支援する制度であった。長期雇用や安心を特徴とする高度福祉国家の国で、ラディカル・イノベーションを特徴とするIT産業分野でスピノフ起業を多数輩出させるという経路修正をやったのけることができた背景にあるのは、実に、発展論的動態的な比較制度的アプローチとしての制度拡張方式の仕掛けだったのである。

辺境地域など条件の不利な地域ほど、内発的発展を必要とするが、実は、内発的発展のポテンシャルは小さく、実現は難しい。内発的発展論のこの弱点に対して、オウル・モデルは、克服可能であることを示したのであった。フィンランド政府は「オウルの奇跡」と称え、他の辺境地域でも応用可能な発展モデルとして広めるための地域政策を展開するに至った。地域の制度的実験の成功が国の政策を創造し、地域の内発的発展を支えるための国の地域政策を生み出すという関係が生まれたのであった。

具体的には、技術開発など経済発展と福祉の充実を両立させる、それぞれ独自の多様な「発展の極」を多数のサブリージョン・レベルの地域に形成するように促すとともに、これらが、広域地域ごとに形成される高次の発展拠点（オウル）と、さらに、首都に形成する国際級の発展拠点（ヘルシンキ）に結びつき、ローカルな地域が自前では得られない必要な技術情報ほかを、いつでも迅速に入手できる多層的発展支援体制を整備する地域政策であった。

日本では、国家の成長戦略は大都市圏に向けられ、地方圏に対しては、地域の自助努力による自前の内発的発展の必要を説いて国家の地域政策の責任を縮小しようとしている。これに対し、フィンランドの地域政策は、グローバル競争や知識経済への移行のもとで、地方圏における内発的発展がいつそう困難になっている現状をふまえて、現代の内発的発展論は、国家が内発的発展を支えるための国の制度的な仕掛けを積極的に整備して国家の役割を果たすことが重要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筆者は、著書『地域政治経済学』における「内発的発展論」の項の末尾で、古い中央集権的福祉国家や新自由主義的国家を超える、多様な内発的発展を軸にしなが、これをサポートする「新しい第3 の国家像」の展望が必要になっていると説いたが、ここに一つの試みを見ることができると書くのは、時期尚早あるいは過大評価であろうか。ともあれ、地域経済の内発的発展と国家の地域政策との関係は、知識経済における国家のあり方をめぐら問題を含めて、決定的に重要な政策課題になっている8）。

5. 忠清南道地域経済の内発的発展への道を考え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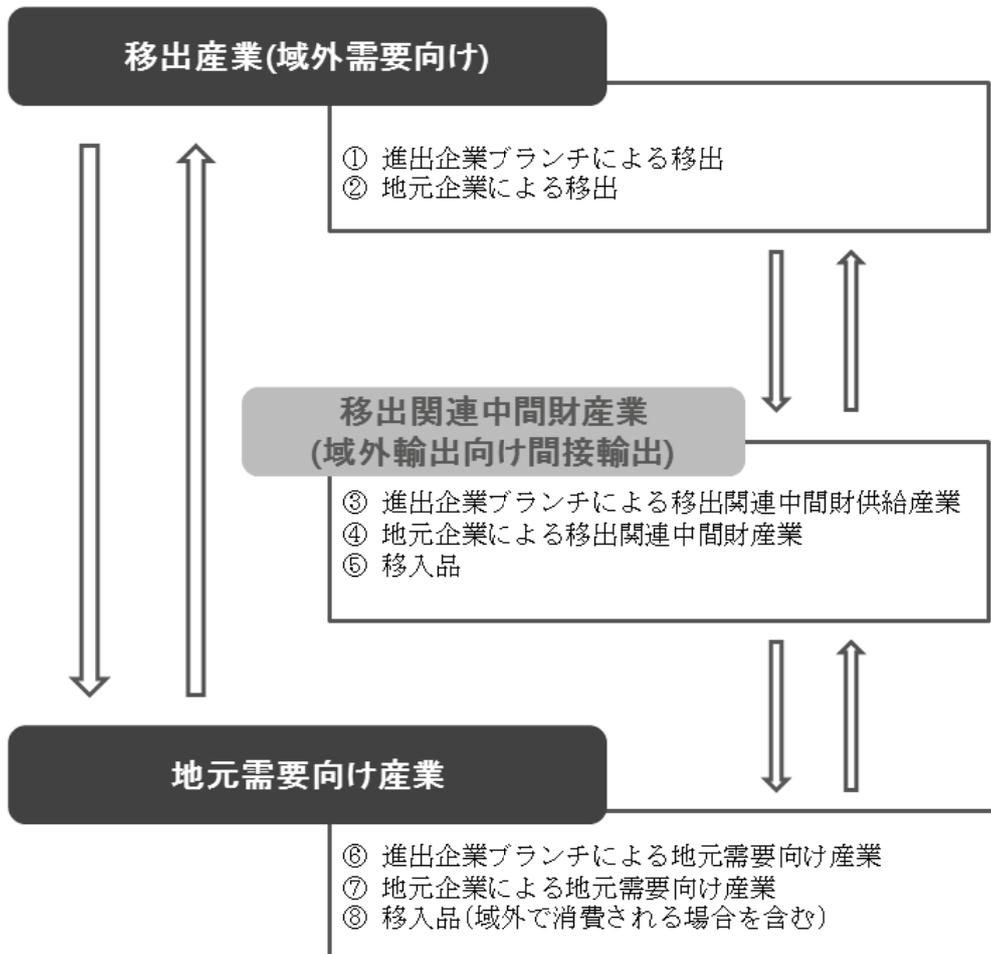
外発的成長による分工場型経済を特徴としてきた忠清南道地域が、地域経済の自立と経済の地域内循環の深化を実現する内発的発展の道へと舵を切ることは可能か、という今回のシンポジウムのテーマを考えるために、小論は、そのためのヒントとなる先行事例を紹介しながら、外発的成長から内発的発展への経路修正には、動態的な地域制度的アプローチの視点と方法からの漸進的な接近が重要なカギを握るであろうと、筆

者の見解を理論のレベルで問題を提起してきた。

忠清南道地域における経路修正を導くための具体的な政策構想を展望することは、地域政治経済システムの実態分析、政策主体や制度的諸条件の具体的な分析と動態的な展望を踏まえて、現地の研究者や政策決定に関わる人々、地域諸アクターによる共同的課題として行われることであり、忠清南道地域をめぐる内外の諸条件、その現実を知らないし、その主体でもない、ただ、外から、海外の先行事例研究の紹介を行うにとどまる筆者の立場を超える課題であること、いうまでもない。ただ、これまでの検討を基礎に、政策論的な論点について、もう少し整理をして言及しておくことは必要かもしれない。

地域経済学では、地域経済の発展を、産業の発展という視点から考える時、地域経済を構成する諸産業を、地域外の需要に対応して所得を稼ぐ移出(輸出を含む)産業、地域内の需要に供給する地元需要向け産業、地域内の需要に域外からの供給で対応する移入に分けて分析する、伝統的な方法がある。移出産業には、直接移出を担う産業と、それを支える間接移出の性格をもつ供給産業(中間需要向けのサプライヤー)がある。地元サービスは、地元市場が必要とする財サービスを直接・間接に供給するする産業であり、サービス産業だけでなく、製造業、建設業、商業ほか多様な産業が含まれる。移入には、移出産業に必要な原材料や部品を供給する移入品と、地元での消費に関わって域外から移入されるものがある。移出産業が成長すると、中間需要向け産業の成長をもたらし、それらの産業に従事する従業員が賃金を得て地元で消費すると、地元需要向け産業が成長する、といった経済の地域内循環が生まれる。それらを示すのが「図1」である。

[図1] 地域経済を構成する産業と循環



農村地域だった地方圏が工場誘致で外発的成長を進めた場合にしばしば見られる分工場型経済の場合を例にとると、地域の移出産業が、地方圏の低賃金労働の利用を求めて立地した進出企業のランチであり、その生産に必要な原材料や部品、サービスなど中間財が域外から調達される比率が高い傾向があり、移出産業の地域経済効果としての経済の地域内循環は、中間財需要が小さいので浅く、従業員の消費による地元需要向け産業への需要が中心で、全体として小さくなる。地域の労働需要は、低熟練の工場現場労働に限られるので、労働者の所得水準は、農村経済の時代の所得水準よりも高くなるとはいえ、全国的には相対的に高くないので、地元需要産業への需要も、質・量ともに制約されるので、第3次産業をはじめとする地元需要産業の成長も相対的に制約される。企業の利益は域外の本社に漏出する。地域の工場による生産所得が、本社のある大都市に漏出し、地元での設備投資や技術進歩、企業戦略構築のための情報・調査活動の支出など、地域内に再投資されるとは限らないことになる。また、進出企業が少数の特定企業に限られる地域経済においては、グローバル経済のもとでは、企業が海外生産にシフトしたり、工場を縮小したり撤退したりする場合は頻繁にみられるので、それだけ、不安定性を強めることになる。

これに対し、京畿道の場合がそうであろうが、進出大企業に中間財を供給する中小企業が地域で成長し集積している場合には、移出産業から派生する中間財需要に地域の中小企業が対応し、経済の地域内循環は、地方圏の分工場型経済の場合よりも深くなり、大きくなる。

もっとも、輸出主導型経済を基調とする韓国の場合、国際競争力強化の国家戦略から、1産業1企業（あるいは、せいぜい2企業）といった産業集中戦略を採っている。このため、サプライヤーとしての中小企業は、多様な企業に納入して交渉力を強化し、自立しているというよりも、特定大企業の下請け依存的性格をもつことになって、絶えず、コストダウンを要求されている。結果として、中小企業の利益率は低く、技術力向上への余裕が生まれにくく、従業員の賃金も低くなるので、地元需要向け産業への経済効果も制約されることになる。

ソウル市内に近いと、進出企業が必要とする専門知識サービスや消費者が求める高級消費は、ソウル市内に流出するため、やはり、企業向けのサービス産業や消費者向けのサービス産業の発展が制約されることになる。地域経済の発展に重要なのは、移出型の製造業の成長と思われがちであるが、実は、多様な第3次産業の発展こそが、経済の地域内循環を深化させ、地域経済の安定的な発展をもたらすものであり、多様な仕事口を用意する。製造業の生産現場機能による移出が増えても、中間財産業や地元需要向け産業の発達が弱いと、経済の地域内循環が小さくなり、地域経済の発展が制約される。大都市経済の場合、たいてい、製造業の生産機能よりも、第3次産業の発展が、地域経済の構成において大きな比重を占めている。もっとも、サービス産業には、とりわけ、企業向けであれ、消費者向けであれ、専門的サービス産業の成長においては、規模経済が重要で、大きな需要の存在（市場圏）を背後に持っていることが成長の条件になり、集積が集積を呼ぶ傾向をもっているので、大都市ほど優位になるという特徴がある。この面からも、ソウルの優位性が強化されているといえよう。

忠清南道地域が、外発的成長の限界を超えて、地域経済の自立的発展と経済の地域内循環の深化をめざして内発的発展の道を指向するとした場合、さまざまなルートがありえよう。

忠清南道地域に集積する政府出捐研究機関からのスピノフ起業を支援し、バイオテクノロジーやナノテクノロジーなど、新しい成長産業における新興企業を育成することは、地域に根ざした新しい移出産業の創出の課題として重要である。

既存の移出産業のいっそうの振興も課題となる。農業に強い忠清南道においては、日本でいう6次産業化による農業の多角的な発展で付加価値を高めて移出産業としての発展をめざすことも重要な課題であろう。6次

産業化とは、第1次産業としての農業が生産する農産物を加工して第2次産業として展開し、さらに、農産物や農産物加工品を販売する機能をも担って、直売所を設けたりネット販売をしたり、観光と結びつけたり、ホテルやレストランで地元の食材を使用したおいしいメニューを開発して提携する、お土産として販売するなど販路を広げる、といった形で第3次産業としての展開を図るというものである。

外発的成長か内発的発展かに関わらず、地元需要向け産業の充実・振興を図って、経済の地域内循環を深化・拡大することは、たいへん重要な課題である。とりわけ、医療・福祉・教育・文化・環境の分野におけるサービス産業と関連製造業の発展を地域で起こしてゆくことは、これからの韓国経済でますます比重を高めていく、新しい成長産業分野であるだけに、注力に値する課題である。従来は公共部門を供給主体とする公共サービスの分野と見なされてきたが、財政的制約の問題だけでなく、市民の多様なニーズに応えることによる発展という視点からも、NPO（非営利組織）や民間企業・事業所を担い手とする公共サービス分野の新たな発展が期待されている。地域公共サービス分野は、地域社会のニーズと結びつく分野であり、住民の参加と協力、非営利組織（NPO）の活躍や地域公共部門の役割と結びつく形で地元の企業や事業所を軸に、地域諸アクターのパートナーシップにより、地域から内発的に発展させること可能性の高い事業分野といえよう。

ほかにもいろいろあろうが、最後に、前節までの検討との関連で、外発的成長の内発的発展への転化の道を構想しよう。

サムスン電子や現代自動車など、忠清南道における進出大企業のブランチ（分工場）は、単なる工場現場労働が中心か、それとも、研究開発機能持つ工場か、という点が重要である。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もでは、先進国経済における工場は、自動化で省力化（雇用削減）を進めたり、研究開発機能を付設し、高付加価値品の生産へシフトしたりしないと、存続が難しい。

たとえば、日本の化学メーカーに日本ゼオンという会社がある。同社の高岡工場は、地方圏に立地する典型的な分工場である。グローバル競争のもとで、日本では、低賃金労働を立地因子とする地方工場の多くは、研究開発機能を持たず、価格競争に巻き込まれて、縮小や閉鎖に追い込まれてきた。日本ゼオン高岡工場もまた同様の運命にあるはずであったが、実は、高岡工場の生産現場における熟練労働の優秀さが注目され、工場閉鎖を免れるどころか、首都圏の川崎にある日本ゼオンの拠点工場から、成長分野の先端的な精密加工機能の移転を受け、新たに精密工学研究所を併設して、工場の熟練労働と製品開発機能を結びつける方式で、国際競争力を強化し、いっそう発展することになった。

この意味で、忠清南道の分工場群が、研究開発機能を併せ持つ先端的な工場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るか、あるいは、今後、そのような発展方向を持ちうるかが、その存続・発展にとって、決定的に重要である。それは、単に分工場の生き残りの課題に留まらない。

製品の高付加価値化を進める生産現場と研究開発機能の結合を基礎とする工場の存続・発展は、中間財需要を増やすので、地元企業への発注増につながる。従来、京畿道その他からの移入品で中間財需要が賄われていたとすれば、移入品の地元での生産代替が進む可能性が広がる。大企業からの下請け受注や、移入代替を基礎に、技術力やマーケティング力を高めて、やがて、地元の中小企業が、脱下請けに成功し、自立した国際企業へと成長していく道が生まれよう。進出大企業は、グローバル競争の激化の下で、大企業に依存する従順な下請け企業を必要とする段階を超えて、いまでは、自立できるほどの高い技術力をもつ協力企業の発展を必要とするに至っている。大企業と地元中小企業との間の、垂直的下請け関係ではなく、水平的協力関係の構築こそが、進出企業の競争力を強化する源泉となる時代が到来しているのである。

しかし、中小企業が技術力を強化して、大企業に協力企業として認められるには、中小企業の自助努力だけ

では難しい。ここで想起されるべきは、第4節で紹介した、フィンランド・オウルにおけるノキアの発注と地元中小企業の受注をめぐるWin-Win関係の構築プロセスである。両者の垂直的な関係から水平的な関係への転化を媒介したのは、中小企業の開発機能の向上に貢献しようとする、さらには、多数の優秀な研究スタッフにスピノフ起業を奨励して地域に高い技術力をもつ中小企業の叢生を生み出してきた、応用技術に特化した、それでいて、大学における高いレベルの研究成果を吸収し、中小企業レベルの開発機能支援を専門にする国立技術研究センター・オウル支所の独自の役割であった。忠清南道においても、この教訓から学ぶ取り組みが行われてもよいのではないであろうか。産学共同よりも、大学の研究水準と中小企業の開発機能の中間に位置する、応用技術専門の研究機関を創設し、技術力向上支援だけでなく、研究職員のスピノフ起業を奨励する制度設計を行うことが重要な鍵となることは、すでに第4節のオウル論で指摘した通りである。

サムスン電子などICT分野の産業はもちろんのこと、IT化を加速させている自動車産業においても、ソフトウェア開発に絞った応用技術専門の地域の中小企業の開発機能支援に特化した共同利用研究センターを設置する意義があるといえるかもしれない。電気自動車や燃料電池車の時代に移行するにつれて、ますます、自動車産業ではソフトウェア開発力が重要になる。バイオテクノロジーの場合は、大学院や高度な研究機関での研究がビジネス化に直結する分野であるので、必ずしも、中小企業に近い応用技術専門機関を必要としていないかもしれない。創業ビジネスや再生医療など、まさにその通りと言えようが、たとえば、再生医療における培養プロセスが、いまのような研究者による手作業を中心とする産業化以前の段階から、やがて、機械による自動化の段階へと移行することを展望する時、再生医療用機械の開発と生産には、ソフトウェア開発も含めた、中小企業の開発機能を支援することに特化した応用技術専門の地域研究センターの設置は重要な意義をもつといえるかもしれない。

ともあれ、スピノフ起業を奨励する制度設計は、進出企業からのスピノフ起業や政府出捐研究機関からのスピノフ起業の奨励においても、重要である。日本と同様、韓国の経済社会においても、個人の自立よりも組織に依存して行動する傾向が強い。アメリカのように、個人の自立を好み、リスクをとって起業する産業的雰囲気は弱い。それゆえ、優秀な研究者や技術者、あるいは、マネージャーが、安心して起業に踏み切れるような制度設計が必要になるのである。単純に、ベンチャー企業の育成を謳って、スタートアップへの資金助成を打ち出したりするだけでは、ベンチャーの叢生は実現しないのである。

日本や韓国では、大企業は、スピノフ起業を好まず、むしろ、妨害する傾向さえある。実は、スウェーデンの世界をリードする通信技術企業、エリクソンにおいても、かつては、同様であった。しかし、それでは、個人の自由と創造性、その組織化が決め手となる知識経済段階の競争に対応できない。そこで、エリクソンは、スピノフ起業を抑え込むことから、認めたくて、スピノフした元従業員企業との連携へと企業戦略を転換するに至ったのである。同様の動きが、大企業中心の安定志向の強い制度的構造を持つ日本や韓国の大企業において、始まるであろう。従業員の側においても、第3節のポートランド論の項で指摘したように、研究開発機能を強化する経営のもとでは、企業特殊知識・スキルに留まらず、一般性をもつ専門知識・スキルを蓄積していくことになるので、スピノフ起業を容易にする主体的条件を強化している。

ただ、研究者・技術者がスピノフ起業をしようとしても、忠清南道地域で行うとは限らない。ソウルや京畿道地域で行おうとするかもしれない。この意味では、やはり第3節で述べたように、知識労働の担い手にとって、忠清南道地域に住み、ここで起業したくなるような魅力を地域が形成することが重要となる。そして、魅力的な住みよいまちづくりは、地元企業を主体とする、経済の地域内循環を深化させる地域経済の発展へとつながってい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この意味では、ソウルにはない、農業が盛んで、自然と歴史に富んだ、農村風景をも持つ都市の魅力といった、忠清南道地域の魅力を生かした地域づくりが重要にな

る。また、知識労働の担い手たちは、自然や歴史を好むだけでなく、何よりも、個人の自由や個性の発展、多様で異質な人材との相互刺激、世界の先端的な動きとのつながりを好むので、知識労働の担い手たちのニーズにフィットした社会的寛容性と情報空間の形成についても重視する必要がある。ポートランド論で論じたように、大都市圏から離れた地方圏で内発的な知識経済としての地域経済を形成するには、まちづくりと一体化した形で地域経済の発展を考えることが重要なのである。

さらにまた、第2節の日本の京浜地域で指摘したように、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のもとで、大企業が事業再構築を迫られ、知識集約企業へと進化して行くプロセスにおいて、従来、大企業が、大企業のビジネスにふさわしい規模での大きな事業化を見込めないとして、企業内に抱えてきた特許技術を、中小企業にライセンス供与をする動きが生まれるであろう。大企業の技術者が中小製造業に技術指導をしながら技術移転を円滑に進め、新製品開発へと連携してつなげて行く動きが生まれるなら、地域経済の外発的成長から内発的発展への転化の道の一つとして注目できるのではないか。そのための仲介役としての行政による知的財産移転交流のための地域政策の展開が期待される。第2節で紹介した進出企業と大学と地元中小企業との間の地域連携の取り組みも、進出企業が地域に根ざして競争力を維持し、同時に、地元の中小企業の発展を生み出す試みとして、発展が期待される。

忠清南道地域の新たな内発的発展への前進を祈って、報告を結ぶこととする。

注

1. 筆者の金沢研究については、中村剛治郎[2004]『地域政治経済学』第4章・第5章、有斐閣に再録されている。
2. 筆者の京浜地域研究については、中村剛治郎編著[2008]『基本ケースで学ぶ地域経済学』第2章、有斐閣、中村剛治郎[2013]『地域問題と地域問題をめぐる研究課題—地域政治経済学的アプローチの歩みを通して』、『経済地理学年報』58巻4号、中村剛治郎[2008]『京浜臨海部の再生に向けて』、『専修大学都市政策研究センター研究年報』第4号、参照。
3. 横浜市経済局・株) 浜銀総合研究所[2012]『「横浜経済の内発的発展」実態基礎調査報告』横浜市経済局経済企画課。
4. 筆者のポートランド研究については、前掲『地域政治経済学』第9章、前掲『地域問題と地域問題をめぐる研究課題—地域政治経済学的アプローチの歩みを通して』、参照。
5. Castells, Manuel & Himanen, Pekka.[2002]The Information Society and the Welfare State : The Finnish Model,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カステル, マニユエルとヒマネン, ペッカ著, 高橋睦子訳[2005]『情報社会と福祉国家—フィンランド・モデル』ミネルヴァ書房)、参照。
6. Kulju, Mika[2002]Oulun Ihmeen Tekijä, Helsinki:Ajatus Kirjat(クルユ, ミカ著, 末延弘子訳[2008]『オウル奇跡—フィンランドのITクラスター地域の立役者達』新評論)、参照。
7. 前掲『基本ケースで学ぶ地域経済学』序章、9章や前掲『京浜臨海部の再生に向けて』、前掲『地域問題と地域問題をめぐる研究課題—地域政治経済学的アプローチの歩みを通して』、参照。
8. 前掲『地域政治経済学』第1章、参照

02

[글로벌경제위기의 시대, 자율적 지역경제의 가능성을 묻다]

“분공장경제로부터 자율적 지역산업진흥으로 - 이와테 모델의 재고”

“分工場経済から自律的地域産業振興へ -
岩手モデルを再考する”



오다 히로노부(小田宏信)

세이케이대학 교수
成蹊大学教授

분공장경제로부터 자율적 지역산업진흥으로: 이와테 모델의 제고

오다 히로노부(小田宏信)

(세이케이대학 교수, 일본지역경제학회 국제이사)

1. 포디즘과 기업내 지역간 분업, 분공장 경제

1880년대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도약(Take-off)을 달성한 일본의 공업은, 제 1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대전기간 중 중공업화, 장치화의 기초를 형성하고 제 2차 세계대전후 고도경제성장기에는 기초소재산업, 가공조립산업의 폭발적인 설비투자를 실시하여 눈부신 공업생산의 성장을 이뤘다. 1970년대에는 일시적으로 주춤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명실공히 공업대국, 기술입국이라는 세계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1년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일본의 제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각국의 생산기지의 이관이 현저히 진행되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닫힌 시스템'인 일본공업의 분업시스템은 단번에 국제적으로 '열린 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심포지엄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분공장경제'의 문제가 표면화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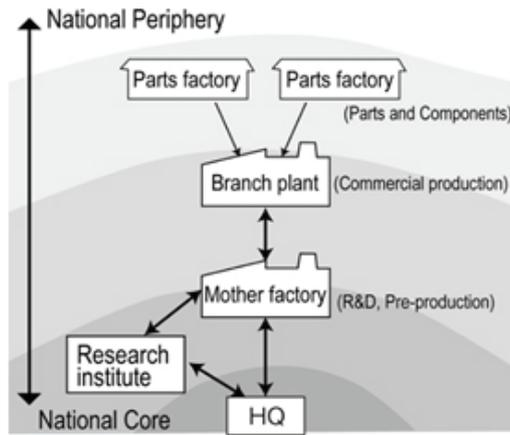
먼저, '분공장경제'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이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분공장경제'라는 것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경제체제, 즉 포디즘이 지리적으로 발현된 현상이었다. 1903년에 포드 모터 컴퍼니를 창립한 헨리 포드는 1908년, 지나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부품들을 조립해 가는 최초의 차종, 'T형 모델'을 발표하였다. T형 포드는 1927년에 제조를 중단하기까지 약 20년에 걸쳐 1500만대가 제조된 세계 산업사에 이름을 남기는 양산자동차이다. 포드는 이 때까지 실시된 미국의 공업생산방식을 특징짓는 호환성생산을 기초로 한 테일러주의(Taylorism)에 컨베이어벨트 작업방식을 부가한 포드형 생산방식을 확립하였다. 포드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제품가격의 저렴화와 노동자에 대한 임금상승을 실현하여 대량생산이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20세기형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제품가격이 저하되고 다른 쪽에서는 임금이 상승되면 수요는 확대되고 추가적인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된다는 황금 사이클은, 그에 적합한 공업입지 및 그외 지리적 편성을 동반하게 되었다. 헨리 포드는 제품사양의 규격을 철저하게 표준화하면 농촌의 미숙련노동력으로도 부품제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고안하여, 빌리지 플랜트(Village Plant)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품공장을 디트로이트 교외에 분산시켰다. 포드는 임금지향 이라고 표현하나, 공장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농촌의 소득수준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농촌이 부유해지면 제품시장이 확대된다고 생각하였다.

포드가 구상했던 지리적인 생산방식은 이화학공업(리켄) 및 마쯔시타전기(파나소닉)을 필두로 하여 많은 일본 기업이 수용하게 되었다. [그림 1]은 기업내 지역간 분업을 모형화한 것으로 국토 중심부에서 관리를 통솔하여 최종제품을 만들어내고 주변 지역에서 부품제조를 실시하는 방식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전기, 전자공업을 포함한 대다수의 가공조립형 공업의 입지모델이 되었다.

[그림 1] 기업내 지역간 분업 모식도



출처: 필자작성

이런 의미로 보면 한 국가 내 분공장경제의 파탄은 20세기형 자본주의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말에 대한 대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해답을 찾지 못한 명제이기는 하나, 분공장경제에서 탈피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러한 원대한 테마에 착수한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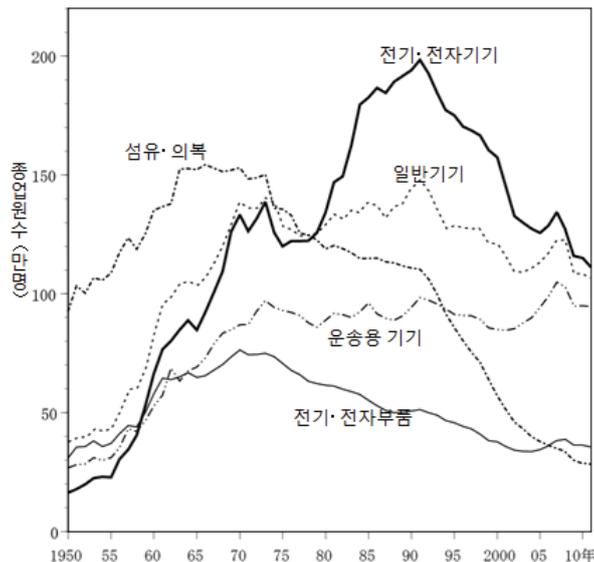
2. 일본 제조업의 동향과 지역구성의 변화

(1) 일본 제조업의 동향

주요업종의 종사자수의 추이(그림 2)를 통해 최근 반세기의 일본공업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자.

전쟁 전기부터 일본공업의 주역이었던 섬유공업은 1960년대 초반에는 성장이 한계점에 이르렀으나 그에 대신해 전기, 전자기기, 일반기기, 운송용 기기와 같은 가공조립계열의 업종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고도경제성장기의 중반인 1965년 불황 때에는 일시적으로 성장이 둔화되었으나 석유파동이 닥쳐온 1973년까지는 가공조립계열의 세 업종을 통해 고용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일본 주요업종의 종업원수 추이



출처: 竹内·小田 編 (2014)

제 1의 전환점은 1973년이고, 이를 계기로, 섬유계열 업종, 금속계열 업종에서 명시적인 고용감소가 보였고, 또한 일반기기, 운송용기기가 정체상태로 접어들고 있던 중,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를 통하여 전기, 전자기기공업이 다른 업종을 압도하는 고용확대가 계속되었다. 말할 것도 없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배경으로 한 신제품개발이 그 배경이었다.

제 2의 전환점은 1991년이다. 버블붕괴와 그에 따른 제 2차 엔고현상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국내로만 향했던 설비투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의복산업에서는 수탁생산을 포함한 해외생산을 확대하여 전기, 전자기기공업도 왕성한 직접투자에 따라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관하게 되었다. 이 결과 지금까지의 업종 중 노동집약적인 직종에서 미증유의 고용감소가 일어났다. 이 시기에 운송용기기 및 일반기기에서도 해외진출을 추진하나, 내수형 생산이 국내에 여전치 유지되어 있었던 것과 중간재 및 자본재 생산에서 국내 기술집약에 의존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장기적 추세로는 고용이 정체되어있는 상태였다.

고용 측면에서 보면, 일본공업의 공동화가 확연히 진행되고 있다. 국세조사 베이스로 제조업 종사자 수가 피크에 달하는 시점이 1990년 시점인데 이 때 1464만 명에 달하였다. 일본의 총 종사자수에 대한 비율은 24%였다. 그러나 2010년 국세조사에서는 963만명, 16%까지 축소하고 있다. 15년 사이에 500만 명에 가까운 종사자수가 감소하였고 1960년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청부, 파견 노동자의 신분으로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제조업에서 종사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사업소 서비스업의 고용 성장은 제조업 고용의 축소를 상쇄시킬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2) 지역구성과 그 변화 - 분공장경제의 형성 및 논리의 파탄

위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일본공업은 너무나도 급격한 구조변화를 거쳐왔으나, 이러한 구조변화는 매우 명료한 지리적인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내의 공업배치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공업은 지리적으로 보면 협소한 국토 내에서 더욱 협소한 범위 내 공간적으로 편재되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공업배치를 규정짓는 것은 도쿄(케이힌), 오사카(한신), 나고야(츄쿄)의 삼대도시권의 공업지대와 그들을 잇는 북부 큐슈지방에 연장된 선을 축으로 하는 지대(태평양벨트)에 집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정부에 따라 추진된 산업정책은 태평양연안 입지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소득배중계획에 따른 태평양벨트 구상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러한 지역의 전방산업의 입지는 부근의 전방산업이 입지를 촉진시켜 기초소재산업의 틀 안에 제한되지 않는 누적적인 공업집적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석유파동 이후 소재형 산업을 대신한 가공조립형산업이 신장하여, 그 중에서도 노동집약적부문이 노동력공급면에서 혜택을 받게되고, 그 위에 비교적 임금수준이 낮은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진출을 도모하였다. 특히, 전기, 전자기기공업 입지에는 비교적 빠른 시기부터 기업내 지역간분업의 논리가 채택되었으나 1960년대부터 나가노현 및 동북지방, 큐슈지방 등에 노동집약적인 부분공정을 부담하는 분공장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분공장은 농촌마을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한 국지적 생산체계를 형성하여 농촌 외 취업의 확대와 생산거점의 저임금노동력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불러왔다. 지역간분업의 양상은 당초 대도시권의 개발 및 최종제품 생산, 한쪽은 지방권의 부품 노동 집약적 생산이라는 심플한 형태를 띠었으나, 점차 지방공업이 제품을 개발하거나 일관생산화를 도모하는 등 복잡한 기업내 지역간 분업으로 발전하였다. 때마침 고속도로망이 정비되어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대도시와 지방에서 공정을 분담하는 기업내 지역간 분업구조를 이뤘다. 대도시권의 집적과 지방권의 분산이라는 양륜으로 일본의 기술입국이 실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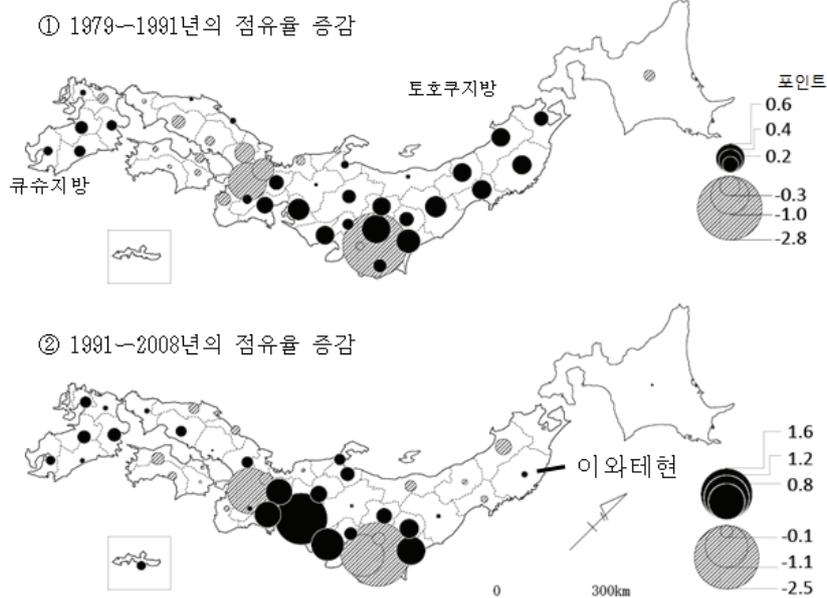
이러한 국내의 지역간 분업의 논리가 붕괴하는 것은 1990년대 후반이며, 제 2차 엔고 때, 생산의 해외

이관과 국경을 넘는 지역간 분업 구축이 진행되고 있던 중,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나가노현 등에서 놀라운 추세로 고용조정이 펼쳐졌다. 대규모 제조업체의 지방분공장은 소량생산품의 제조에 특화되어 있거나, 모공장(mother factory)으로 성장을 도모하며, 또한 비정규고용의 생산청부업의 사내외주 확대를 통해 작업을 유지한 공장도 많으나 그 외 협력공장에서는 폐업 및 업종전환에 빠지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전기, 전자기기공업에 닥친 고용조정 물결은 2001년까지 계속되었으나 2003년 전후를 경계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평판 TV의 개발에 따라 국내 설비투자가 활성화되게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내회귀는 대도시권회귀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사프의 카메라야마 공장, 사카이공장, 파나소닉의 아마가사키 공장의 건설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경향을 상징하고 있다.

대도시권 회귀요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으나, 첫 번째, 버블붕괴 후 지가하락에 따른 대도시권입지의 비용부담이 감소했다는 것, 두 번째, 큰 소비시장 및 수출항만으로의 접근성이 재평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평판TV 생산을 놓고 보면, 패널류 생산은 가공조립산업이라기 보다는 거대장치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오사카만(灣) 등에서 감가된 부동산-산업유휴지-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요인이다. 세 번째로, 개발현장과 생산현장 사이의 공간적 거리를 줄이려는 새로운 기업전략이 움직였기 때문이다. 제품개발이라는 것은 생산현장에서 볼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까지 포함한 것으로, 항상 생산현장의 현상을 보지 않으면 생산비용까지도 의식한 제품개발을 행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제품사이클의 단축이 필요하다면 지금까지의 기업내 지역간분업 체제에서는 높은 빈도에서 요원을 파견해야 하는 기업내 조정비용이 결코 무시할만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개발에는 다양한 관련기업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도시권이 외부경제상, 우수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네 번째, 대도시노동시장과의 연결성 때문이다. 예전과 같은 고용형태에서는 노동비용 상, 대도시권보다는 지방권이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비정규고용이 대의명분을 가지게 된 지금에는, 대도시권에서도 비교적 낮은 노동비용을 가지고 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게다가 수요에 따른 임기응변에 고용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규분야에서 대규모 생산을 개시하는 경우 이러한 성질을 가진 노동력의 대량확보가 가능한 대도시권이 바람직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도도부현(광역지자체) 별 종업원수의 전국대비 점유율 증감(%)



이러한 1980년대까지의 공업의 지방분산의 움직임과 1990년대 이후의 대도시권 주변에 수렴하는 움직임은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먼저, 1991년까지의 비율 변화를 보면 케이힌(京浜), 케이한신(京阪神), 세토우치(瀬戸内)의 각 현, 후쿠오카(福岡)에서의 비율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태평양벨트 중 토카이(東海) 지방을 제외한 도부현(광역행정구역)의 비율감소와는 다르게 토호쿠, 기타칸토(北關東), 토카이, 큐슈의 광범위한 현에서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1991년 이후는 도호쿠지방의 각 현의 비율 확대가 억제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비율감소에 직면하고 있으나 기타칸토 및 동해지방 등 대도시에 근접한 현에서 비율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특히 토호쿠지방에서는 제 2차 엔고를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생산의 해외이관을 계획하는 등 공장폐쇄 또는 규모축소를 시행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동집약적 특징을 가지는 토호쿠의 공업이 아시아의 공업발전과 경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 같이 주변부에 위치하면서도 큐슈 지방은 토호쿠지방에 비해서는 비교적 견실한 상태이며, 쿠마모토(熊本)·오이타(大分) 두 현을 중심으로 비율이 계속 확대되어 왔다.

이 그림에 관한 2가지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번째로 2008년까지 살펴본 바로는 큐슈 남부는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비율을 확대시켜 왔으나, 세계금융위기 이후 큐슈남부에서는 심각한 고용절감을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토호쿠지방의 제조업도 금융위기의 영향을 입은 것과 함께 2011년 이후에는 대지진의 영향을 받게 되어 분공장경제의 파탄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다.

두번째로 토호쿠지방 각 현에서는 일제히 비율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와테현은 그나마 건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것은 토요타관계의 자동차공업의 진출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으나 이와테현 및 기타카미시, 하나마키시와 같은 지자체의 장기간에 걸친 지역산업진흥의 시도가 공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3. 이와테 모델의 재고

이와테현(縣)은 비교적 일찍 분공장경제 파탄이라는 문제를 만났으나, 그러면서도 자율적 지역산업진흥을 추진해온 지역이다. 지역산업진흥의 방안으로 「이와테 모델」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인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와테 모델」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로서의 기반 가공업 유치 및 육성전략
- ② 창업가 풍토와 창업화 지원전략
- ③ 개인수준에서의 산학관 연계추진과 사회적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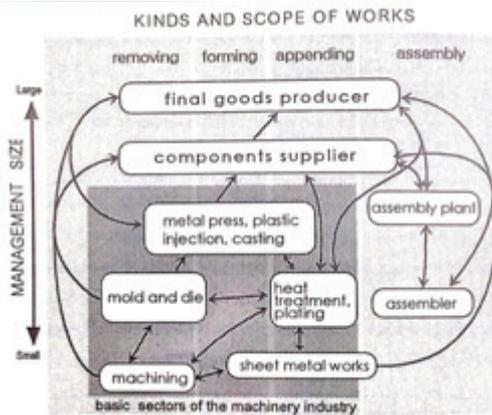
1) 기반적 기술전략

이와테현 내, 기타카미(北上)강 유역지역이 오늘날의 공업활동의 주요한 장(場)이다. 특히 공업핵심은 기타카미(北上)시이며, 시의 공업종업원수는 약 15,000 명 (2008 년)으로, 2차산업 취업비율은 40% 가깝다. 기타카미강 유역지역은 요즘에야 토호쿠 신칸센을 이용하면 도쿄에서 당일치기권이지만, 고속도로와 신칸센이 개통 되기까지는 특급열차로 6~7시간, 자동차로는 약10시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공업화구상 자체는 매우 오래되어, 미국의 테네시강 유역개발을 본보기로 한 북 「키타카미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이 1950년대에 시작되었다. 1960년대 중반에 최초의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공장유치에 들어갔지만, 도쿄에서 멀고, 생산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관련가공산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업 제조업들이 진출을 꺼려해, 1980년대에 들어서도 공단 미분양이 많았다. 이러한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키타카미 강 유역지역의 발전을 이끈 것은 한 행정직원의 ‘역발상’이었다.

그것은 ‘기본적 기술전략’(그림 4 참조)으로 표현되는데, “관련가공업 (Supporting Industry)가 없다면, 관련가공산업을 유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정밀프레스 산업 및 도금 산업, 금형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도쿄·카나가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이와테 출신의 공장주와 접촉하며 이와테 진출을 결심하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적 가공산업의 집적이 진행되자, 이것이 대기업에게는 중요한 외부경제가 되어, 유명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분공장을 진출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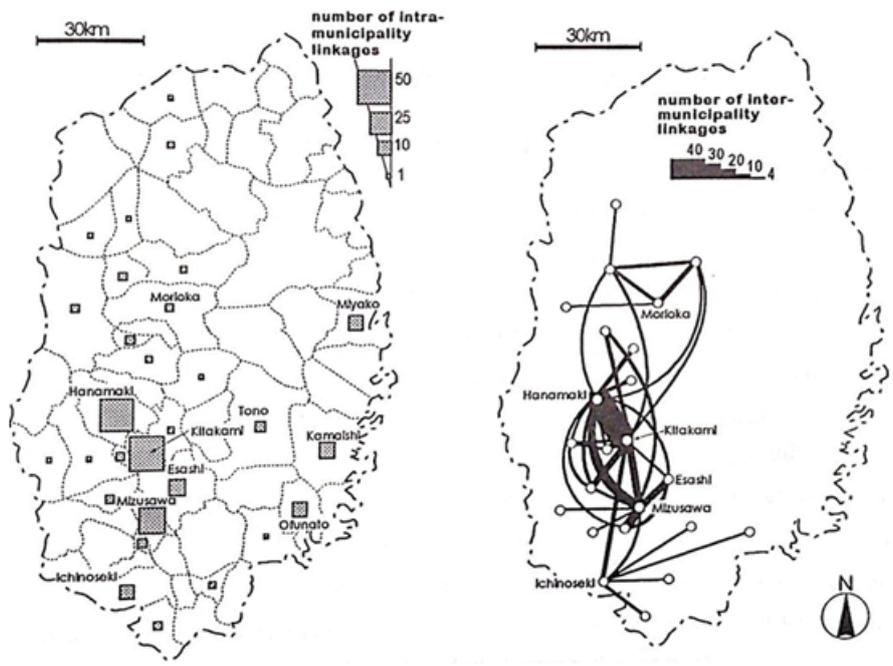
[그림 4] 기계공업의 기반적 가공부문



출처: 小田(2005)

이렇게 하여 1980년대 후반에, 키타카미 시·하나마키(花巻) 시를 중심으로 하는 이와테현 키타카미 지역은, 동북지방 북부 굴지의 산업집적으로 발전했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에는 키타카미 지역을 중심으로 조밀한 연결구조를 확립했다 (그림 5).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분공장경제였음은 의심할 바 없으나, 다른 신흥 분공장경제가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인데 반해, 이와테 현에서는 같은 구조를 남기면서도 복수의 거래채널을 가진 전문적 가공업자가 “그물망 (Semillattice)”이라 표현해야 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림 6). 또한, [그림 7]에서 보여지듯이, 키타카미 지역 전문가공자는, 지방에 진출한 대기업을 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토호쿠 지방 일대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5] 이와테현 기계공업의 기업간 연결(1990년대 초반)



출처: 小田(2005)

[그림 6] 피라미드형 연결구조와 그물망형 연결구조

a) 피라미드형 연결구조



b) 그물망(Semilattice)형 연결구조



출처: 小田(2005)

또한, 1999년에 키타카미 시는 시내에 기반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측정기기· 실험기기의 공동이용, 기술지도, 연계· 교류 촉진, 인재육성 등에 착수했다. 이어 2003년에는 이와테대학 공학부에 금형 기술연구센터가 설치되어 키타카미 시에는 그 분소(Satellite)가 있었다. 또한 이 연구센터를 기반으로 2006년에는 이와테 대학대학원 공학연구과에 금형· 주조공학 전공이 발족했다. 금형기술을 전문으로 배우는 대학원이 일본에서 유일하게 이와테현에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첨단산업기술이라는 의미에서는 본디 후발주자이었던 이와테현은, 분 공장의 진출에 의존하면서도 기반적 가공기술의 육성에 노력하여 “토호쿠지역의 오타(大田: 도쿄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집적지)”라고도 불리며, 단순히 미숙련 노동력에 의존하여 조립만 하는 노동집약적 모듈형(조합형)의 생산체계가 아닌, 발주측의 니즈(Needs)와 발주측 제안을 세밀하게 맞춰가는 인테그랄형 (세밀조정 형식)의 생산체계를 실현했다.

2) 창업가 지원전략

그러나, 분공장경제라는 우려는 1990년대 중반이후, 이와테현에서도 예외없이 심각해졌다. 키타카미시는 큰 고용감소를 피했지만 인접한 하나마키, 현청소재지 모리오카(盛岡), 남쪽의 오슈(奥州)시·이치노세키 시 등에서는 제조업고용의 대폭 저하가 있었다. 그런 가운데 한줄기 희망을 왕성한 기업가정신에서 찾으려 했다.

[그림 8]은 도쿄 오타구에 본사가 있는 ‘알프스 전기’라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전성기의 분공장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많은 전자·전기기기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알프스전기도 중국 등에 생산이관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의 분공장을 축소·폐지를 추진했다.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2008년 이후의 세 시기에 구조조정을 단행, 그 많던 공장 내에서 현재도 조업을 계속하는 것은 7공장 정도이다. 게다가 현존하는 공장도 제품개발형 공장으로 전환하여 고용규모는 대폭으로 축소했다.

사실, 이 기업은 많은 독립창업자를 배출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도쿄 오타구 태생의 기업에는 도제제도적인 분위기로, 기능인육성을 해온 기업이 적지 않은데, 알프스 전기도 이러한 기업 풍토가 남아있는 회사였다. 진출지역에서 고용한 직원에게 기술을 몸에 익히게 하여, 스핀아웃을 장려했다. 특히 이와테현의 구(舊) 모리오카공장은 그런 경향이 강해, 모리오카 공장에서 스핀아웃한 기업만 40개 이상이다. 알프스 전기에서 감원을 할 때마다, 모리오카 공장 직원들이 독립했다고 한다.

알프스 전기 뿐 아니라, 토호쿠 지방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파나소닉이나 리코 같은 대기업에서 중국 등에 생산이관이 진행되어, 고용감소가 거듭되었다. 직원 들에게는 생산이관 시, 해외부임도 선택지에 있었지만, 농가의 장남들인 그들은 연로한 부모와 조상의 논밭을 두고 해외로 부임할 수 없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이직의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지역에서는, 대기업 제조업체에서 기술을 익힌 사람들은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림 8] 알프스 전기의 분공장 분포



출처: 필자 작성

이 점에 착안한 것이 하나마키 시청의 직원이었다. 대기업의 분공장을 이직 한 사람들에게 스핀오프하기 쉬운 조건을 제공하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1994년에는 시(市)가 유희공장을 빌려 ‘하나마키시 창업화지원센터’운동을 시작하고 1996년부터 97년에 걸쳐 공동실험·측정 장비실, 연구실 대여·공장건물 대여 등으로 이루어진 본격적인 시설을 만들었다. 창업화지원센터가 시작해 10년 경과한 시점에서 23개사를 ‘졸업생 기업’이 이곳을 자립했고, 전국 200개의 인큐베이터 시설 중에서도 우수한 실적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현청소재지 모리오카 시에서는 2007년에 ‘모리오카 산학관 협력연구센터 (콜라보 MIU)’가 이와테 대학에 개설되어 이와테 대학의 연구자가 신규창업자의 기술지원을 하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3)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전략

앞에서는 「이와테 모델」의 첫번째 측면 ‘기본적 기술전략’, 두 번째 측면 ‘기업가풍토와 창업화 지원’에 대해 보았다. 「이와테 모델」의 세 번째 측면은 ‘기술관계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다. 특히 이와테 대학에 사무국을 가지는 ‘이와테 네트워크 시스템 (INS)’이 유명하고, 산학관 연계조직이자 이업종 교류조직으로서의 측면도 갖고 있다. INS의 특징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산학관연계조직이 기업단위로 가맹하는 반면, 여기에 가맹은 개인단위라는 점이다. 기업단위로 조직화를 추진하면 조직은 경직화·형식화 하여 신규기업 등에게 문턱 높은 존재가 되어 버린다. 하지만 조직에 가맹할 때 기업에서 한명, 대학에서 한명으로 함으로써 대기업의 말단기술자도 벤처기업의 사장도, 대학교수도 대등한 관계에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INS 라고하는 것은 “맨날 술마시고 떠든다(いつも飲んで騒ぐ[Itsumo Nonde Sawagu])”라는 일본어 표현의 머리글자 조합이라고 한다. 술자리에서의 “무례함”이 마음 터놓는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로는, 만약 정부의 경제산업성(한국의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료가 시찰에 방문하더라도 “무례하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조건이 전제가 되어, 혁신적인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매우 양호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종래와 같은 기업계열에 얽매이지 않는 양질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되어, 기존기업의 신규분야 진출과 신규기업의 스타트업을 지탱해 주게 되었다. 이러한 이와테 방식의 연계모습은 이후 일본각지의 산학관연계, 이업종 교류의 유력한 모델이 되었다.

4. 이와테 모델의 적용한계

「이와테 모델」을 간결히 말하면, 분공장경제에서 유래하는 조건들을 활용하면서도, 분공장 경제에 일방적 영향을 받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지역산업 진흥에 주력하여, 지역정체성을 확립해 온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와테 모델을 어느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일본의 내륙부 나가노(長野)현 등은 상대적으로 이와테현에 비교적 가까운 형태로 추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나가노 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도쿄의 피난공장에 의해 공업화가 진행되어, 또한 전후에도 많은 분공장을 맞아들여 진출기업들로부터 많은 중소기업이 스핀아웃하여 각종 기반적 가공기술을 키우고, 분 공장 경제 하에 있으면서도 중소기업 협동에 기반한 내발적 산업진흥이, 현 레벨- 광역권 레벨- 기초지자체 레벨의 각 스케일에서 이루어져 왔다. 나가노 현 역시 대표적인 기업인 ‘세이코 엡손’과 ‘후지쯔’ 등이 중국으로 생산이관하여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하나, 풍부한 농업

생산에 힘입어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진출 분공장의 성격과 지역풍토에 따라서는, 내발형 지역산업진흥으로 전환은 어렵고, 분공장 경제 파탄의 위험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진출기업이 고도로 장비산업화 하여 생산공정이 노동자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블랙 박스화 된 공장과 모듈형(조합형) 기술에 극도로 치우친 공장에서는, 신규창업을 지원하는 기능자 형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비정규직에 크게 의존하는 현장에서도 동일한 사항을 말할 수 있겠다. 또한 남(南)큐슈 지역처럼 이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도 이직자가 돌아갈 수 있는 농가가 존재하고, 사회적 자본에 힘입어 재취업을 찾기 쉬운 지역에서는 구조조정 에 의한 지역경제 충격은 작다고들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에서 말하면, 도쿄 인근 군마(群馬)현 등 키타칸토(北關東) 지방과 나고야(名古屋)에 가까운 미에(三重)현 등 토카이(東海) 지방의 공업은 첨단 연구 개발 노동자인 반면, 외국인 노동자도 포함한 비정규직의 유으로 지탱되는 부분이 매우 크고, 이러한 사회적 분열이 양호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막아, 대도시에서 가깝기에 얻을 수 있는 “다양성의 이익”을 상쇄하고, 분공장경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부터 20년전, 프랑스의 녹색 경제학자 알랭 리피에츠(Alain Lipietz)는 포디즘 종언 후의 21세기 산업공간이 ①네오 테일러주의(Neo-Taylorism)적인 길 (20세기적 상황을 기초로 하면서도 임금·고용의 불안정화), ②캘리포니아적인 길 (모래시계 모양의 노동시장 하에서 전문기업의 네트워크), ③새턴적인 길 (양극화를 거부하고 산학관 및 노동자의 협조를 중요시)의 세가지 시나리오의 혼성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마디로 「분공장 경제」라 해도, 이 3가지 배합정도에 따라 지역은 다른 모자이크를 그린다는 것이 현재 일본의 상황이라고 필자는 이해하고 있다.

[부기] 귀중한 심포지엄에서 강연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고의 작성에 있어서는 2014년 2월 28일 쿠마모토대학 문학부 종합인간학과에서 개최된 연구회 「공장폐쇄와 지역」에서 했던 논의가 참고가 되었습니다. 카시마 히로시(鹿嶋 洋)씨를 비롯한 쿠마모토 대학의 교수진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小田宏信 (2005) : 『現代日本の機械工業集積』 古今書院.

鹿嶋 洋 (2013) : 新興工業都市における工業労働力の流入と居住特性—三重県亀山市の事例—. 『福島大学商学論集』 第81巻第4号.

鹿嶋 洋 (2014) : 分工場経済地域における主力工場の閉鎖と労働者の流動—鹿児島県出水市の事例—. 『熊本大学文学部論叢』 第105号.

竹内淳彦・小田宏信編 (2014) : 『日本経済地理読本 (第9版)』 東洋経済新報社.

リピエッツ, A. 著, 井上泰夫・若森章孝編訳 (1993) : 『レギュレーション理論の新展開: エコロジーと資本主義の将来』 大村書店.

韓日共同シンポジウム「グローバル経済危機の時代、自律的な地域経済の可能性を問う」

分工場経済から自律的地域産業振興へ

—岩手モデルを再考する—

小田宏信（成蹊大学）

1. フォーディズムと企業内地域間分業、分工場経済

1880年代後半から20世紀初頭にかけて、「離陸」を達成した日本の工業は、第一次世界大戦を経て、大戦間期に重工業化、装置化の基礎を形成し、第二次世界大戦後の高度経済成長期には基礎素材産業・加工組立産業の両面にわたる爆発的な設備投資を伴って著しい工業生産の伸びが認められた。1970年代には一時苦境に立たされるが、1980年代には、名実ともに「工業大国」「技術立国」という世界的地位を獲得することになった。

しかし、1991年を重大な転機にして、日本の製造業は新たな局面を迎えた。東アジア・東南アジア諸国への生産移管が顕著に進行し、それまで相対的にクローズドなシステムであった日本工業の分業システムは、一気に国際的に開かれたシステムへと転じた。その中で、本シンポジウムのキーワードである「分工場経済」の問題が表面化してきた。

まず、分工場経済というものは何だったかというのを確認することから本稿をはじめたい。

分工場経済というのは、大量生産大量消費の経済体制、すなわちフォーディズムの地理的な現れであった。1903年にフォード・モーター・カンパニーを創業したヘンリー・フォードは、1908年になると、流れ作業によって組立てることとなる最初の車種、T型モデルを発表した。T型フォードは、1927年に製造が打ち切られるまでの約20年にわたって1500万台が製造された、世界の産業史に名を残す量産自動車である。フォードは、従来からのアメリカの工業生産方式を特徴付ける互換性生産を基礎としたテーラー主義に流れ作業方式を付加した「フォード生産方式」を確立した。フォードによる生産性の向上は、製品価格の低廉化と、労働者に対しては賃金の上昇とを実現し、大量生産が需要を喚起する20世紀型の経済システムを作り上げた。

「製品価格が低下し、他方で賃金が上昇すれば、需要は拡大し、さらなる大量生産が可能となる」という黄金のサイクルは、それに適した工業立地やその他の地理的編成を伴っていた。ヘンリー・フォードは、製品仕様の規格標準化を徹底すれば、農村の未熟練労働力であっても部品製造に従事できると考え、ビレッジプラントと表現される部品工場をデトロイト郊外に分散させて行った。フォードは「賃金指向」と表現するが、工場にとっては相対的に低賃金で雇い入れることができ、そして、なにより農村の所得水準が豊かになると考えた。そして、農村が豊かになれば、製品市場がもたらされると考えた。

フォードが描いた地理的な生産方式は、理化学興業（リケン）や松下電器（パナソニック）をはじめ、多くの日本企業がとりいれていくことになった。図1は、企業内地域間分業を模式化したものであり、国土の中心部で、管理統括や最終製品を作り、周辺的な地域で部品製造を行うというのが、電気・電子工業はじめ加工組立型工業の多くの立地モデルとなっていった。こうした原理は、日本の場合には、田中角栄が自由民主党の中枢に位置した頃からは国土政策にも取り入れられるようになった。そして、企業の立地行動を国家

が後押しして国民経済・地域経済を成長に導くという仕組みが、20世紀システムの経済運営・国土運営であったのである。

こうした意味で、一国内における分工場経済の破綻とは、20世紀型資本主義の終焉（最後のとどめ）を意味する。そのオルタナティブがいかなるべきものであるかということは、いまだ解決をみていない命題ではあるが、「分工場経済からの脱却の方策」を議論することは、こうした遠大なテーマにアプローチすることでもある。

2. 日本の製造業の趨勢と地域的構成の変化

(1) 日本の製造業の趨勢

主要業種の従業者数の推移(図2)をみることによって、この半世紀の日本工業の趨勢を把握しておく。戦前期より日本工業の主役であった繊維工業は、1960年代初頭には成長が頭打ちになるが、それに変わって、電気・電子機器、一般機器、輸送用機器といった加工組立系の業種が台頭し始める。高度経済成長の半ば、1965年不況の時期には一時的に伸びが鈍化するが、石油危機に見舞われた1973年まで、加工組立系の三業種に通じた雇用拡大が認められた。

第1のターニングポイントになるのは1973年であり、この年を境に、繊維系の業種、金属系の業種で雇用減少が明示的なものになり、他方、一般機器、輸送用機器が横這い状況に転じるなかで、1970年代末期から1980年代を通じて、電気・電子機器工業の他を圧倒する雇用拡大が続いた。言うまでもなく、マイクロエレクトロニクスを背景にした新製品開発が背景にあった。

第2のターニングポイントは、1991年である。バブル崩壊とそれに続く第二次円高によって、それまで国内に向けられていた設備投資が海外に向けられるようになった。とくに、衣服産業では委託生産を含む海外生産を拡大させ、電気・電子機器工業も旺盛な直接投資を伴って生産の海外移管を進めた。その結果として、これらの業種での労働集約的な職種において未曾有の雇用減がもたらされた。この時期、輸送用機器や一般機器でも、海外進出を進めるが、内需向けの生産が国内に維持されたこととや、中間財や資本財の生産において国内の技術集積に依存する必要があることから、長期趨勢的には雇用は横這い状況にある。

雇用という意味では、「日本工業の空洞化」が明らかに進行している。国勢調査ベースで製造業従業者数がピークを迎えるのは1990年の調査時であり、1464万人を数えた。日本の就業者総数に対するシェアは、24%であった。ところが、2010年国勢調査では963万人、16%にまで縮小している。15年の間に、500万人近くの従業者数を減じ、1960年代初頭の水準に後戻りしているのである。請負・派遣労働者として製造業の現場で働く人々が、製造業での就業に計上されないという見方はできるが、事業所サービス業における雇用の伸びは製造業雇用の縮小を相殺するほどのものではない。

(2) 地域的構成とその変化——分工場経済の形成と論理破綻

上記のように、1990年代以降、日本工業はあまりに急激な構造変化を遂げてきたわけであるが、このような構造変化は非常に明瞭な地理的な変化を伴っている。ここでは国内における工業配置上の変化について見ていくことにしたい。

日本の工業は、地域的にみると狭小な国土の中で、いっそう狭小な範囲の中に、偏った空間配置がなされている。その工業配置を特徴づけるのは、東京(京浜)、大阪(阪神)、名古屋(中京)の三大都市圏の工業地

帯とそれを結んで北部九州地方へと延長した線を軸とする地帯（太平洋ベルト）への著しい集積である。第二次世界大戦後、政府によって進められた産業政策は、太平洋沿岸への立地を誘導するものであり、このことは所得倍增計画における太平洋ベルト構想によって決定的なものとなる。こうした地域への川上部門の立地は、付近への川下部門の立地を促し、基礎素材産業の枠に留まらない累積的な工業集積を生み出した。

しかし、石油危機以降、素材型産業に変わって加工組立型産業が伸長し、その中でも労働集約的部門が、労働力供給の面で恵まれ、しかも、比較的賃金水準の低い遠隔県へと進出をはかった。とくに、電気・電子機器工業の立地には、比較的早い時期から、企業内地域間分業の論理が採り入れられ、1960年代から長野県や東北地方、九州地方などに、労働集約的な部分工程を担う分工場が展開した。このような分工場は、農村集落のすみずみにまで入り込んだ局地的生産体系を形成し、農村における農外就業の拡大と生産サイドにおける低賃金労働力確保という一石二鳥の役割を果たした。地域間分業の様態は、当初、大都市圏における開発および最終製品の生産、かたや地方圏における部品の労働集約的生産というシンプルな形態をとったが、次第に、地方工場が製品開発を行ったり、一貫生産化をはかるといような複雑な企業内地域間分業へと発展した。折からの高速道路網の整備は、大都市へのアクセシビリティを向上させ、大都市と地方で工程を分担する企業内地域間分業の構造を成り立たせた。大都市圏での集積と地方圏への分散という両輪でもって、日本の技術立国は成り立ったのであった。

こうした国内における地域間分業の論理が崩壊するのは、1990年代の半ばであり、第二次円高のなか、生産の海外移管と国境を越えた地域間分業の構築が進むなかで、宮城県、福島県、長野県などで、凄まじい勢いで雇用調整が繰り返された。大手メーカーの地方分工場は、少量生産品の製造に特化したり、マザー工場化をはかる、また、非正規雇用や生産請負業への「社内外注」の拡大によって、操業を維持した工場も多いが、その協力工場では廃業や業種転換に追い込まれた企業も少なくない。

電気・電子機器工業を襲った雇用調整の波は2001年頃まで続いたが、2003年前後を境目にして、新たな局面を迎える。薄型テレビの開発に伴って、国内における設備投資が活性化するに至った。前述したように、「国内回帰」は「大都市圏回帰」の様相を呈しており、シャープの亀山工場、堺工場、パナソニックの尼崎工場の建設は言うまでもなくこうした傾向を象徴している。

大都市圏回帰の要因は種々考えられるが、第1にはバブル崩壊後の地価下落によって大都市圏立地のコスト負担が減じられたこと、第2には大消費市場や輸出港湾へのアクセスが再評価されるに至ったことが挙げられる。ことに薄型テレビの生産にみる限り、パネル類の生産は加工組立産業というよりも巨大装置産業である。大阪湾などで減価した不動産たる産業遊休地が得られたということが大きな動因である。第3には、開発現場と生産現場との間の空間的距離を圧縮しようとする新たな企業戦略が働いたためである。製品開発とは生産現場におけるプロセス構築まで含んでいるのであり、常に生産現場の現状をみなければ、生産コストまでも意識した製品開発は行えない。こうした中で、製品サイクルのいっそうの短縮が必要とあれば、従来のような企業内地域間分業の体制では、高い頻度での要員派遣といった企業内における調整費用が決して無視できないものになってくる。しかも、開発にはさまざま関連企業の支援が必要であるので大都市圏が外部経済上、すぐれているのは確かである。第4には、大都市労働市場との結び付きである。かつてのような雇用形態では、労働コスト上、大都市圏よりは地方圏の方がすぐれていた。しかし、非正規雇用が大義名分を有するようになった今日では、大都市圏においてでも比較的低い労働コストでもって雇用が可能で、しかも、需要に応じて臨機応変に雇用を調整することができる。新規分野での大規模生産の開始とあれば、このような性質を持つ労働力の大量確保の可能な大都市圏が望ましいものとなってきたのである。

こうした1980年代までの工業の地方分散の動き、1990年代以降の大都市圏周辺への収斂の動きは統計上

からも裏付けることができる(図3)。

まず、1991年までのシェアの変化に目を向けると、京浜、京阪神、瀬戸内の諸県、福岡でのシェア低下が看取できる。太平洋ベルトのうち東海地方を除く都府県のシェア低下の一方で、東北・北関東・東海・九州の広範な県においてシェア拡大を示していた。しかし、1991年以降は、東北地方の各県がシェア拡大の抑制、もしくは、シェア低下に直面する一方で、北関東や東海地方など大都市に近接した諸県でシェアの大幅な拡大を経験した。主に東北地方において、第二次円高を契機に、多くの企業が生産の海外移管を計ったり、工場閉鎖ないし規模縮小を行ったためである。労働集約型の特徴を有する東北工業がアジアにおける工業発展と競合した結果である。これに対して、同じく周辺部に位置しながらも九州地方は東北地方に比べれば比較的堅調であり、熊本・大分の両県を中心にシェア拡大が続いていった。

本図に関して2点説明を付け加えておきたい。第1に、2008年までで見る限り、九州南部は、半導体や薄型ディスプレイ産業の好調に支えられて、シェアを拡大させていたのであるが、世界金融危機以降には、九州南部では深刻な雇用削減に見舞われるようになった。一方で、東北地方の製造業も金融危機の影響を被るとともに、2011年以降は、大震災の影響を受けていることもあり、分工場経済の破綻は全国的な現象になっている。

第2に、東北地方の各県では軒並みシェアを減じるなかであって、岩手県は、なんとか健闘していたということが指摘できる。これは、トヨタ関係の自動車工場の進出に帰せられる部分もあるが、岩手県や北上市、花巻市といった自治体の長年にわたる地域産業振興の取り組みが功を奏したのだと報告者は考えている。

3. 「岩手モデル」を再考する

岩手県は比較的早い時期から分工場経済の破綻という問題に見舞われ、それでありながら、自律的な地域産業振興を進めてきた県である。地域産業振興の方策に「岩手モデル」というものがあつたとすれば、いかなるものであつたのか整理してみる必要がある。

前もって、「岩手モデル」を簡単に整理すれば、

- (1) サポートインダストリーとしての基盤的加工業の誘致・育成戦略
- (2) 起業家風土と起業化支援戦略
- (3) 「個人レベル」での産学官連携の推進と社会的ネットワーク

となろう。

(1) 基盤的技術戦略

岩手県の中でも北上川の流域地域が今日の工業活動の主要な場である。とくに、その工業核心は北上市であり、同市の工業従業者数は約15000人(2008年)で、第二次産業就業比率は4割近い。北上川流域地域は、今日でこそ、東北新幹線を用いれば東京からの日帰り圏内であるが、高速道路や新幹線の開通までは、特急列車で6～7時間、自動車では約10時間の時間距離が必要であった。工業化の構想自体は非常に古く、合衆国のテネシー川流域開発を手本した北上特定地域総合開発計画が1950年代に始まって以来である。1960年代半ばには最初の工業団地が造成され、1970年代から工場誘致は本格化したが、東京から遠距離に位置するという事実と、製造活動に必要なさまざまな関連加工業が存在しないことから、大手製造業には進出を敬遠されて、1980年代になっても工業団地の売れ残りが目立っていた。そのような立地条件にも関わらず、その後の北上川流域地域の発展を導いたのは、一人の行政マンの「逆転の発想」であった。

その発想は、「基盤的技術戦略」（図4）と表現されているが、「関連加工業（サポーティングインダストリー）が無いのなら、関連加工業を誘致すればよい」と考え、精密プレス業やメッキ業、金型製造業などの分野で、東京・神奈川で工場を営む岩手県出身の工場主に声をかけて岩手県進出を決意させた。そして、このような基盤的加工業の集積が進行すると、それが大手企業にとっての重要な外部経済となって、蒼々たる大手企業の分工場群の進出を促すことになった。

1980年代の後半には、北上市・花巻市を中心とする岩手県北上地域は、東北地方北部屈指の工業集積へと発展していた。報告者の分析によると1990年代の初頭には、北上地域を中心として、密なリンケージ構造が確立していた（図5）。大企業を中心とする分工場経済であったことは疑い無いのであるが、ほかの新興の分工業経済が大手企業の分工場を頂点とするピラミッド構造であったのに対し、岩手県ではそのような構造を残しながらも、複数の取引チャンネルを持つ専門的な加工業者が「セミラティス型」とも言うべきネットワークを築いていた（図6）。また、図7に示されるように、北上地区の専門加工業者は、地元に進出した大企業の需要にこたえるだけでなく、東北地方一円の需要にこたえるようになっていた。

また、その後、1999年には、北上市は市内に基盤技術支援センターを設置し、測定機器・実験機器の共同利用、技術指導、連携・交流促進、人材育成などに着手した。続いて、2003年には、岩手大学工学部に金型技術研究センターが設置され、北上市にはそのサテライトがおかれた。また、この研究センターをベースに、2006年には、岩手大学大学院工学研究科に、金型・鋳造工学専攻が発足した。金型技術を専門に学ぶ大学院が、日本で唯一、岩手県におかれたのである。

上記のように、先端的工業技術という意味では、もともと、後進的であった岩手県は、分工場の進出に依存しながらも、懸命な努力で、基盤的加工技術の育成につとめ、「東北地方の大田区」とも呼ばれるように、単に未熟練労働力に依存して組立のみの労働集約的業務を

行うモジュラー型（組み合わせ型）の生産体系ではなく、発注側のニーズと受注側の提案を擦り合わせていくインテグラル型（擦り合わせ型）の生産体系を実現した。

（2）起業家支援戦略

しかし、分工場経済という懸念は1990年代半ば以降、岩手県においても例外なく深刻化していく。北上市でこそ、大きな雇用減を免れたが、それに隣接する花巻市、県都の盛岡市、県南の奥州市・一関市などでは製造業雇用の大幅な低下が看取された。そのような中であっての一つの希望は、旺盛な起業家精神に求められた。

図8は、東京大田区に本社を有するアルプス電気という電子部品メーカーの全盛期における分工場配置を示したものである。多くの電子・電気機器メーカーと同様、アルプス電気も中国などへの生産移管を進める一方で国内の分工場の縮小・廃止を進めてきた。1990年代の半ば、2000年代初頭、2008年以降の三時期に、リストラクチャリングを進め、これだけあった工場のなかで現在も操業を続けるのは、7工場ほどになっている。しかも、現存する工場も、製品開発型の工場へと転換して、雇用規模は大幅に縮小している。

実は、このアルプス電気という企業は、多くの独立創業者を輩出した企業として知られている。一般に、東京大田区を出自とする企業にはは、徒弟制的な雰囲気、技能者育成を行ってきた企業は少なくないが、アルプス電気もそのような企業風土を残す会社であった。進出先で雇用した従業員にスキルを身につけさせて、スピナウト（独立創業）を奨励していた。とくに、岩手県の旧盛岡工場はそのような傾向が強く、盛岡工場からのスピナウト企業だけで40社以上を数えている。アルプス電気でも雇用削減を行うたびに、盛岡工場従業員の独立がみられたとも言われている。

アルプス電気のみならず、東北地方では1990年代半ばから、パナソニックやリコーといった大手企業で、中国等への生産移管が進められ、度重なる雇用削減が進められてきた。従業者にとっては、生産移管に際し、海外への赴任も選択肢のうちにはありましたが、農家の長男の人たちにとっては、年老いた両親と先祖代々の田畑を置いて海外赴任するわけにもいかなかった。彼らは、結果的に、離職の道を選ばざるを得なかった。一方では、地域にとっては、大手メーカーで技能を身につけた人々は、重要な人的資源とみな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た。

この点に着目したのが、花巻市役所の行政マンであった。大手企業の分工場を離職した人たちが、独立創業しやすい条件を提供しようと考えたのである。かくして、1994年には、市が遊休工場を借り上げて「花巻市起業支援センター」の運営を開始し、1996年から97年にかけて、共同実験・測定機器室、貸研究室・貸工場棟などからなる本格的な施設を作り上げた。起業支援センターがスタートして10年経過した時点で、23社を「卒業生企業」が同センターを巣立っており、全国200あるインキュベータ施設のなかでも、優秀な実績であると判断できる。一方、県都の盛岡市では、2007年に同市による「盛岡市産学官連携研究センター（コラボMIU）」が岩手大学内に開設され、岩手大学の研究者が新規創業者の技術支援を行う体制が構築された。

(3) 社会的ネットワークの形成戦略

上記では「岩手モデル」の第1の側面「基盤的技術戦略」、第2の側面「起業家風土と起業支援」についてみてきたが、「岩手モデル」の第3の側面は、技術関係者における社会的ネットワークの構築である。とくに、岩手大学に事務局をもつ「岩手ネットワークシステム（INS）」が有名で、産学官連携組織であると同時に異業種交流組織としての側面も有している。INSの特徴の一つは、通常の産学官連携組織が企業単位で加盟するのに対して、ここへの加盟は個人単位であるということに求められる。企業単位で組織化を進めたのでは、組織は硬直化・形式化して、新規企業などには敷居の高い存在となってしまう。ところが、組織への加盟を企業の中の一個人、大学の中の一個人とすることで、大企業の末端の技術者も、ベンチャービジネスの社長も、大学教授も、対等な関係で活動に加わ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彼らが表現するには、INSというのは「いつも、（酒を）飲んで、騒いでいる」という日本語の頭文字を組み合わせたものでもあるという。酒席での「無礼講（長幼の節をわきまえないこと）」が、非常にうちと解けた雰囲気醸し出すのである。そして、彼らが言うには、仮に政府の経済産業省の高級官僚が視察に訪れたとしても無礼講だというのである。こうした制度的条件が前提となって、イノベティブな可能性を作り出す非常に良好な社会的ネットワークが形成されてきたのである。そして、こうした社会的ネットワークは、従来のような企業系列に制約されない良質なソーシャル・キャピタルとなって、既存企業の新規分野への参入や、新規企業のスタートアップを支えていくことになった。このような岩手方式の連携の在り方は、その後の日本各地の、産学官連携、異業種交流の有力なモデルとなった。

4. 「岩手モデル」の適用の限界

「岩手モデル」を簡潔に振り返ってみたが、分工場経済に由来する諸条件を活用しながらも、分工場経済に一方的な影響を受けるだけでなく、能動的に地域産業振興に力を注いで、地域アイデンティティを確立してきたというのが岩手モデルの姿であった。

では、岩手モデルを、どこの地域にも適用できるのだろうか。

おそらくは、日本の内陸部の長野県などは、比較的、岩手県に比較的近い形態で推移してきたと言えるであろう。長野県では、第二次世界大戦中から、東京からの疎開工場によって工業化が進み、また戦後も多くの分工場を迎え、進出企業から多くの中小企業がスピニアウトして、各種の基盤的加工技術を育み、分工場経済下でありながらも中小企業の協働に基づく内発的な産業振興が、県レベル、広域圏レベル、市町村レベルの各スケールで行われてきた。長野県もまた、代表的な企業であるセイコーエプソンや富士通などの中国への生産移管によって大きな打撃を受けていることは確かであるが、豊かな農業生産にも支えられて、強靱な体力を維持している。

しかし、進出分工場の性格や地域風土によっては、内発型の地域産業振興に転換するには困難であり、分工場経済の破綻のリスクは非常に大きいと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くに、進出企業が、高度に設備産業されて生産工程が労働者の目からすれば完全にブラックボックス化されている工場や、モジュラー型（組み合わせ型）の技術に極度の偏った工場では、新規起業を支える技能者形成がなされにくい。また、非正規雇用に大きく依存する現場でも同様のことが言えるかも知れない。また、南九州地方のように離職者が大量に発生しても、離職者が帰っていく農家が存在したり、ソーシャル・キャピタルに支えられて再就職先を見つけ出しやすい地域では、リストラクチャリングによる地域経済へのショックは小さいと考えられる。こうした意味では、日本の中で言えば、東京に近い群馬県など北関東地方や名古屋に近い三重県など東海地方の工業は、高度な研究開発労働者の一方で、外国からの労働者も含む非正規雇用の流入に支えられている部分が非常に大きく、このような社会的分断化が良好なソーシャル・キャピタルの形成を阻んで、大都市に近いことから得られる「多様性の利益」をも相殺して、分工場経済の問題をよりいっそう深刻なものにしていると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

今から20年以上前に、フランスの「緑の経済学者」アラン・リピエッツは、フォーディズム終焉後の21世紀の産業空間が、ネオ・テラー主義的道（20世紀的状况を基礎にしながらも賃金・雇用の不安定化）、カリフォルニア的道（砂時計状の労働市場の下での専門企業のネットワーク）、サターンの道（二極化を拒絶し、産学官および労働者の協調を重んずる）という3つのシナリオの混成物になるであろうと予期した。一言で「分工場経済」と言えども、上記3つの配合の度合いは地域によって違ったモザイクを描いているというのが、現在の日本の状況であると、報告者は理解している。

付記] 貴重なシンポジウムでの報告の機会を与えて頂きましたことに、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また、本稿の作成に際しては、2014年2月28日に熊本大学文学部総合人間学科で開催された研究会「工場閉鎖と地域」での議論が参考になりました。鹿嶋 洋氏を始めとする熊本大学の教授陣にお礼申し上げます。

主要参考文献

小田宏信（2004）：『現代日本の機械工業集積』古今書院。

鹿嶋 洋（2013）：新興工業都市における工業労働力の流入と居住特性—三重県亀山市の事例—。『福島大学商学論集』第81巻第4号。

鹿嶋 洋（2014）：分工場経済地域における主力工場の閉鎖と労働者の流動—鹿児島県出水市の事例—。『熊本大学文学部論叢』第105号。

竹内淳彦・小田宏信編（2014）：『日本経済地理読本（第9版）』東洋経済新報社。

リピエッツ, A. 著, 井上泰夫・若森章孝編訳（1993）：『レギュレーション理論の新展開：エコロジーと資本主義の将来』大村書店。

03

[글로벌경제위기의 시대, 자율적 지역경제의 가능성을 묻다]

“한국 분공장경제의 실태와 자립·선순환 방안 - 충남을 대상으로”

“韓国における分工場経済の実体や自立・好循環の方案 -
忠南を対象として”



박 경(Park Kyoung)

목원대학교 교수
牧園大学教授



신 동 호(Shin Dong Ho)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忠南發展研究院 研究委員

한국의 분공장 경제의 실태와 자율·순환 방안

-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

박 경(목원대) · 신동호(충남발전연구원)

2014. 3. 21.



- I. 수도권 집중 현황 및 소득유출
- II. 충남의 외생적 발전과 소득유출
- III. 분공장 경제 논의
- IV. 충남 분공장 경제의 실태
- V. 자율, 순환 경제의 과제

I.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황과 소득유출

1. 수도권 집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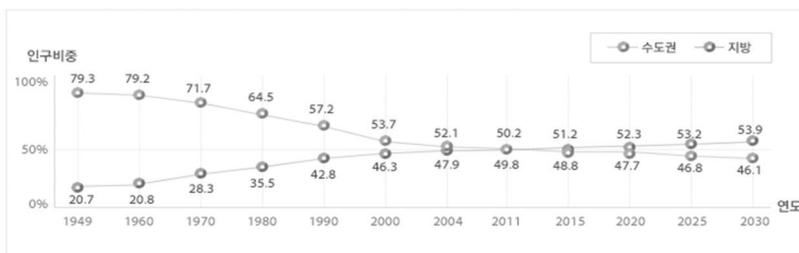
2. 소득유출

1. 수도권 집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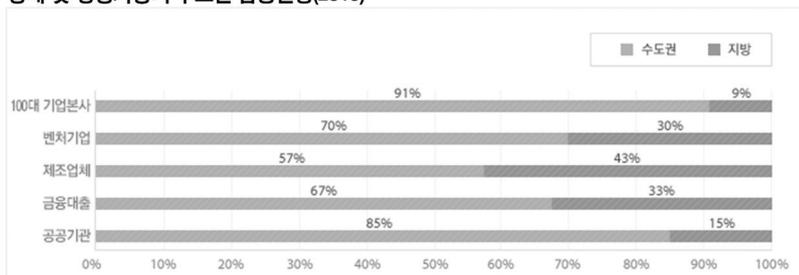
I.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황과 소득유출

수도권 집중 현황

• 수도권 인구 집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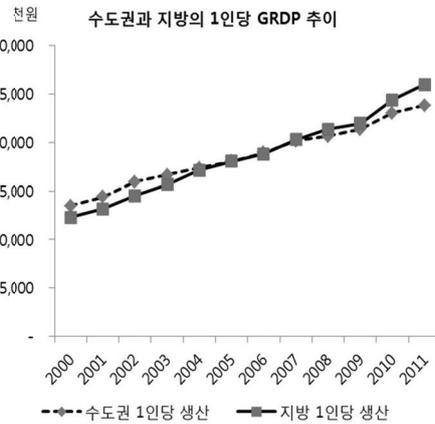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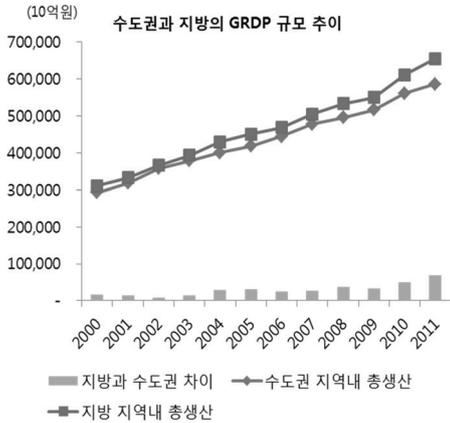


• 경제 및 행정기능의 수도권 집중현황(2013)



그러나 지방의 1인당 GRDP는 수도권을 능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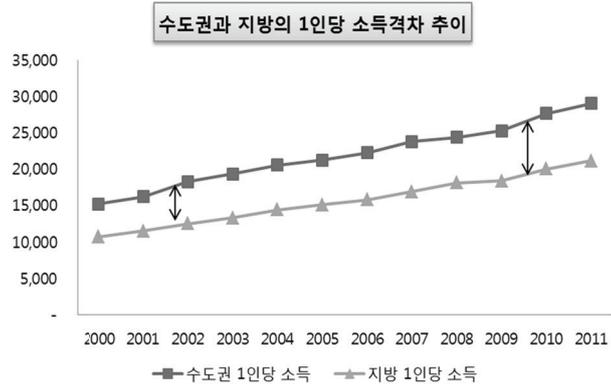
• 지방으로 생산기능의 분산 ➡ 지방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증가



한국의 지역격차 요인 논쟁

수도권 vs 비수도권?
or
지방 공업지역 vs 지방대도시?

1인당 소득수준으로 보면 여전히 수도권이
높고 오히려 그 격차는 최근 더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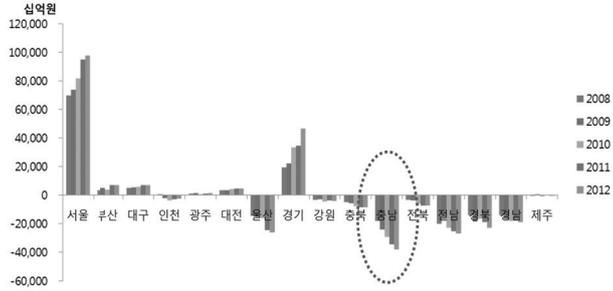


2. 소득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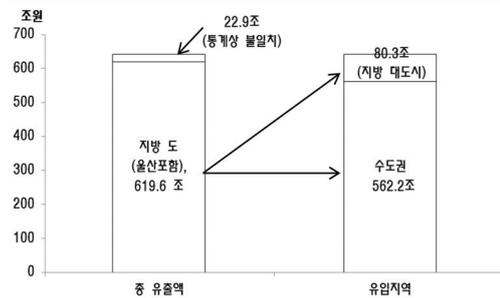
1.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황과 소득유출

지방으로부터 수도권으로 소득의 유출

- 서울, 경기 유입
- 지방 대도시 약간 유입
- 지방 도 지역 유출
- 충남, 유출규모 및 체증속도가 전국 최상위



- 소득의 유입 및 유출규모(5년간)
- 수도권으로 유입 : 562.2조
- 지방으로부터 유출 : 619.6조
- 통계상 불일치 : 22.9조



2. 소득 유출

1.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황과 소득유출

참조 : 소득 유출의 계산

- 지역내 총생산(발생지 기준) - 지역민 총소득(거주지 기준)
- 한국 분배지역소득, 2009년부터 추계
- 일본, 영국 등과 달리 영업잉여(발생지)를 본사 소재지로 전출하여 분배 지역민소득 추계

| | | | | | |
|------------------|--------|---------|------|---------|---------|
| 지역내 총 생산(GRDP) | | | | 중간 소비 | 산출액 |
| 요소소득 | 순생산세 | 고정자본 소모 | | | 지역내 총생산 |
| 지역외로부터의 순수취 본원소득 | 피용자 보수 | 영업잉여 | 순생산세 | 고정자본 소모 | 지역민 소득 |
| | 요소소득 | | | | |

II. 충남의 외생적 발전과 소득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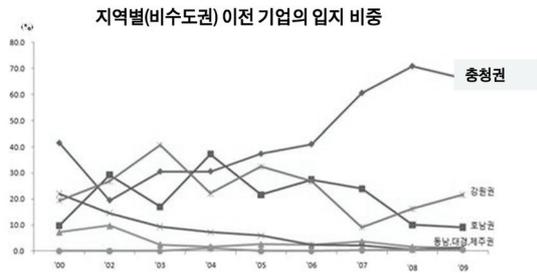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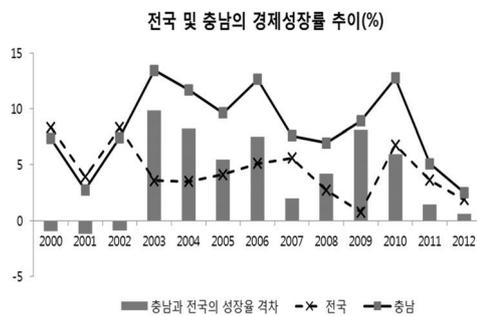
1. 외생적 발전의 대표적 지역으로서 충남
2. 충남의 1인당 생산, 소득, 소비의 역설
3. 충남 내 지역간 불균등 발전

1. 외생적 발전의 대표적 지역으로서 충남

II. 충남의 외생적 발전과 소득유출

외생적 발전의 대표적 지역으로서 충남

-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성장
- 다만 최근 수도권과 충남의 성장률 격차 축소 및 기업유치실적도 축소



1. 외생적 발전의 대표적 지역으로서 충남

II. 충남의 외생적 발전과 소득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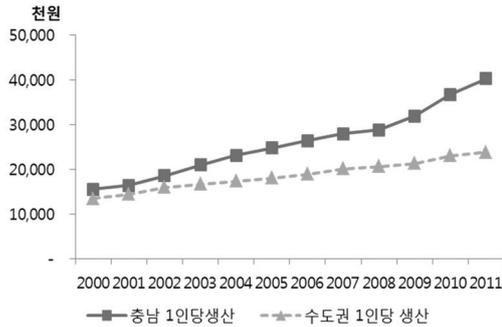
외생적 발전의 대표적 지역으로서 충남

• 충남의 1인당 생산은 수도권을 능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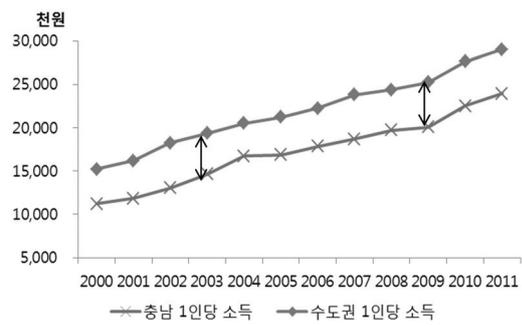


그러나 수도권과 1인당 소득의 격차는 지속

수도권과 충남의 1인당 생산의 격차 추이



수도권과 충남의 1인당 소득의 격차 추이



11

2. 충남의 1인당 생산, 소득, 소비의 역설

II. 충남의 외생적 발전과 소득유출

충남의 1인당 총생산, 소득, 소비의 역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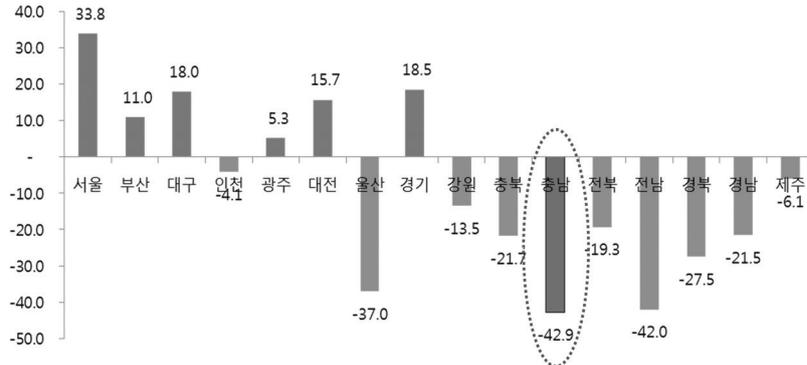
| 순위 | 지역 | 1인당 지역내 총생산 | 지역 | 1인당 지역민 총소득 | 지역 | 1인당 개인소득 | 지역 | 1인당 민간소비 |
|----|----|-------------|----|-------------|----|----------|----|----------|
| 1 | 울산 | 61,884 | 울산 | 39,540 | 울산 | 18,235 | 서울 | 16,927 |
| 2 | 충남 | 40,336 | 서울 | 37,670 | 서울 | 16,964 | 울산 | 13,589 |
| 3 | 전남 | 35,173 | 충남 | 23,922 | 부산 | 14,632 | 경기 | 13,362 |
| 4 | 경북 | 30,824 | 경북 | 23,663 | 대전 | 14,538 | 대전 | 13,143 |
| 5 | 서울 | 28,220 | 경기 | 23,614 | 경기 | 14,051 | 부산 | 13,125 |
| 6 | 경남 | 26,895 | 경남 | 21,372 | 제주 | 14,028 | 인천 | 12,290 |
| 7 | 충북 | 25,177 | 대전 | 21,085 | 대구 | 14,009 | 대구 | 12,199 |
| 8 | 인천 | 21,516 | 전남 | 20,840 | 광주 | 13,657 | 광주 | 12,108 |
| 9 | 전북 | 21,083 | 인천 | 20,430 | 경남 | 13,518 | 경남 | 12,021 |
| 10 | 경기 | 20,686 | 부산 | 19,936 | 인천 | 13,196 | 제주 | 11,962 |
| 11 | 제주 | 20,383 | 제주 | 19,544 | 전북 | 13,102 | 강원 | 11,127 |
| 12 | 강원 | 20,197 | 충북 | 19,461 | 경북 | 12,990 | 경북 | 10,823 |
| 13 | 대전 | 18,211 | 광주 | 17,904 | 충북 | 12,962 | 충남 | 10,745 |
| 14 | 부산 | 17,933 | 대구 | 17,898 | 충남 | 12,762 | 전북 | 10,670 |
| 15 | 광주 | 17,393 | 강원 | 17,512 | 강원 | 12,413 | 충북 | 10,617 |
| 16 | 대구 | 15,118 | 전북 | 16,946 | 전남 | 12,067 | 전남 | 10,389 |

12

생산과 소득의 괴리 이유

- 충남, 전국에서 소득 유출 비율,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지역별 소득의 역외유출비중(201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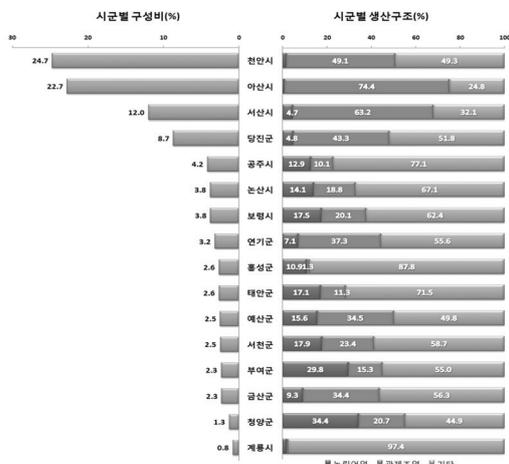


충남 내 지역간 불균등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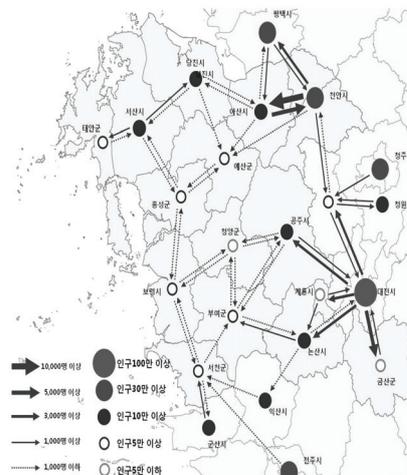
- 도내 북부권 중심으로 산업활동이 집중되어 지역간 경제력 격차 심화

- 충남 북부와 남부간 상호연계 부족
- 충남 북부는 수도권과, 충남 남부는 대전권과 연계

도내 시군별 GRDP 규모, 구성비, 생산구조(2007)



충남 및 주변 시도의 시군간 통근통행량 분포도



Ⅲ. 분공장 경제 논의

“분공장 경제, 외부 통제인가? 지역성장의 핵심동력인가?”

1. 분공장 경제란?
2. 서구의 논의 (Branch plant VS performance plant?)
3. 충남 분공장 논쟁

15

1. 분공장 경제란?

Ⅲ. 분공장 경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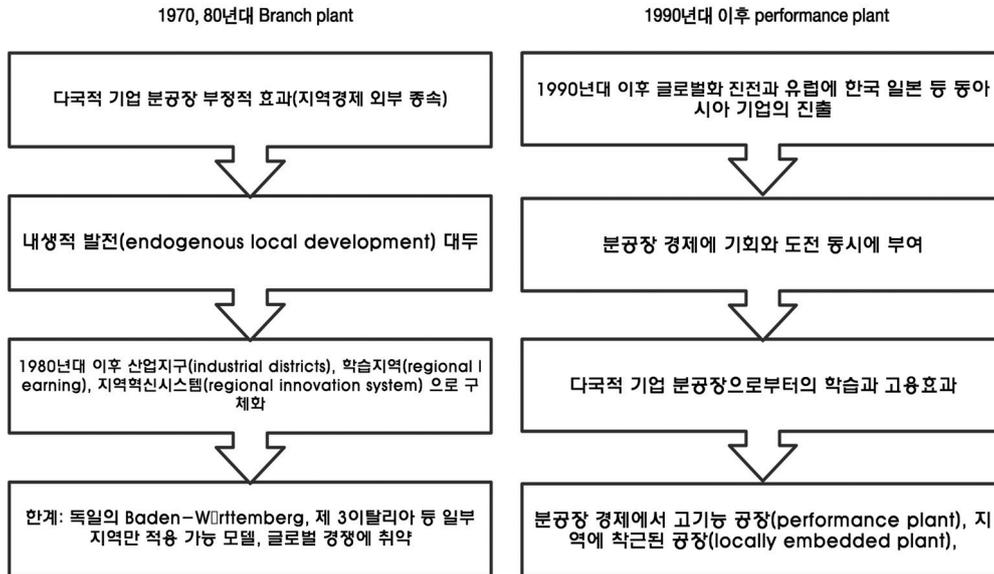
분공장 경제

- 분공장 경제(branch plant economy)
→ 지역경제를 본사가 있는 외부에서 통제하는 경제(Firn, 1976; Watts, 1981)

- 분공장 경제 논쟁
→ 1960~1970년대 주로 캐나다와 영국 등에서 처음 제기
 - 주로 지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분공장의 부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
 - 반면에 일본과 한국은 국내 대기업의 지방 진출 분공장 문제 논의

16

Branch plant VS. performance plant



2000년대 이후 평가

“performance plant는 지역에 착근된 공장(locally embedded plant)인가?”

- 전통적 분공장보다 진일보(고용, spin-off effect, 학습 등)
- 그러나 낮은 지역 재투자율
- 연구개발, 조달 및 판매, 교육훈련 등 제한된 수준에서만 연계
- ‘확장된 섬(extended enclave)’
- 이 연계도 느슨하고 일시적(loose and transient)

* Phelps et al, 2003, CUMBERS, A., 2000

충남 분공장 관련 논쟁

• 천안, 아산량정 지역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4개의 삼성관계사 입지

기여론

- 2004 ~ 2012년 종사자 수 18,013명에서 3만 5,0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
- 천안, 아산시 충남도 내 재정자립도 1, 2위
- 천안, 아산시 인구 1999-2011년간 각각 1.4배, 1.5배 증가(김갑성, 2013),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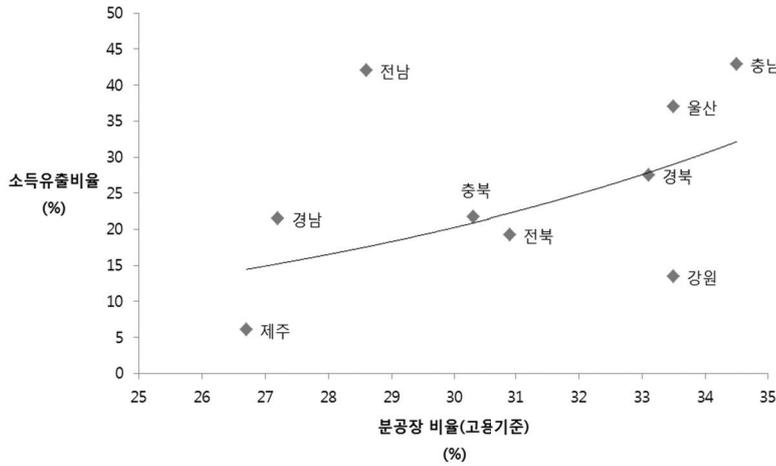
제한된 기여론

- 삼성 본사에서 조달 통제
- 낮은 지역민 고용 비중(홍성호 외, 2012)
- 이윤의 본사 이전
- 제한된 산업연계(이영숙, 허인혜, 2010),
- 특정 업체에 대한 높은 지역경제 의존도 (아산 재정 중 삼성계열 비율 64.2%)

IV. 충남 분공장 경제의 실태

1. 한국 본사 집중 실태와 분공장
2. 충남의 분공장 현황
3. 충남 분공장 경제의 특징
4. 분공장 경제와 소득 유출

분공장 경제와 소득 유출의 상관관계



충남의 분공장 현황

- 충남 도내 공장, 지사, 지소의 본사 위치
 - 주로 수도권에 위치, 대전에는 약 4.1% (사업체 수 기준)
- 특히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 본사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현대 모비스 등
 - 일부 대기업 본사 충남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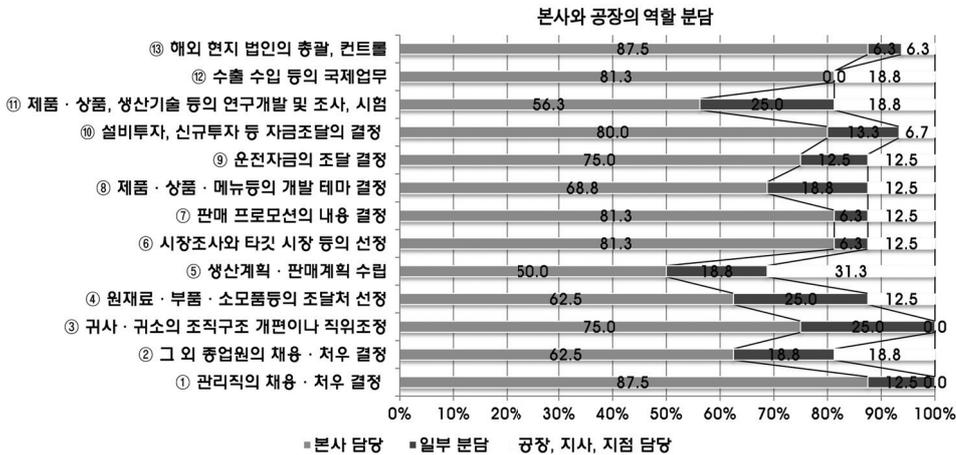
| 구분 | 사업체수 | 비중 | 종사자수 | 비중 |
|-----|-------|-------|---------|-------|
| 충남 | 1,611 | 18.3 | 23,712 | 8.4 |
| 수도권 | 3,222 | 36.7 | 120,952 | 43.1 |
| 서울 | 2,544 | 28.9 | 89,560 | 31.9 |
| 인천 | 100 | 1.1 | 6,276 | 2.2 |
| 경기 | 578 | 6.6 | 25,116 | 8.9 |
| 충청권 | | | | |
| 대전 | 364 | 4.1 | 6,979 | 2.5 |
| 충북 | 85 | 1.0 | 855 | 0.3 |
| 호남권 | 97 | 1.1 | 1,216 | 0.4 |
| 영남권 | 176 | 2.0 | 5,774 | 2.1 |
| 기타 | 13 | 0.1 | 188 | 0.1 |
| 전체 | 8,790 | 100.0 | 280,628 | 100.0 |

2. 충남의 분공장 현황

IV. 충남 분공장 경제의 실태

충남 분공장은 performance plant인가?

- 생산기지 역할만 수행
- 고급관리 기능 본사가 담당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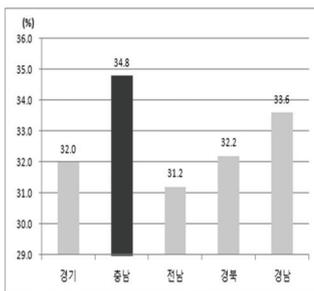
3. 충남 분공장 경제의 특징

IV. 충남 분공장 경제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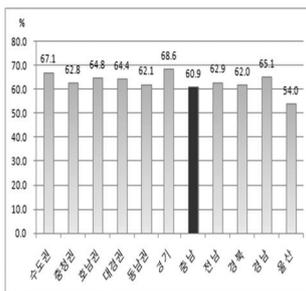
낮은 역내 산업연계, 높은 소득 유출, 낮은 소비유발

- 특히 높은 소득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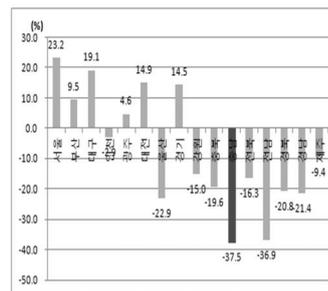
유사 지역별 중간재 조달비중



지역별 지역 내 수요 비중



지역별 소득의 역외 유출비중(2010년 기준)



- 타 지역과 비교(경남): 분공장 비율이 높을 수록 높은 소득유출과 낮은 역내 산업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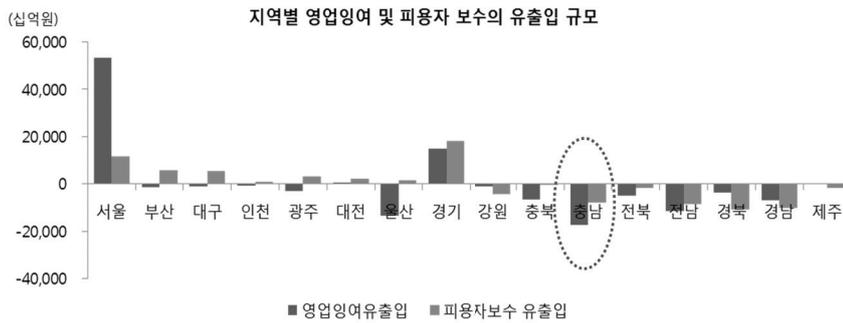
| 구분 | 1인당 지역내총생산* | 1인당 지역민총소득* | 1인당 개인소득* | 1인당 민간소비* | 소득 역외유출비율* | 분공장 비중** | 타 지역 중간재 투입율*** |
|----|-------------|-------------|-----------|-----------|------------|----------|-----------------|
| 충남 | 36,786 | 22,529 | 12,539 | 10,223 | -37.5 | 35.4 | 34.8 |
| 경남 | 25,666 | 19,925 | 12,658 | 11,285 | -21.4 | 27.2 | 33.6 |

*는 2010년 기준 / **는 분공장, 지점, 지소의 비중(전산업, 고용수, 2011년 기준) / ***는 2005년 기준

26

피용자 보수와 영업잉여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유출 요인인가?

- 피용자 보수(통근으로 발생)
 - 대도시 지역은 유입, 지방 도 지역은 유출
 - 외국의 경우 대도시는 유출, 인근 지역은 유입
- 영업잉여(분공장, 지사에서 본사로 이전) ⇒ 한국의 지역간 소득 격차의 주요 요인
 - 수도권(서울, 경기)만 유입
 - 나머지 지역, 지방대도시까지도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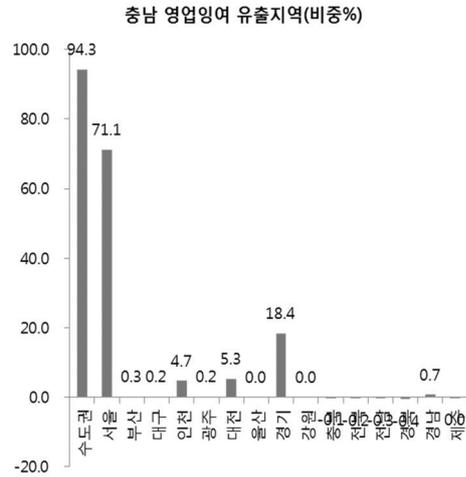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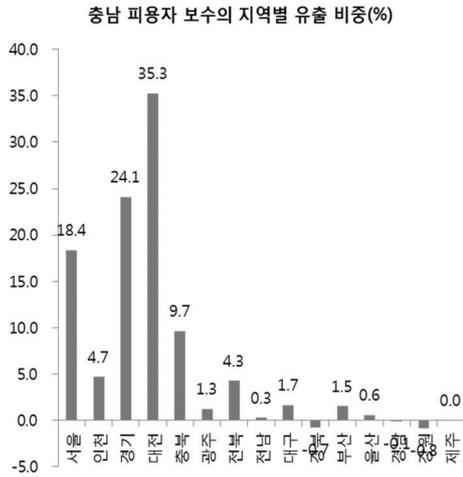
피용자보수·영업잉여 유출 지역, 방향 추계

- 지역간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거래표 작성
 - 피용자보수(통근 O/D DB) 및 산업연관표, 영업잉여(경제총조사 및 총사업체 조사 DB)

| 지역 | 지역 ① | | | | | | | | 지역 ② | | | | | | | | |
|------|--------|-------|-----|-----|---------|----|----|--------|------|-----|------|-----|-----|---------|----|----|--------|
| | 수요측 | 항간수요 | | | 역내 최종수요 | | 수출 | 수입(공제) | 공급측 | 수요측 | 항간수요 | | | 역내 최종수요 | | 수출 | 수입(공제) |
| | | 산업A | 산업B | 산업C | 소비 | 투자 | | | | | 산업A | 산업B | 산업C | 소비 | 투자 | | |
| 지역 ① | 항간투입 | | | | | | | 항간투입 | 산업A | | | | | | | | |
| | | 산업A | | | | | | | 산업B | | | | | | | | |
| | | 산업B | | | | | | | 산업C | | | | | | | | |
| | | 산업C | | | | | | | 조부가치 | | | | | | | | |
| | | 피용자보수 | | | | | | | 영업잉여 | | | | | | | | |
| | | 평가상각 | | | | | | | 평가상각 | | | | | | | | |
| 지역 ② | 항간투입 | | | | | | | 항간투입 | 산업A | | | | | | | | |
| | | 산업A | | | | | | | 산업B | | | | | | | | |
| | | 산업B | | | | | | | 산업C | | | | | | | | |
| | | 산업C | | | | | | | 조부가치 | | | | | | | | |
| | | 피용자보수 | | | | | | | 영업잉여 | | | | | | | | |
| | | 평가상각 | | | | | | | 평가상각 | | | | | | | | |
| | 간접세 | | | | | | | 간접세 | | | | | | | | | |
| | 지역내생산액 | | | | | | | 지역내생산액 | | | | | | | | | |

충남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유출지역

- 피용자 보수 : 서울로 유출된 비중이 18.4%, 경기 24.1%, 대전 35.6%
- 영업잉여 : 총 유출액 중 94.3%가 수도권으로 유출(이중 서울이 약 71.1%), 인근 대전으로는 불과 5.3%



V. 자율, 선순환 경제의 과제

1. 글로벌 경제하 자율, 선순환 경제가 가능한가?
2. 소득 유출 억제와 본사유치 전략
3. 역내 산업연관 확대 방안
4. 시군별 선순환 구조 구축
5. 종합적 결론과 향후 과제

지역발전 전략의 동향

- 1990년대 이후 내생적 발전론에서 도시입지정책으로 전환(urban locational policy)

| 구분 | | 내생발전전략 | 경쟁입지전략 |
|-----|------------|--|------------------------------------|
| 유사성 | | ① 지역을 경제발전의 핵심단위로 인식 ② 지역의 가용자산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 | |
| 차별성 | ③지향 |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내 재분배 | 지역경쟁력 확보를 통한 성장 지향 |
| | ④목표 | 지역 자족적인 경제 구축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외부 자본 유치, 글로벌생산체제에 편입 |
| | ⑤ 전략의 수행주체 | 지역 내부 행위자의 상향식 추진 체계 |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체 다중적 거버넌스 |

(Brenner, 2004)

글로벌 시대 지역의 고민



- 글로벌 경제순환에 편입될 것인가?(도시 입지정책), 독자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인가?

• Hudson, Ray(2011)
 -자본주의적 사회적 관계의 심화는 대안적인 가치 개념과 지역화된 가치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끊임없이 침범
 ⇒ 따라서 지역경제를 더 넓고 지배적인 자본순환으로부터 절연하려는 노력은 한계

• Lee, R.,(2011)
 -인간적,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해 어렵더라도 자본주의적 경제지리(economic geography)를 넘어서야
 ⇒ 지역에 기반을 둔 자율적(autonomous) 순환체계를 구축 필요
 •사회적 공생과 연대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나 지역통화(LETs)

두 가지 지역발전의 유형과 전략

| 전략 | 사례와 내용 |
|-----------------------------------|---|
| I. 세계 자본주의 순환틀 내에서의 전략 | |
| ① 금융자본 주도 가치순환 체제에 편승한 시장경제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기업과 자본의 적극 활용 •그러나 자본에 의한 이윤의 외부 유출 문제 동반 |
| ② 지역화된 발전 경로와 국지적 집적 경제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내 클러스터 촉진, 세계화와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자본의 가치순환을 지역내 착근 |
| ③ 지역적으로 조절된, 개혁주의(reformist) 자본주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정부나 조합의 가입, 지역적 통제 •볼로냐와 제 3이탈리아, 신용협동조합 등 |
| II. 대안적 순환 체계의 구축 | |
| ① 급진적 지역주의(자본주의에 저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주의 사회적 관계를 지역적으로 대체하려는 시도 Harvey(1993)류의 급진주의 정책의 도입(저소득자 주거 등) |
| ②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공생과 연대, 비영리 사회적 경제부문 창출(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
| ③ 지역에 기반한 자율적 경제순환 구조의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통화(LETs) 등 지역적으로 합의되고 실천되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 추동되는 자율적(autonomous) 대안 경제 구축 •포용적 민주적 관계에 의해 추동되는 경제적 참여의 관계와 실천 |

Lee, R.,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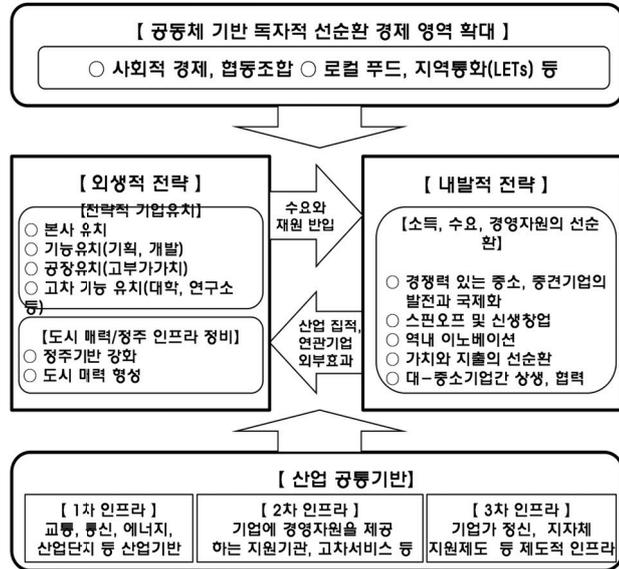
글로벌 시대의 신내생적 발전

- 낙후지역, 여전히 국가 지원과 균형발전 정책 필요
 - 지역 내부 역량 못지 않게 외부 자원도 중요
 - 지역의 이니셔티브(initiative)와 지방과 중앙정부간의 협력체제(governance)
- ※ Lowe et al, 1995, Ray 2003

- 영국의 RDA의 사례
 - 우수 외부자원과 내부로부터의 지역역량을 적절하게 조합
 - 지역발전의 전체 비전과 전략 속에서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적절한 조합을 이루도록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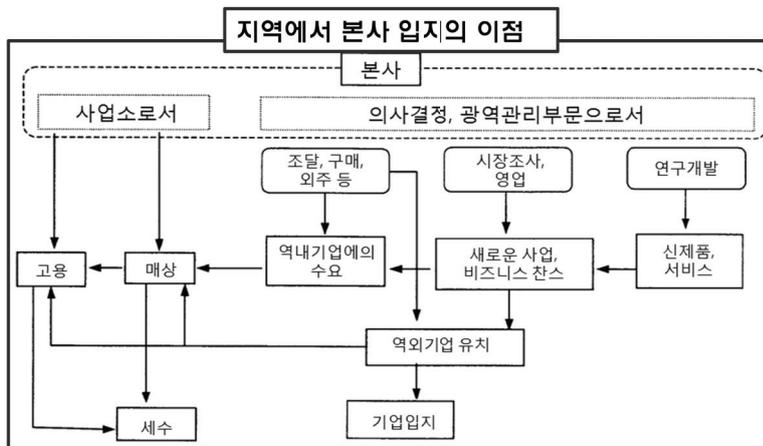
충남의 발전방향

1. 외생적 발전을 하더라도 '전략적 기업유치'
2. 내부 시장과 토착기업의 육성
3. 지속 가능한 혁신 인프라를 정비
4. 공동체에 기반한 독자적 선순환 경제영역 창출과 확대



소득 유출 억제와 본사유치 촉진

- 충남도 소득유출 방지 책 ⇒ 정주를 위한 상생산업단지 대책 추진 중
- 향후 본사유치 촉진 정책으로 확대 개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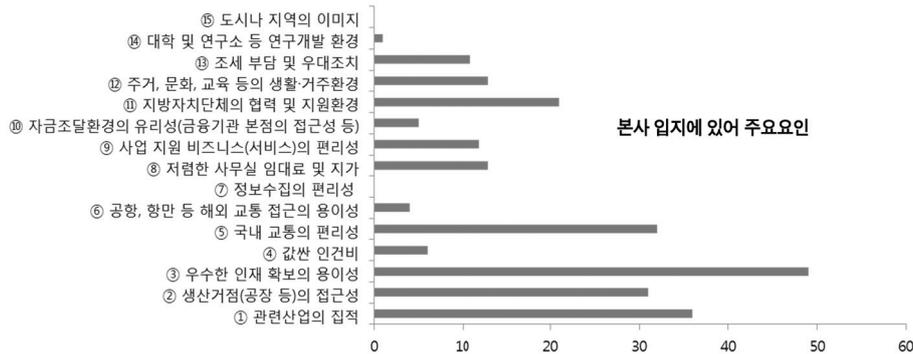
충남 본사 입지의 가능성

• 유리한 점

- 거래기업과의 근접성(현대 자동차, 삼성전자 등)
- 현장 밀착경영 및 빠른 의사결정
- 교통의 편리, 저렴한 임대료 및 지가
- 세종시, 내포신도시 등 중앙부처나 충남도청과의 근접성

• 불리한 점

- 우수한 인재 확보 곤란
- 생활관련 인프라 및 여가시설 부족
- ⇒ 해외접근의 불편은 미미



충남 본사 입지 가능성과 전략

- 산업별 유치가 가능한 업종과 기업을 선별, 전략적 대응 필요

충남 주요 4대 산업별 현황과 본사 입지 가능성

| 산업 | 현황 | 가능성 | 유치 전략 |
|-------|--|--|---|
| 철강 | • 대부분 수도권에 본사 • 충남은 단순 생산공장 | • 본사 유치 가능성 낮음 | • 본사 기능의 분권화, 이양 |
| 석유화학 | • S사는 울산 본사, H사는 충남 본사 • 실제 주요 의사결정은 서울 사무소에서 | • 안전관리 상 현장밀착 의사결정 중요 • 일부 본사 유치 가능 | • 본사 기능의 분권화, 이양 및 일부 업체 본사 유치 |
| 자동차 | • 현대 자동차 본사는 서울 소재 • 일부 현대 계열회사(현대 다이모스, 현대 파워텍 등) 및 1차 협력업체 충남 본사소재 • 충남은 제2공장으로 대부분 1차 협력업체 본사, 수도권 내지 울산 소재 | • 현대 자동차 본사 유치 가능성 낮음 • 일부 1차 부품업체 본사 유치 가능 | • 완성차 업체 본사 기능 분권화 및 이양 • 충남에 주력공장 둔 수도권 부품업체 중심으로 본사 유치 • 기존 충남에 본사를 둔 1차 부품업체의 육성 및 세계화 |
| 디스플레이 | • 삼성 디스플레이 본사 충남 소재 • 다수 관련 업체 본사 충남 소재 비율 고(高) • 삼성전자가 조달 총괄 관리 | • 삼성 디스플레이 본사 입지로 인한 관련 기업 본사 집적효과 고(高) | • 수도권에 본사를 둔 협력 기업 대상으로 본사유치 • 기존 충남에 본사를 둔 장비업체의 육성과 스펀음, 세계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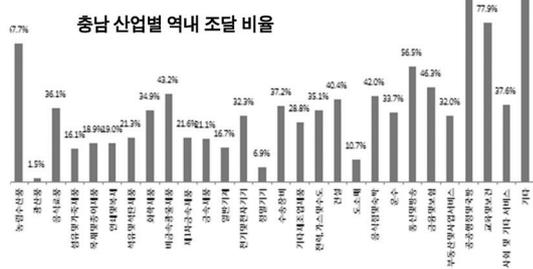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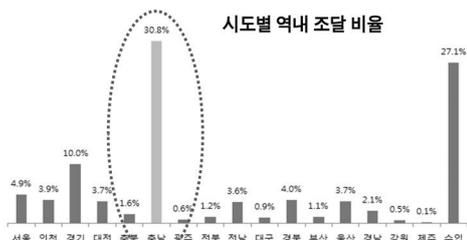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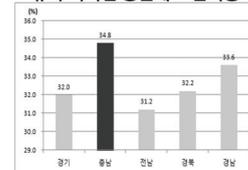
본사 유치 지원책

- 인센티브 제공 : 중앙정부의 기존 제도 넘어선 지원체계 구축 요
 - 현행 입지 보조금, 기업도시 제도로는 한계
 - 대기업 본사 이전 특별법 제정
- 공간전략
 - 천안아산 KTX 역사 인근에 국제 비즈니스 및 R&D 센터 특구를 지정
 - 대기업 본사가 입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오피스 거점과 생활환경 인프라 마련
-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충남 지역 중간재 및 서비스의 지역 내 조달 실태

- 중간재화 및 서비스의 역내 조달 비율 30.8%
 - 역외 조달 비율 42.1%, 수입 27.1%
- 수도권으로부터의 조달 비율 18.8%
 - 역외조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 경기도(10.0%)
- 산업별로 조달비율 상이
 - 1차 산업인 농림수산물, 공공서비스는 역내 조달 비율이 높은 반면, 정밀기기, 도소매 등은 낮음

유사 지역별 중간재 조달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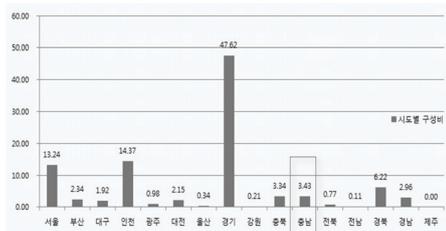


자료 : 지역산업연관표(2005년 기준, 한국은행), 신동호(2012)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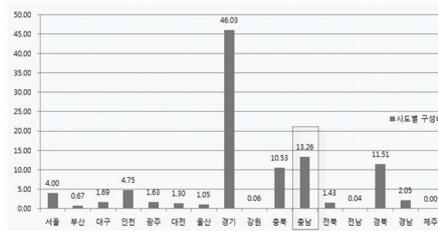
충남 디스플레이산업 조달실태 및 과제

- 충남 점유율 : 국내 디스플레이 시장의 약 50%, 세계 시장의 약 20%(2006년)
- 디스플레이 관련 대기업 입지 : 삼성 전자, 삼성 SDI 등
- 부품조달실태 : 삼성과 하청관계인 대기업(타 지역)이 독점
 - 삼성전자, 삼성 SDI의 경우, 역내(충남) 부품소재의 조달비중은 불과 15% 수준

디스플레이 연관 산업 사업체의 시도별 분포



디스플레이 연관 산업 종사자의 시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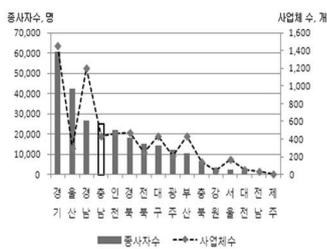


- 과제 • 부품소재, 장비 공정 전반에 걸쳐 취약한 가치사슬을 보완할 수 있는 기업 유치 요
-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대기업 중심의 수직 계열화 구조 탈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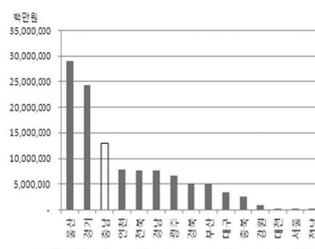
충남 자동차 산업 조달실태 및 과제

- ('09년 기준) 충남 자동차 산업의 종사자 비중(전국 4위), 출하액 비중(전국 3위)

시도별 자동차 산업의 종사자수, 사업체수 순위



시도별 자동차 산업의 출하액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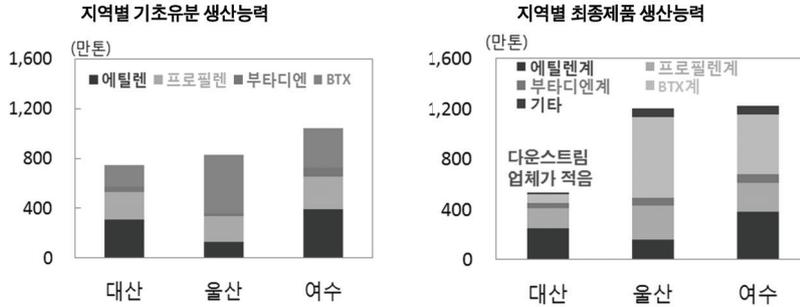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1인 이상), 2009.

- 1차 벤더 업체들의 주 납입지역은 충남(59.9%) > 수도권 > 해외 순
- 충남TP의 설문조사 결과(충남 디스플레이와 자동차부품산업 계층 분석 및 협력체계 개선 방안 연구, 2011)
 - 지역내 조달이 낮은 이유 1순위: '기존 거래처의 타 지역 소재'
 - 충남에서의 사업동기 중 1,2순위: 각각 '교통/물류의 편리', '수도권과의 접근성 양호'
- 과제 • 전문화된 입지이점을 살려 협력업체의 지역 내 입지 유도
- • 1차, 2차, 3차 벤더 기업 대상 판로 확대정책 필요

충남 석유화학 산업 조달실태 및 과제

- 기초 유분을 추출하는 대기업 중심의 업스트림 업체 다수 소재
- 반면, 중간원료와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다운스트림 업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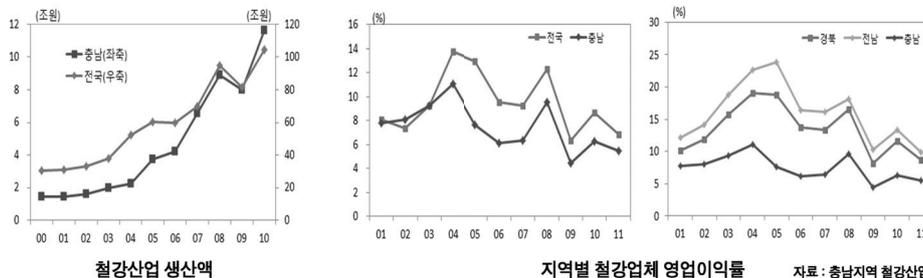


자료 : 충남지역 석유화학산업의 환경변화와 정책과제(한국은행, 2013)에서 재인용

- 충남 및 경기지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부문에서의 석유화학 신소재 수요 증가추세
- 과제 • 지역 내 기초유분의 생산능력을 활용, 다운스트림 업체의 집적 유도

충남 철강 산업 조달실태 및 과제

- 충남 철강산업은 생산, 고용, 수출 등 양적 측면에서 성장 중
 - 생산수준 : 경북, 전남 다음 순
- 반면, 영업이익률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수익성 악화 요인 중 하나는 낮은 원재료 자급도
 - 철광석과 원료탄은 수입에 의존, 철스크랩 또한 국내 자급비율이 타 지역 보다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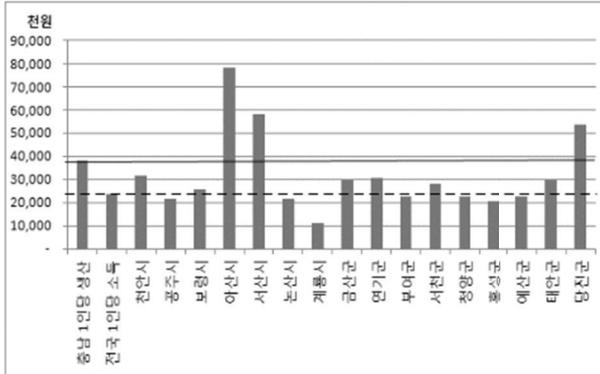


- 과제 • 충남이 가진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 자원시장 정보 수집 및 협력 유도
- • 국내 철스크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충남 지역 내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 지역 산업단지의 폐스크랩을 지역 내 철강업체로 수입

시군별 차별화된 선순환 전략 수립

- 충남 북부의 대기업 공장이 입지한 아산, 서산, 당진 등은 소득 유출 억제와 분공장 탈피가 중요 과제
- 충남 남부의 공주, 논산, 청양 등 1인당 생산이 전국 1인당 평균소득도 미달 지역
⇒ 소득 유출 문제 보다는 지역의 산업 성장이 과제
- 충남 북부와 남부의 연계와 선순환 구조 구축도 과제

충남의 시군별 1인당 생산과 소득(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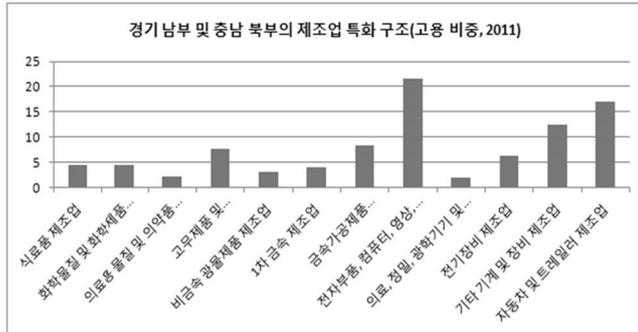
지역의 범위, 특성별 선순환의 과제

| 지역 구분 | 순환의 특징 | 지역경제 현황 | 순환의 과제 |
|-------------|---|---|--|
| 농림어업 지역 | · 1차산품을 중심으로한 자연 생태 순환 · 마을, 권역 단위의 풀뿌리 순환 | · 농림어업의 쇠퇴 · 인구감소 · 지역내 순환규모의 축소, 쇠퇴 | · 생태, 자연순환의 회복 · 농가경영을 중심으로 한 지역농업순환 체계 구축, 6차산업화 · 비시장적, 사회경제적 대안 순환체계 구축(로컬 푸드, 지역협동조합, 지역 화폐 등 사회적 경제 부문 확대) |
| 지방공업 지역 | · 하청조달을 통한 기업간 가치 순환 · 공업과 서비스업간의 순환 | · 재래형 공업의 쇠퇴지역: 관광 등 대체산업 발굴, 쇠퇴산업 구조조정 · 성숙산업지역: 하이테크화 및 성숙산업구조조정 · 산업발전지역: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대사업지원 서비스 강화 | · 분공장 경제의 탈피(소득 유출 억제), 재투자력 확보 · 역내 기업간 조달연계 강화 · 클러스터 형성과 이노베이션 |
| 지방대도시 및 광역권 | · 지방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중소도시 및 농어업 지역과의 교류 · 전국 수준의 지역순환과 협의의 생활권과의 매개 | · 수도권 피라미드 도시체계 하에서 지방대도시 지점경제와 세계화 과정에서 광역권내 순환 고리의 약화 · 광역권 내 도시와 농촌, 공업 지역간 불균형 발전 | · 광역권내 1차, 2차, 3차 산업 간 연계 강화 · 지방중추도시의 지점경제 탈피, 고차 및 정보서비스, 본사입지 등 촉진 · 글로벌 경쟁력 지닌 산업 육성 및 산업 집적 촉진 · 광역내 지역간 불균형 시정 통한 지역 간, 지역내 순환구조 효율화와 재구축 |

수도권 남부와 충남 북부의 상생발전

• 충남 북부 및 경기 남부 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동력지역

-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 중심의 단일 공업지대
 - 충남 북부지역의 중간재 수요, 경기 남부지역과 높은 연관관계
 - 현재는 경기 남부 지역이 모공장, 충남 북부 지역이 분공장 형태로 분업구조



⇒ 향후 두 지역의 양호한 지리적 입지조건과 산업연계성이 높은 점을 활용하여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필요

| 구분 | 인구 (2012년) | 면적 (2012년) | GRDP (2010년) | '00-10년 성장률 | |
|-------------|---------------|---------------|-----------------|-------------|-------|
| | | | | 전국 | 양지역 |
| 경기남부 및 충남북부 | 232만 | 4.314km | 99.5조원 | 6.9% | 11.8% |
| (전국 대비) | 4.6% | 4.3% | 8.5% | | |

대안적 경제순환 체계 육성

- 지역에 기반을 둔 자율적(autonomous) 대안 순환체계 확대
 -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지역통화(LETs), 협동조합(cooperatives), 로컬 푸드 등
- 선순환 관점에서 종합화· 체계화

현행 충남도 실시 정책

| 정책 분야 | 주요 항목 | 세부 정책 |
|-------------------------|-------------------|---|
|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 충남형 사회적 경제 5개년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 2010년 17개에서 2014년까지 200개 지정, 육성, • 충능형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제정 • 사회적경제 TF 신설, 사회적경제지원 센터 개소 |
| 로컬푸드 | 지역순환 농식품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기본계획 수립 • 친환경 무상급식과 공급급식의 확대 • 지역순환 농식품 체계 구축 |
| 6차 산업화 | 1차*2차*3차 산업 융복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 활성화 • 지역특화품목의 6차 산업화 • 도농교류의 확대 |

결론 : 충남의 자율적, 지속적 발전...

- 충남 자율, 선순환 경제 - 배부른 투정인가?
 - 글로벌 시기에 한국기업 및 세계적 다국적 제조업체의 입지 대상이 된 충남
 - 생산된 부를 역내화하겠다는 것은 세계화의 시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입장에서 배부른 투정
- 그러나 한국 경제의 저성장파 수도권 기업 이전 한계
 - 2010년 이후 수도권 기업의 이전이 급감, 충남 성장률도 저하
 - 충남의 외생적 성장 모델 위기
- 지역은 세계, 국민경제 순환의 종속변수인가 독립변수인가?
 - 인간적, 주체적 지역 발전의 조건으로서 선순환, 자율 경제
 - 지역(region)이란 인간발달의 장(場), 공동생활공간
 - 자연적, 경제적, 문화적 3요소의 복합체로서의 지역
 -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재생하여 지역의 독자성을 유지, 창출(宮本憲一 외, 1993)

참고문헌

- 김갑성 (2013),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융복합단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13: 33-41
- 이영숙, 허인혜(2010), 산업클러스터 형성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연구- 아산, 탕정 LCD 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정책학 회보, V 19, N 1:245~397
- 박 경 (2011), '우리나라 지역간 소득의 역외유출현상(충남을 중심으로)', 『계간 공간과 사회』, 한국공간환경학회, 21(4).
- 신동호 외 (2012), 『충청남도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안기돈·박향수 (2013), 『충남 북부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의 상생발전 방안』,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홍성호 외 (2011), 『충남 유치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분석과 기업유치정책의 개선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財)九州地域産業活性化センター (2010), 『九州本社R&D機能拡充方策調査報告書』.
- 宮本憲一, 横田茂, 中村剛治郎 編 (1990), 『地域經濟學』, 有斐閣(동한역, 지역경제학, 전남대학출판부, 2004).
- 中村剛治郎, (2004), 『地域政治經濟學』, 有斐閣.
- Brenner, Neil (2004), New State Spaces: Urban Governance and the Rescaling of Stateho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UMBERS, A., (2000) Globalization,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Branch Plant Region: The Case of the Aberdeen Oil Complex, Regional Studies, Vol. 34.4 :371- 382
- Hudson, Ray (2011), "Spatial circuits of value", in Pike, A., Rodriguez-Pose, A., and Tomaney, J. eds., Handbook of Local and Regional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 Jung Won Sonn & Dongheon Lee (2012), 'Revisiting the branch plant syndrome: Review of literatur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in Western advanced economi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16(3): 243-259.
- Lee, R., (2011), 'Within and out with/material and political?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spatialities of economic geographies', Pike, A., Rodriguez-Pose, A., and Tomaney, J. (eds.), Handbook of Local and Regional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333-343.
- Phelps, N.A., MacKinnon, D., Stone, I, and Braidford, P. (2003), 'Embedding the multinationals? Institutions and the development of overseas manufacturing affiliates in Wales and North East England', Regional Studies 37: 27-40.
- Pike, A. (1998), 'Making Performance Plants from Branch Plants? In-situ Restructuring in the Automobile Industry in UK Reg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30: 881-900.

